

발간등록번호

11-1540000-000378-10

2010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이용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이하 시행내용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시행내용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관한 지원사업 등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 구조조정사업의 시행 내용을 담아 '9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시행내용 보고서’는 ▲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제도 개혁 ▲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5장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및 복지시책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10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예산편성 규모 및 방향을 분석·평가하였습니다. 2장, 3장, 4장, 5장은 '10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배경, 시행내용 및 성과, 향후계획을 담았습니다.

'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고 4개의 부속서를 통하여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으로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내용보고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으로 인한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림수산업분야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 | |
|-------------------------------|----|
| 제1절 2010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 3 |
| 1. 농수산식품 부문 | 3 |
| 2. 임업 부문 | 6 |
| 제2절 2010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 9 |
| 1. 농업·농촌 부문 | 9 |
| 2. 임업 부문 | 11 |
| 3. 수산업·어촌 부문 | 13 |
| 제3절 2010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4 |
| 1. 농수산식품 부문 | 14 |
| 2. 임업 부문 | 17 |

제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 | |
|-----------------------------|----|
| 제1절 협동조합 개혁 | 23 |
| 1. 농협개혁 | 23 |
| 2. 산림조합 개혁 | 26 |
| 3.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 29 |
|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 32 |
| 1. 농산물 유통 개혁 | 32 |
| 가. 수급 및 가격인정체계 구축 | 32 |
|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33 |
| 다.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 35 |
| 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36 |
| 마.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38 |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 |
|------------------------------|----|
| 2. 임산물 유통 개선 | 41 |
| 3. 수산물 유통 개선 | 45 |
|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 47 |
| 1. 농수산식품 부문 | 47 |
| 2. 산림 부문 | 50 |
| 제1절 경쟁력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 55 |
| 1. 농지은행제도 | 55 |
|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 59 |
|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61 |
| 4. 농업종합자금제도 개선 | 64 |
| 5. 농업핵심인력 육성 | 66 |
|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66 |
| 나. 농어업법인 활성화 | 69 |
|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71 |
| 라. 경영컨설팅 지원 | 74 |
| 마. 농업벤처 육성 | 76 |
| 6.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 | 77 |
| 가. 전문임업인 육성 | 77 |
| 나. 기능인 영림단 육성 | 79 |
| 7. 어업인력 육성 | 80 |
| 제2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83 |
| 1. 농업생산기반 확충 | 83 |
| 가. 대규모 경지정리 | 83 |
| 나. 밭기반 정비 | 84 |
| 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 86 |
| 라. 수리시설 개보수 | 87 |
| 마.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 | 88 |

목 차

| | |
|---|-----|
| 바. 농촌우수 개발 | 90 |
|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 | 92 |
| 2. 농업의 기계화 | 95 |
| 3. 농업시설의 현대화 | 97 |
|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97 |
|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98 |
| 다. 축산시설 현대화 | 100 |
|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101 |
|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103 |
| 1. 식품산업의 육성 | 103 |
|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106 |
| 3. 종자산업의 육성 | 109 |
| 4. 종축산업의 육성 | 111 |
| 5.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115 |
|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118 |
| 1.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118 |
| 2. 농업 정보화 촉진 | 120 |
| 3. 임업 정보화 촉진 | 124 |
| 4. 수산 정보화 촉진 | 125 |
| 제5절 농림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 127 |
| 1. 농식품 수출 확대 | 127 |
| 2. 수산물 수출 확대 | 130 |
| 3. 농림분야 수입관리 대책 | 132 |
|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 132 |
| 나. 관련법상의 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 133 |
| 4. 수산분야 수입관리 대책 | 134 |
| 제6절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 136 |
|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 136 |

| | |
|-------------------------------|-----|
|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136 |
| 나. 친환경생산단지 확대 | 139 |
|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141 |
|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 143 |
| 2. 농업환경오염 경감 | 146 |
|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146 |
| 나. 친환경 비료 지원 | 147 |
|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149 |
|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 151 |
| 1.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 151 |
| 가. 도·농 교류 활성화 | 151 |
| 나. 향토자원 발굴 등 농어촌지역의 산업화 추진 | 154 |
| 다. 농공단지 조성 | 156 |
| 라.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158 |
| 2. 농어업의 경영안정화 | 161 |
| 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161 |
|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163 |
| 다. 농지제도 개선 | 165 |
| 라.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166 |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 | |
|--------------------------|-----|
| 제1절 쌀 산업 | 171 |
| 1. 제도 개선 | 171 |
| 2. 효율적인 수급조절 | 173 |
| 3. 민간유통기능 강화 | 174 |
| 4.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175 |
| 5. 쌀 소비촉진 | 177 |
| 제2절 채소산업 | 179 |
| 1. 노지채소 | 179 |
| 2. 시설채소 | 180 |

목 차

| | | | |
|-------------------------|-----|-------------------------|-----|
| 제3절 과수·화훼산업 | 182 |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 253 |
| 1. 과수산업 | 182 |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 |
| 2. 화훼산업 | 184 | 관리강화 | 253 |
| 제4절 축산업 | 187 | 나. 임업 기계화 촉진 | 256 |
| 1. 한우산업 | 187 |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 |
| 2. 낙농산업 | 189 | 안정적 확보 | 260 |
| 3. 양돈산업 | 193 | 라.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 |
| 4. 양계산업 | 194 | 장기성 보완 | 262 |
|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196 | 마. 국산재 이용 촉진 | 264 |
|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198 |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267 |
|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200 |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 | |
| 8. 가축질병 방역 강화 | 202 | 문화공간 확충 | 268 |
| 9.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205 |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 |
| 10. 쇠고기 이력제 추진 | 208 | 거점지역으로 육성 | 268 |
| 11.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210 |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 |
| 제5절 임업 | 213 | 휴양만족도 증진 | 270 |
| 1.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 213 | 다.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 |
| 가. 산림용 우량 모목 생산을 위한 | | 산림문화 진흥 | 272 |
| 기반정비 | 213 |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 |
|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 217 | 기반 구축 | 274 |
| 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 | 220 | 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279 |
| 라.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 | 바.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 282 |
| 가치증진 | 222 | 사. 가로수 조성·관리 | 284 |
|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 | 아. 학교숲 조성 | 288 |
| 강화 | 228 |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290 |
|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228 | 가.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 290 |
|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230 | 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292 |
|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 | 다. 해외조림 확대 | 293 |
| 및 제도개선 | 235 | 제6절 수산업 | 295 |
|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 | 1. 연근해어업 | 295 |
| 관리강화 | 238 | 2. 해면양식어업 | 299 |
| 마. 산림의 녹색담 기능 제고 | 241 | 3. 내수면어업 | 300 |
|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244 | 4. 원양어업 | 303 |
|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 245 | | |

목 차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 | |
|-------------------------------|-----|
|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307 |
| 1. 일반 농산어촌 개발 | 307 |
|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312 |
| 3.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 313 |
|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 314 |
|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 314 |
|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 315 |
|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 316 |
|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317 |
| 제2절 교육여건 개선 | 320 |
|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 320 |
|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321 |
|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23 |
|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 325 |
| 1.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325 |
|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327 |
|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327 |
|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328 |
| 다. 공중보건역사 농어촌 우선배치 | 329 |
| 제4절 농어업인 연금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 331 |
| 1. 농어업인 연금 지원 | 331 |
|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33 |
| 3.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 334 |

표 목 차

제1장

| | |
|-----------------------------------|----|
| 〈표 1-1〉 2010년 농업·농촌 투융자 예산 및 집행실적 | 9 |
| 〈표 1-2〉 2010년 임업부문 투융자 실적 | 12 |
| 〈표 1-3〉 농수산식품분야 부문별 재정배분 규모 | 17 |
| 〈표 1-4〉 임업분야 회계별 투융자 내역 | 18 |
| 〈표 1-5〉 임업분야 부문별 투융자 내역 | 18 |

제2장

| | |
|--------------------------------|----|
| 〈표 2-1〉 연차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지원 실적 | 40 |
| 〈표 2-2〉 농산물하역기계화 및 소모성물류비 조사결과 | 40 |
| 〈표 2-3〉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 42 |
| 〈표 2-4〉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 43 |

제3장

| | |
|---------------------------------|----|
| 〈표 3-1〉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 56 |
| 〈표 3-2〉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실적 | 57 |
| 〈표 3-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실적 | 57 |
| 〈표 3-4〉 경영이양 사업추진 실적(1997~2010) | 60 |
| 〈표 3-5〉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 65 |
| 〈표 3-6〉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 65 |
| 〈표 3-7〉 2010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 67 |
| 〈표 3-9〉 농업법인 현황 | 70 |
| 〈표 3-10〉 어업법인 현황 | 71 |
| 〈표 3-11〉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비 지원현황 | 75 |
| 〈표 3-12〉 제9회 농업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 77 |

| | |
|--|-----|
| 〈표 3-13〉 임업기능인 영림단 조직 현황 | 79 |
| 〈표 3-14〉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 81 |
| 〈표 3-15〉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 84 |
| 〈표 3-16〉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 85 |
| 〈표 3-17〉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 86 |
| 〈표 3-18〉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 87 |
| 〈표 3-19〉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 88 |
| 〈표 3-20〉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89 |
| 〈표 3-21〉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 91 |
| 〈표 3-22〉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 91 |
| 〈표 3-23〉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 91 |
| 〈표 3-24〉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 92 |
| 〈표 3-25〉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지구 개발 유형 | 93 |
| 〈표 3-26〉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 94 |
| 〈표 3-27〉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 95 |
| 〈표 3-28〉 연도별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 98 |
| 〈표 3-29〉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실적 | 99 |
| 〈표 3-30〉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 101 |
| 〈표 3-31〉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 102 |
| 〈표 3-32〉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비전·목표·전략 | 104 |
| 〈표 3-3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전통주) 운영 모델(예시) | 106 |
| 〈표 3-34〉 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 108 |
| 〈표 3-35〉 연도별 종사업 등록현황 | 109 |
| 〈표 3-36〉 작물별 품종보호 등록현황 | 110 |
| 〈표 3-37〉 주요 가축개량 추세 | 112 |
| 〈표 3-38〉 친환경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 | 116 |
| 〈표 3-39〉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116 |
| 〈표 3-40〉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 119 |
| 〈표 3-41〉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 119 |
| 〈표 3-42〉 1994~2010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 120 |
| 〈표 3-43〉 정보화교육 실적 | 122 |

표 목 차

| | | | |
|--|-----|--|-----|
| 〈표 3-44〉 농림수산업정보망 현황 | 122 | 〈표 4-8〉 우량 산림종자 공급원 조성실적(2010년 기준) | 216 |
| 〈표 3-45〉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DB구축 현황 (2010년까지) | 125 | 〈표 4-9〉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 216 |
| 〈표 3-46〉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 128 | 〈표 4-10〉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실적 | 220 |
| 〈표 3-47〉 최근년도의 세부 수출동향 | 128 | 〈표 4-11〉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 221 |
| 〈표 3-48〉 2010년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예산 현황 | 138 | 〈표 4-12〉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09년) | 223 |
| 〈표 3-49〉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성과 | 138 | 〈표 4-13〉 1단계 숲가꾸기 5개년(2004~2008년) 추진실적 | 224 |
| 〈표 3-50〉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 142 | 〈표 4-14〉 2010년 숲가꾸기 추진실적 | 225 |
| 〈표 3-5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 147 | 〈표 4-15〉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일자리 제공 실적 | 225 |
| 〈표 3-52〉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 148 | 〈표 4-16〉 2011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 226 |
| 〈표 3-53〉 화학비료 소비 현황 | 149 | 〈표 4-17〉 2단계 숲가꾸기 5개년(2009~2013) 추진계획 | 227 |
| 〈표 3-54〉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 150 | 〈표 4-18〉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 228 |
| 〈표 3-55〉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155 | 〈표 4-19〉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 231 |
| 〈표 3-56〉 2010년 농어촌지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 156 | 〈표 4-20〉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 232 |
| 〈표 3-57〉 농공단지 조성 부처별 지원 현황 | 157 | 〈표 4-21〉 최근 10년간 솔잎혹파리 발생상황(천ha) | 232 |
| 〈표 3-58〉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 158 | 〈표 4-22〉 최근 10년간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상황 | 233 |
| 〈표 3-59〉 어촌관광 소득원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 160 | 〈표 4-23〉 참나무시들음병 발생현황 | 233 |
| 〈표 3-60〉 농작물 재해보험 성장 추이 | 162 | 〈표 4-24〉 산사태 피해방지 사업시행 실적(2010년) | 236 |
| 〈표 3-61〉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실적 | 167 | 〈표 4-25〉 산사태 발생 추이 | 237 |
| | | 〈표 4-26〉 사방댐의 효과성 입증사례 | 237 |
| | | 〈표 4-27〉 사방댐 시설 연도별 추진계획 | 228 |
| | | 〈표 4-28〉 수목원 조성·운영 현황 | 237 |
| | | 〈표 4-29〉 산림박물관건립 현황 | 239 |
| | | 〈표 4-30〉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 239 |
| | | 〈표 4-31〉 녹색댐 조성사업 추진실적 | 240 |
| | | 〈표 4-32〉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 | 243 |
| | | 〈표 4-33〉 국유림 대부지 관리 현황 | 244 |
| | | 〈표 4-34〉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 245 |
| | | 〈표 4-3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실태조사 현황 | 246 |
| | | 〈표 4-36〉 남한지역 6대 정맥 지원실태조사 현황 | 248 |
| | | 〈표 4-37〉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현황 | 249 |
| | | 〈표 4-38〉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현황 | 251 |
| | | 〈표 4-39〉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 251 |
| 제4장 | | | |
| 〈표 4-1〉 화훼생산현황 | 184 | | |
| 〈표 4-2〉 우유 수급상황 | 190 | | |
| 〈표 4-3〉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 190 | | |
| 〈표 4-4〉 최근 3년간 우유급식률 변화 | 191 | | |
| 〈표 4-5〉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종 | 214 | | |
| 〈표 4-6〉 산림분야 신품종보호 출원현황 | 214 | | |
| 〈표 4-7〉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 215 | | |

표 목 차

| | |
|------------------------------------|-----|
| 〈표 4-40〉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 254 |
| 〈표 4-41〉 임도시설 기본계획 | 254 |
| 〈표 4-42〉 2011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 255 |
| 〈표 4-43〉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255 |
| 〈표 4-44〉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 257 |
| 〈표 4-45〉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 257 |
| 〈표 4-46〉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 257 |
| 〈표 4-47〉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 258 |
| 〈표 4-48〉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 258 |
| 〈표 4-49〉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개발 현황 | 259 |
| 〈표 4-50〉 임업기능인 영입단 조직 현황 | 260 |
| 〈표 4-51〉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 262 |
| 〈표 4-52〉 산물 품목별 주생산지 지정 현황 | 263 |
| 〈표 4-53〉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 263 |
| 〈표 4-54〉 2010년 목재 수급 실적 | 265 |
| 〈표 4-55〉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 269 |
| 〈표 4-56〉 2010년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현황 | 270 |
| 〈표 4-57〉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 270 |
| 〈표 4-58〉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 271 |
| 〈표 4-59〉 등산인구 증가 추이 | 275 |
| 〈표 4-60〉 최근 5년간 산악사고 증가 추이 | 275 |
| 〈표 4-61〉 생활권 도시숲 현황(2009년 기준) | 282 |
| 〈표 4-62〉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성요소 | 283 |
| 〈표 4-63〉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현황(2010년 기준) | 284 |
| 〈표 4-64〉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 285 |
| 〈표 4-65〉 가로수 시도별 현황(2010년 기준) | 286 |
| 〈표 4-66〉 수종별 신규조성(2010년 기준) | 286 |
| 〈표 4-67〉 학교숲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 289 |
| 〈표 4-68〉 학교숲 조성 실적 | 289 |
| 〈표 4-69〉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 298 |
| 〈표 4-70〉 낚시어업권 현황 | 301 |

제5장

| | |
|-------------------------------------|-----|
| 〈표 5-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 308 |
| 〈표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 309 |
| 〈표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 310 |
| 〈표 5-4〉 20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 311 |
| 〈표 5-5〉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 312 |
| 〈표 5-6〉 하수도 보급률 | 313 |
| 〈표 5-7〉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예산 반영현황 | 314 |
| 〈표 5-8〉 2010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산집행현황 | 315 |
| 〈표 5-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집행현황 | 317 |
| 〈표 5-10〉 연도별 65세이상 농가인구 고령화율 | 318 |
| 〈표 5-1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 320 |
| 〈표 5-1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 322 |
| 〈표 5-13〉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 323 |
| 〈표 5-1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 326 |
| 〈표 5-15〉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율(1994~2010년) | 327 |
| 〈표 5-16〉 2010년도 공중보건기사 신규배치 인력 현황 | 330 |
| 〈표 5-1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 332 |
| 〈표 5-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 332 |
| 〈표 5-1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 333 |
| 〈표 5-20〉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 335 |

그림목차

제3장

| | |
|---------------------|-----|
| 〈그림 3-1〉 전체 시스템 구성도 | 126 |
|---------------------|-----|

제4장

| | |
|----------------------------------|-----|
| 〈그림 4-1〉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추진전략 | 177 |
| 〈그림 4-2〉 제정된 종별 특성조사요령 | 215 |
| 〈그림 4-3〉 자생식물 재배시험 포지 조성전경 | 215 |
| 〈그림 4-4〉 한국의 치산녹화 | 218 |
| 〈그림 4-5〉 바이오순환림 조성 | 219 |
| 〈그림 4-6〉 경제림육성단지 | 221 |
| 〈그림 4-7〉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구축 및 산물수집 | 226 |
| 〈그림 4-8〉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전략 개념도 | 235 |
| 〈그림 4-9〉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 243 |
| 〈그림 4-10〉 산림탄소순환마을 개념도 | 269 |
| 〈그림 4-11〉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현장 모습 | 287 |
| 〈그림 4-12〉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해외사례 모습 | 287 |
| 〈그림 4-13〉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모식도 | 288 |
| 〈그림 4-14〉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 301 |
| 〈그림 4-15〉 논 생태 양식 개념도 | 302 |

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제1절 2010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제2절 2010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제3절 2010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제1절 2010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1. 농수산물식품 부문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정주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한·EU FTA 정식서명, 호주, 페루 등과의 FTA로 인한 개방경제 추세가 확대되면서 농어업분야의 경쟁도 가속화되었다.

한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귀농, 농어촌 관광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농정에 미치는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매력적인 농림식품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혁신·소득증대, 체질개선·미래준비, 안전식품·안전공급, 지역경제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도에 추진된 주요 농정시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농림어업 생산액 증가 및 농어가 경영안정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2007년 농림어업 생산액은 41.6조원이었으나 2010년 50.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농림어업 생산액 증가는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제 등 농어업분야 주요정책이 축산물, 과실류 등의 생산 증가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비용절감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어가에 도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농어업 재해대상 품목을 41개로 확대하고, 농기계 은행사업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및 식품산업육성기반 구축

농림수산물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0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59억불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식품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전통식품의 산업화, 천일염 및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식 세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음식이 세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외식업계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신수산 정책 추진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3차 수산진흥대책(2010~2014)을 수립하여 수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을 통합하는 등 수협의 운영구조를 개편하였다. 또한, 러시아와의 수산협력을 강화하여 명태, 오징어 등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쿼터를 2010년 60,565톤에서 2011년 63,966톤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증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0년 194천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1.3%를 차지하여 최근 5년(2006~2010) 동안 30%에 달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아울러, 쌀, 배추김치, 배달용 치킨 등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2009년 국산 쇠고기에 이어 수입산에도 이력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 농어업분야 미래 준비

생명산업대전 개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생명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농어업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생명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농식품분야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농식품모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준비하였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으로 '제2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계획(2010~2014)'을 추진함으로써 범정부적인 농어촌 발전전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어촌 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등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규제개혁 가속화 및 국제협력 강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산어촌 현장애로 개선, 식품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하는 등 농식품산업분야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0년 규제개혁 최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FAO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G-20 정상회의 등과 연계하여 한국적 전통·경관을 보유한 농어촌의 대표명소 20곳을 선정, 홍보함으로써 국격을 높였다.

2. 임업 부문

| 산림청 산림정책과 사무관 강혜영

2010년 기후변화협약 칸쿤 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합의의 진전은 더디었으나 개도국의 산림전용억제를 위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녹색기후기금 마련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하여 기업에 감축의무를 할당하는 목표관리제, 기업의 온실가스 의무를 탄소흡수원인 산림 조성으로써 상쇄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또한, 노령화 사회에 따른 건강한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산림휴양·관광, 청정·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등산뿐 아니라 걷기 열풍으로 인한 아웃도어 시장의 고성장과 더불어 숲길, 도시숲, 숲치유 공간 등 산림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다. 더구나, SNS(소셜네트워크), 스마트폰의 확산은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화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는 산림서비스의 질 제고를 요구하게 되었다.

IT, BT, NT의 융합기술 발전은 국내 자생식물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은 국가 전체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과 산림청 녹색성장 추진계획(2009~2013)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애주기 산림복지 실현,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 5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했다.

첫째, 가치있는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별기령에 다다른 리기다소나무림을 생장이 빠르며 탄소흡수능력이 우수한 백합나무 등 용재수, 특·약용수로 갱신하고, 지역별로 중점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집단화된 목재자원으로 육성하였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용 종자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종자공급원 및 우량 묘목 공급을 위한 시설 양묘를 확대하고, 신품종 출원 등으로 신품종보호제도(UPOV)에 대응하였다. 또한,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9~2013, 125만ha)에 따라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업 면적을 확대하고(25만ha) 바이오매스 공급을 위해 산물 수집을 늘려나갔다. 또한 숲가꾸기의 품질 향

상을 위하여 설계·감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G20회의('10.11)를 대비하여 진 한국에 걸맞는 산림경관을 위해 주요 도로변, 가시권 지역의 덩굴류 제거 등 산림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둘째,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으로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목재펠릿, 목재칩, 소경재 가공목 등의 원료로 공급하였다. 대체에너지인 목재펠릿은 농가 주택, 시설원에 위주에서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시설, 마을회관, 산업체 등으로 보급대상을 다변해 나가고, 제조시설을 확충하여 펠릿 공급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숲가꾸기 산림사업지에 산채·약용식물 단지를 조성하고 고소득작목인 산양삼 품질표시 및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15개소를 확충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였다. GAP, 지리적 표시제 확대 등으로 임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의 밤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및 친환경 방제 등 지원확대, 표고버섯 재배시설 신규조정, 우량종균 개발추진, 송이버섯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관수시설 확대 등 청정 임산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하였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재배·체험·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산약초 타운을 조성하는 등 국내 산지약용식물의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전 생애에 걸쳐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숲태교, 숲유치원, 숲 캠프, 레포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요양마을, 수목장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 수요에 맞는 산림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정신질환, 아토피,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간으로서 숲을 활용하기 위한 치유의 숲, 트레킹 숲길을 조성하고,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마을숲 등의 조성으로 생활권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였다. 또한, 등산로 안내, 전국 자연휴양림 안내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고 숲해설가, 숲길조사원, 등산안내인, 수목원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하여 산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동시에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넷째,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0년 산불 발생건수는 282건, 피해면적은 297ha에 예년 평균에 비하여(478건, 1,161ha) 대폭 감소하였다.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역시 225천ha로 2009년보다 22% 감소하였다. 또한, 식물자원 보존을 위하여 수목원, 자생식물원, 생태숲을 확충하고 독도산림생태계 복원, 민북지역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위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다섯째,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을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2008~2017)에 따라 매년 2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그간의 양자 간 산림협력국가에 2010년에는 튀니지를 더해 총 12개국과의 협력을 진행했다. 이로써 아시아 지역 위주의 해외조림에서 남미, 아프리카까지 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중국, 몽골 등지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기술을 바탕으로 양묘장 조성, 황폐지 복구조림 등 산림 분야 개도국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2011, 경남 창원)를 위한 사전 준비와 총회 홍보 및 REDD 등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2011년 11월 창설) 설립을 위해 국제기구,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제2절 2010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1. 농업·농촌 부문

정책평가담당관실 서기관 이정길

▣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010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7년차로서 2010년 투융자 규모를 13조 2,332억원으로 계획하여 집행은 97.4%인 12조 8,85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난 7년간('04~'10) 「119조 투융자 계획」으로 집행한 금액은 76조 3,907억원으로 계획 80조 301억원 대비 95.5%가 집행되었다.

〈표 1-1〉 2010년 농업·농촌 투융자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0년 예산(A) | 2010년 집행내역 | | | | 집행율 (B/A) |
|---------------|----------------|------------|---------|-------|-------|--------------|
| | | 예산현액 | 집행액(B) | 차년이월 | 불용액 | |
| 합 계 | 132,332 | 139,601 | 128,855 | 5,230 | 5,516 | 97.4% |
| [분야별] | 132,332 | 139,601 | 128,855 | 5,230 | 5,516 | 97.4 |
| 농업경쟁력 강화 | 70,005 | 70,519 | 67,370 | 1,636 | 1,513 | 96.2 |
|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 | 27,304 | 27,578 | 22,959 | 948 | 3,671 | 84.1 |
|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 16,996 | 22,393 | 19,688 | 2,455 | 250 | 115.8 |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18,027 | 19,111 | 18,838 | 191 | 82 | 104.5 |
| [품목별] | 132,332 | 139,601 | 128,855 | 5,230 | 5,516 | 97.4 |
| 쌀 | 27,035 | 27,035 | 25,713 | 725 | 597 | 95.1 |
| 특작,원예 | 13,229 | 13,194 | 11,375 | 125 | 1,694 | 86.0 |
| 축 산 | 10,040 | 15,632 | 12,081 | 2,825 | 726 | 120.3 |
| 임 업 | 14,891 | 15,183 | 14,896 | 191 | 96 | 100.0 |
| 공 동 | 38,436 | 38,825 | 35,821 | 816 | 2,188 | 93.2 |
| 기 타 | 28,701 | 29,732 | 28,969 | 548 | 215 | 100.9 |
| [지원대상별] | 132,332 | 139,601 | 128,855 | 5,230 | 5,516 | 97.4 |
| 농업인 등 지원 | 73,295 | 73,951 | 67,182 | 1,512 | 5,257 | 91.7 |
| SOC 사업 | 29,081 | 30,155 | 29,161 | 956 | 38 | 100.3 |
| 정부사업 | 29,956 | 35,495 | 32,512 | 2,762 | 221 | 108.5 |

분야별로는 전체 집행액 12조 8,855억원 중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6조 7,370억원(52.3%),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에 2조 2,959억원(17.8%),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분야에 1조 9,688억원(15.3%),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1조 8,838억원(14.6%)이 투자되었다.

품목별로는 쌀에 2조 5,713억원(20.0%)이 투입되어 비중이 높았으며, 지원대상별로는 농어업인 등에 6조 7,182억원(52.1%)이 투입되어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4. 5월 수립된 농업·농촌분야 119조 투융자 계획은 2007. 12월 FTA 확대 및 식품정책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이 보완·발표되었으며, 금액으로는 당초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증액되었다.

▣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UR 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1단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대책(1992~1998), 2단계 45조원 농업농촌발전계획(1999~2003), 15조원 농특세사업, 119조원 투융자계획(2004~2013)에 따라 1992~2009년간 국고기준 약 145조원이 투융자 되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투융자 효율성 및 체감도가 낮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실사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농업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투융자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농업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 진전
 - 경지 3ha 이상 농가 : ('04) 82천호(6.6%) → ('10) 101천호(8.6%)
 - 양돈 1천마리 이상 농가 : ('04) 2.8천호(21.6%) → ('10) 3.2천호(43.8%)
 - 한우 50마리 이상 농가 : ('04) 4.4천호(2.4%) → ('10) 12.3천호(7.4%)
-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 확대
 - 친환경인증 농산물 : ('04) 461천톤 → ('10) 2,216천톤
 - 안전성기준 부적합률 : ('04) 3.8% → ('10) 2.2%
 - 농림축산물 수출실적 : ('04) 20.0억불 → ('10) 40.8억불
- 중·장기적인 농림예산 투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지속 확충

(단위 : %)

| 구 분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발기반 정비율 | 62.3 | 66.3 | 70.4 | 74.5 | 77.7 | 85.0 |
| 수 리 답 율 | 78.5 | 79.2 | 79.3 | 79.5 | 79.8 | 80.0 |

- 농촌지역의 다양한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도농상생 토대구축 및 지역개발 촉진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 ('04) 76개소 → ('10) 516개소
 -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 ('04) - → ('07) 4개소 → ('10) 36개소
-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
 - 읍·면단위 상·하수도 시설 등 확대로 생활여건 개선
 - * 상수도 보급률 : ('04) 55.8% → ('09) 68.7%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10년 31천명),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경감 등 추진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 등 경영 안정장치 강화
- 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감소를 직불금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 예산에서 직불제 예산금액 확대
 - 직불금 비중 : ('04) 8,675억원 → ('10) 14,644억원

2. 임업 부문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박도환

▣ 임업부문 투융자 실적

2010년도 임업부문 투융자 지원실적은 국고기준으로 2009년도 15,220억원보다 6.5% 증가한 16,208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49억원, 농특회계 6,432억원, 혁특회계 216억원, 광특회계 2,085억원 및 책특회계 326억원이 편성되었다. 부문별로는 숲가꾸기, 조림 및 묘목생산 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6,157억원을 투자하였고,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산림휴양등산증진,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 등 산림자원 이용에 4,342억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사방 및 산림생물다양성증진 등 산림자원 보호에 3,967억원, 산림행정정보화 등 행정지원 등 기타에 1,742억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회계별·부문별 투융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2〉 2010년 임업부문 투융자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 | 2009년 예산 (A) | 2010년 예산 (B) | 증 감 | |
|-------------|-------------|-----------------|-----------------|-------|-------|
| | | | | (B-A) | % |
| 계 | | 15,220 | 16,208 | 988 | 6.5 |
|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6,810 | 7,149 | 339 | 5.0 |
| | 농 특 회 계 | 6,094 | 6,432 | 338 | 5.6 |
| | 혁 특 회 계 | 81 | 216 | 135 | 166.7 |
| | 광 특 회 계 | 1,918 | 2,085 | 167 | 8.7 |
| | 책 특 회 계 | 317 | 326 | 9 | 2.8 |
| 부 문 별 | 산 림 자 원 육 성 | 5,827 | 6,157 | 330 | 5.7 |
| | 산 림 자 원 이 용 | 4,310 | 4,342 | 32 | 0.7 |
| | 산 림 자 원 보 호 | 3,530 | 3,967 | 437 | 12.4 |
| |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 1,553 | 1,742 | 189 | 12.2 |

▣ 임업부문 투융자 성과

● 대내·외 정책여건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조립 등 산림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을 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10.1.13. 공포).

또한, 산림자원육성 및 재해방지 인프라 확충 등 임업부문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걸 맞는 국제산림자원협력 등 국내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투융자 성과

임업부문은 그동안 국토녹화와 산림자원화 기반조성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단계로 발전해 왔으며, 기간별 성과는 아래와 같다.

- 1·2차 치산녹화기간('73~'87)에 국토녹화 달성
- 3차 산지자원화 기간('88~'97)에 녹화 바탕 위에 산지자원화 기반 조성
- 4차 산림기본계획기간('98~'07)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ha당 임목축적 : ('79) 17.9m³ → ('00) 63.5m³ → ('07) 97.8m³ → ('10) 125.6m³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 ha당 평균임목축적은 125.6m³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산재 생산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0년도 목재자급률은 13.5%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유림 확대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난해 보다 13천 ha가 늘어난 1,543천ha로 국유림률 24.2%를 달성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관련 사업인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및 제조시설 지원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펠릿 원료 공급을 위해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63천ha까지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바이오순환림 조림을 대폭 확대(6천ha) 추진하였다.

임업기계·장비를 확대 보급(546대)하여 산물수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작업임도 신설을 크게 확대(295km) 하였다. 아울러, 임업인 소득 증대 및 경쟁력 증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기능인 영림단 보강 등 임업기능인 양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임업부문 녹색일자리는 경제위기의 회복기조에 발맞춰 내실화를 기하여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에서 3,581명, 숲가꾸기 사업에서 2만 1,638명 등 2만 5,219명을 고용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다.

3. 수산업·어촌 부문

| 수산정책과 서기관 윤석홍

2010년 수산업·어촌투자 실적은 국고기준 10,167억원으로, 2009년 9,333억원에 비해 834억원(8.9%)이 증가하였다.

회계별로 보면 바다목장 조성, 수협경영정상화지원,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어업인정책보험 사업 등 일반회계에 4,015억원(39.5%), 수산연구 개발사업,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연근해어선 감척, 어촌관광개발, 국가어항건설, 바다숲 조성 등 농특회계에 3,796억원(37.3%),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인공어초사업,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건설 등 광특회계에 2,356억원(23.2%)이 편성되었다.

수산발전기금 운용은 2010년 5,756억원으로 2009년 5,996억원에 비해 240억원(4.0%) 감소하였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에 1,104억원(19.2%),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에 1,340억원(23.3%),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사업으로 1,475억원(25.6%)이 지출되었다.

제3절 2010년 농림수산물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 농수산물식품 부문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재형

▣ 예산편성 방향

●● 기본 방향

2010년도 농수산물식품분야 예산은 '작지만 강한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농림수산업 체질개선, 농어가 경영안정, 식품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농업 보조금 개편, 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 중점 편성방향

먼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업 체질 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 규모화 및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직불제 확충 및 재해보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의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다음으로, 녹색성장, R&D 등 미래 농어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바이오매스 자원화, 에너지 고효율화 및 종자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농림·수산·식품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수산 자원관리·조성 및 친환경 농어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였다.

또한, 식품산업의 본격적인 육성 및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식품산

업 육성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 및 기초 인프라 확충,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 한식 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의 정주·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교육 지원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 예산편성 규모

● 2010년 예산의 전체 모습

2010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 전체 규모는 14조 6,738억원으로 2009년 대비 0.3%(375억원) 증가하였다. 이 중 농식품부 소관 6개 예산의 규모는 9조 6,209억원이며 8개 기금의 규모는 9조 4,137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 12조 1,505억원, 수산업·어촌 1조 3,606억원, 식품업 분야 5,764억원 등을 투자하였다.

● 부문별 규모 및 주요 특징

첫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 체질강화 부문에 2조 3,489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지매매·임대차 등을 통한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비료 등 우수 농자재 공급을 지원하였다. 원예·축산 등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생산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통한 농어업인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투자 및 현장 중심의 농수산식품 R&D 투자를 확대하였다.

둘째, 농어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2조 4,952억원을 편성하였다. 쌀값추세를 고려하여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및 변동직불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공익형 직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농어업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지원을 강화하였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 복지 증진을 통해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분야에 1조 6,982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어업인의 건강·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어촌의 정주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어촌 뉴타운을 본격 조성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자원 복합산

업화, 농어촌 기초생활 정비를 위한 농산어촌 종합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넷째,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양곡관리 및 농산물유통 분야에 3조 2,479억원을 편성하였다. 공공비축용 추·하곡 매입 등 양곡관리를 위한 소요를 반영하고,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예산을 확충하였다. 한편,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과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고, 유통시설 현대화 및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적정 농업생산 기반의 유지 관리를 위해 대단위 농업개발 및 농촌 용수개발과 농지 기반 정비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예산을 2조 3,603억원 편성하였다. 새만금 등 대단위 간척지구 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물부족 시대에 대비한 용수개발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여섯째, 수산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1조 3,606억원 편성하였다. 수협외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경영 및 조업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자율적인 어족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연근해 수역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연안어장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다.

일곱째, 새롭게 성장하는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예산을 5,764억원 편성하였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관련 기술·인력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한식을 세계화하고 전통·발효식품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한편,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 해외 마케팅 및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2010년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의 부문별 재정부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3〉 농수산물분야 부문별 재정보분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 2009년 예산 (A) | 2010년 예산 (B) | 전년대비 증감 | |
|--------------|-----------------|-----------------|---------|-------|
| | | | (B-A) | % |
| ◆ 총지출(예산+기금) | 146,363 | 146,738 | 375 | 0,3 |
| ◇ 예산 일반지출 | 97,278 | 96,209 | △1,069 | △1,1 |
| ◇ 기금 일반지출 | 49,085 | 50,529 | 1,444 | 2,9 |
| I. 농림수산 | 141,970 | 142,350 | 380 | 0,3 |
| □ 농업·농촌 | 123,240 | 121,505 | △1,735 | △1,4 |
| ○ 농업체질강화 | 24,950 | 23,489 | △1,461 | △5,9 |
| ○ 농가소득·경영안정 | 26,811 | 24,952 | △1,859 | △6,9 |
| ○ 농촌개발·복지증진 | 17,485 | 16,982 | △503 | △2,9 |
|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 32,354 | 32,479 | 125 | 0,4 |
| ○ 농업생산기반 | 21,640 | 23,603 | 1,963 | 9,1 |
| □ 수산업·어촌 | 13,330 | 13,606 | 276 | 2,1 |
| □ 식품업 | 4,718 | 5,764 | 1,046 | 22,1 |
| □ 기타사업비 | 682 | 1,475 | 793 | 116,3 |
| II. 기본적경비 | 4,393 | 4,388 | △5 | △0,1 |

2. 임업 부문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박도환

▣ 편성방향

2010년도 산림예산은 첫째 '녹색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부문의 역할 강화',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 위주 투자'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전문임업인 육성 및 임업인 소득사업 지원,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녹색웰빙기반 확충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예산규모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8,647억원으로 전년대비 4.2%(345억원) 증가하였으며, 증액은 대부분 일반회계로부터의 농특회계 전입금(338억원)이다.

아울러,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208억원으로 전년대비 6.5%(988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0.6%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49억원, 농특회계 6,432억원, 광특회계 2,085억원 및 책특회계 32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항공본부의 혁신도시(원주) 이전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35억원(167%) 늘어난 216억원이 반영되었다.

〈표 1-4〉 임업분야 회계별 투융자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2009년 예산 (A) | 2010년 예산 (B) | 증 감 (B-A) | |
|--------------|-----------------|-----------------|--------------|-------|
| | | | | % |
| 계 | 15,220 | 16,208 | 988 | 6.5 |
| ○ 일반회계 | 6,810 | 7,149 | 339 | 5.0 |
| ○ 농어촌구조개선특회계 | 6,094 | 6,432 | 338 | 5.6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81 | 216 | 135 | 166.7 |
|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918 | 2,085 | 167 | 8.7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317 | 326 | 9 | 2.8 |

▣ 부문별 투자실적

부문별 투자규모는 산림자원 육성에 6,157억원, 산림자원 이용에 4,342억원, 산림자원 보호에 3,967억원,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사업에 1,742억원이며 2009년 대비 증액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1-5〉 임업분야 부문별 투융자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2009년 예산 (A) | 2010년 예산 (B) | 증 감 (B-A) | |
|---------------|-----------------|-----------------|--------------|------|
| | | | | % |
| 계 | 15,220 | 16,208 | 988 | 6.5 |
| ○ 산림자원 육성 | 5,827 | 6,157 | 330 | 5.7 |
| ○ 산림자원 이용 | 4,310 | 4,342 | 32 | 0.7 |
| ○ 산림자원 보호 | 3,530 | 3,967 | 437 | 12.4 |
| ○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 1,553 | 1,742 | 189 | 12.2 |

부문별 세부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산림자원 육성 부문에서는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녹색 R&D 및 글로벌 산림협력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2단계 숲가꾸기 계획(2009~2013, 125만ha)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3,132억원)하였으며, 산물수집을 확대하고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확대하여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등 임목자원의 수집·활용 촉진을 위한 일관시스템 구축, 숲가꾸기·조림 사업의 내실화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 숲가꾸기 : ('09) 3,132억원 → ('10) 3,132억원
 - 숲가꾸기 산물수집 : ('09) 41천ha, 213억원 → ('10) 63천ha, 363억원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 ('09) 3천명, 287억원 → ('10) 3.2천명, 307억원
- 조 림 : ('09) 720억원 → ('10) 693억원
 - 바이오순환림 조성 : ('09) 0.2천ha, 10억원 → ('10) 6천ha, 229억원
- 작업임도 등 확충 : ('09) 103km, 101억원 → ('10) 408km, 424억원
- 임업기계장비 보급 : ('09) 75대, 12억원 → ('10) 546대, 54억원

또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등 녹색 R&D 투자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녹색리더국가 도약을 위한 산림자원협력·외교를 강화하였다.

- 산림과학연구(R&D) : ('09) 273억원 → ('10) 316억원
- 임업기술연구개발(R&D) : ('09) 118억원 → ('10) 128억원
- 국제산림협력 : ('09) 44억원 → ('10) 75억원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운영 : ('10 신규) 30억원

둘째, 산림자원 이용 부문에서는 전문임업인 육성 및 임업인 소득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하였으며, 녹색웰빙 기반 확충 및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촉진 투자를 확대하였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독립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경영지원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산약초 특화단지 및 청정임산물 생산·유통사업을 지속 지원하였다.

- 특화품목 등 산림경영지도 : ('09) 153억원 → ('10) 184억원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 ('10 신규) 16억원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09) 549억원 → ('10) 491억원

국가·지자체 자연휴양림의 각종 편의시설을 보완·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형 산림휴양·문

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하는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을 본격 시작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훼손 등산로를 정비하고 체험형 숲길 등 확충하였다.

- 산림휴양등산증진 : ('09) 224억원 → ('10) 463억원
 -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 ('09) 20억원 → ('10) 135억원

● 국립자연휴양림조성관리 : ('09) 248억원 → ('10) 252억원
아울러, 목재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투자를 확대하였다.

-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 ('09) 114억원 → ('10) 145억원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09) 2천대, 26억원 → ('10) 4천대, 46억원

셋째, 산림자원 보호 부문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산불현장 대응체계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망사업은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는 방제물량 등 여건 변동을 반영하였다.

- 산불방지대책 : ('09) 362억원 → ('10) 524억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09) 7천명, 189억원 → ('10) 10천명, 291억원

- 사망사업 : ('09) 1,739억원 → ('10) 1,830억원
 - 물가두기 사방댐 : ('10 신규) 15개소, 104억원

- 산림병해충방제 : ('09) 666억원 → ('10) 674억원
 - 소나무림 재해저감 대책사업 : ('10 신규) 5천ha, 45억원

또한, 백두대간 및 산림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을 추진하였으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였다.

- 산림생물다양성증진 : ('09) 119억원 → ('10) 334억원
 -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 ('09) 68억원 → ('10) 251억원

- 백두대간 보호 및 산림복원 : ('09) 63억원 → ('10) 86억원

넷째, 산림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산림통계 및 정보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산림항공본부의 혁신도시(원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

- 국가산림통계 : ('09) 76억원 → ('10) 76억원
- 산림자원정보화 : ('09) 64억원 → ('10) 63억원
- 산림항공본부 이전(서울→원주) : ('09) 81억원 → ('10) 216억원

제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1. 농협개혁

|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최봉순, 사무관 박중신·변혜중·홍인기·정아름

▣ 시행배경

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20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이에 이어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실질적인 농협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2009. 6. 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20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20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2009. 12)하고 국회에 제출(2009.12.16)하였다.

2단계 농협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2010.2)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

었으며,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2.24·4.14·4.19·4.22·12.6, '11.3.3)와 2차례의 농식품위 전체회의(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공청회(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2.22)을 개최하고,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농협중앙회, 금융위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 홍보(OBS, 한국경제, KTV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 국회의원 개별 방문 설명(이낙연 위원장 외 다수 실시), 조합장·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 향후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협법 개정애 이어 즉시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이어 2009.12.26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협법 개정애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사업구조개편 관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언론 기고, 방송 인터뷰 및 기자단 설명회 등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자본금·조세 등의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향후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 구성, 하위법령 마련, 자산 실사 등 실무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까지는 조직·인력 재설계, 법인 설립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 시 개정안 통과 후 1년여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림조합 개혁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기환

▣ 시행배경

산림조합은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리·동 단위의 산림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1980년 산림조합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진 협동조합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임명제였던 산림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과 조합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였으며, 1993년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가 2000년에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따라 산림조합체제로 환원하였다.

산림조합은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직되며,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향상을 목표로 2010년 현재 전국에 142개 산림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산사태 등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같은 국가 산림정책을 수행하여 험벗었던 국토를 녹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78년도부터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880명)을 통해 산림경영 기술지도, 임업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기계 보급, 임업정책 자금 대출취급 등 국가사무를 충실히 대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산림휴양 등 국민들의 산림수요 증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제도의 도입, 산림사업법인의 증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새로운 요구 등으로 인해 산림조합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구조개선 추진배경과 기반 마련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마련과 산주와 임업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13개 조합에서 상호금융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 현재 134개 조합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회는 여건미흡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신용사업을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신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IMF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고금리 조

달구조의 지속, 부실채권의 증가, 유가증권 투자실패 등 일부조합에서 부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서 부실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중앙회는 2005년도에 최초로 중앙회소속 144개 회원조합 전체에 대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실사결과 2004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조 3,165억원, 부채는 2조 1,200억원, 자본은 1,96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고흥 등 28개 조합에서 274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진단위원회는 경영진단결과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서 농·수협외 사례와 같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산림청은 건의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정부안으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2007. 8. 3 법률을 제정하고 6개월 후인 2008. 2. 4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법률시행일 이전에 각각 제정을 마무리하여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도에 신규로 산림조합 구조개선사업 예산 56억원을 확보하여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부실조합 등 지정과 구조개선 추진

부실조합 등을 선정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25개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이 2008년 말 기준으로 재무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는 16개 조합을 부실조합 등으로 심의·의결하였다. 16개 조합 중에서 산림청은 순자본비율 기준으로 -15%미만인 3개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지정하였고, 중앙회는 순자본비율 기준 -15%이상 2%미만인 11개 조합과 자산건전성 등이 취약한 2개 조합을 합쳐 모두 16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하였다.

2007년 말 기준 6개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대구조합 합병('08), 전북표고조합 파산('08), 고흥조합 신용사업 양도('09)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3개조합은 부실우려조합으로 편입되어 추가 부실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기 시정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하여 '10년 말 구조조정사업을 완료하였다. 부실우려 13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별 부실원인을 분석한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경비절감, 자기자본 증대, 이익배당 제한, 신용사업 활성화, 불용자산 처분과 같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를 해당조합에 각각 조치하였다. 이 중 순자본비율이 낮은 7개 조합은 2012년까지 정상조합

기준인 순자본비율 2%를 목표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7개 조합과 중앙회는 경영개선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10억원(국고 9억원, 중앙회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9년도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에 대한 부실조사 결과 6개 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으로도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는 적기시정조치와 경영개선약정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평가 실시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림조합 구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실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산림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산촌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 등의 구조개선 추진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임업과 산촌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간 국고 186억원을 지원하여 2012년까지 구조개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실사 결과 순자본비율 2%미만 7개 조합을 '11년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 대상으로 지정하여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적기 시정조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실우려조합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우려조합 중 정부예산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성래

▣ 시행배경

수협은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등 자생력 부족으로 어업인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 적용('14년부터) 등 금융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영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과 부실수협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수협의 경영구조 개편과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9.4)된 후 '10. 4월 공포(시행 '10.10.13)되었다.

개정 수협법의 주요내용은 중앙회의 경우, 회장 비상임화와 연임을 제한하면서 교류협력 사업 등 상징적 대외적 역할에 전념토록 하되 실질적인 경영권을 배제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임원선출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이사의 경영평가 및 해임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기능강화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교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중앙회 공적자금을 출자에서 출연의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중앙회의 자본 확충을 위해 일선수협이 중앙회에 배당권만 가지는 우선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선조합의 경우, 경영 정상수협은 조합장 비상임 여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영개선이 협약정(MOU) 목표를 2회 연속 미 이행한 조합장은 비상임화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정상조합은 현행 선출방법(조합장이 이사회에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상임이사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상임이사 자격을 종전에는 비조합원만이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경영능력이 있는 조합원도 자격을 부여하여 상임이사 자격을 완화하였다. 아

올리, 수협 등 금융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채무 연체자와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자는 임원자격을 제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였다.

● 중앙회 경영혁신 추진

수협 자체 개혁운동인 新수협운동을 추진하여 중앙회 인력·조직 감축 및 부실사업장 폐쇄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개정 수협법 시행에 따라 지도경제부문 중복기능 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자사업인 바다마트 사업을 자회사인 (주)수협유통에 이관하였다. 아울러, 신용사업부문에서는 건전여신·저원가성예금·비이자 이익의 지속 증대, 고객관리역량 제고,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당기순이익 419억원, 예수금 11조 3,019억원, 대출금 14조 1,914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3개 일선수협에 대하여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3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순 자본비율 산출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결과 39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4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제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목표 등 적기 시정조치를 시달하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 부실수협 구조조정 추진

2010년도 제2차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3개 부실조합 중 삼척수협은 순자본비율 및 결손금이 감소추세에 있어 부실채권비율 감축 및 신용사업 수익발생 등이 전제될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므로 강력한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경영개선 목표 미달성시 조건부 합병 명령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장흥군수협은 미처리결손금 과다로 자체 정상화는 어려우나 순자본비율 등이 소폭 개선되고 있으며, 중앙회에서 경영지도역(2명) 파견으로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 중이므로 통폐합을 유보하고, 부실채권 감축 등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되 2010년말 경영평가 결과 목표 미달성시 합리적 경영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상호금융사업 미 취급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채권부실화 위험이 상존하여 자체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나 중앙회에서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강도높은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시 '11년 이후 조건부 청산 명령 등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일선수협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09년 말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 부실조합 등 17개 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다.

2010년도 17개 조합에 총 148억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 부실책임조사 실시

일선수협의 부실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조사대상 : 52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원인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등 부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11개 조합 임직원 204명(부실책임액 578억원)에 대하여는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다.

▣ 향후계획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는 인력·조직 축소 등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수협은 순자본 비율 및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조합 등에 대해 지정·해제 및 강력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별 취약 부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잠식 해소 및 확충을 위한 자본적정성 목표, 무수익 채권 감축을 위한 자산건전성 목표, 자본 고정화 방지를 위한 유동성 목표, 장기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수익성 목표를 신설하여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 부여하였으며, 경영개선목표 이행률에 따라 추후 견책, 감봉, 상임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말로 대다수 조합의 MOU가 해지됨에 따라 MOU 해지 조합 중 MOU 약정상의 순자본비율 목표 미달 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 0%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계획 목표를 별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1. 농산물 유통 개혁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유통정책과 사무관 안형덕

▣ 시행배경

생산계획 단계부터 사전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31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측정보(과종의향·작황·가격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표본농가는 15,609호, 모니터 요원 1,963명이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관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계약재배를 통한 채소수급 안정사업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2001년부터는 사업대상 품목을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채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업주체를 일선 농협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현재 계약재배 물량은 채소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24% 수준으로 사업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 계약출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단감(2002년)과 감귤(2003년)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2005년에는 사과, 배, 감귤 농가의 사업참여 기준 물량을 200톤에서 300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년도에는 사과, 배, 감귤, 단감을 대상으로 총 208천톤의 계약출하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출하사업을 과실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같은 규모의 자금을 1:1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시행 당시의 대상 품목(파프리카, 참다래)을 26개로 확대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조금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적립된 자조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향후계획

향후 생산자단체 스스로 해당 품목을 확대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조절, 소비촉진, 시장개척 등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정책과 사무관 이정삼

▣ 시행배경

최근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형 SSM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등 소비자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소포장 및 전처리 편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 패턴도 안전성, 편의성 및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의 산지 유통에서 소비자 유통에 이르는 각 분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크게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비지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주로 생산자의 거래 교섭력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별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다품목 소량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물량과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를 조직화,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산지조직 249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생산량의 36% 수준이 산지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도매단계에서는 농산물의 수집, 분산 등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의 노후화 된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11개 도매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서울 가락시장, 광주 각화시장, 대전 오정시장등 3개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다양한 유통망 구축을 위하여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정례화된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온라인 방식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산지조직과 기업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향후계획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유통구조 개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지의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가야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2011년에는 그동안의 시장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 유통정책과 주무관 정순일

▣ 시행배경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유통비용 절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식품·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에는 방문객 수 29만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0년에는 41만명에 79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밖에도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식품·외식 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 상

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소를 설치하여 대금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에는 B2B 개설 초년도부터 거래목표(1,000억원) 대비 초과달성(1,755억원)으로 농수산물야 B2B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향후계획

소비자·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On-line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통합 관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B2C 거래를 증대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장터를 로컬푸드 차원에서 농가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산지 인근 인구밀집 지역에 정례장터 개설을 확대하여 도·농간 교류 확대 및 지역 생산물의 소비촉진,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조규표

▣ 시행배경

최근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도매시장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낙후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물류 및 유통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경매 부조리,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물류효율화)을 개선하고자 농안법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낙후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물류 및 유통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09년부터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특히 품질·신선도 등 소비자 요구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매장, 매장의 저온화 시스템, 저온저장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3개의 공영도매시장 중 시설노후화 및 물류시설 부족 등의 정도가 심한 3개소(서울가락시장, 대전오정시장, 광주각화시장)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로 추진하고 있다.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09년에서 '18년(10년간)까지 연면적 547,0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며 '10년 말 현재, 시설현대화 건설기본계획수립, 1단계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이다. 대전오정시장의 경우, '09년에서 '13년까지 연면적 32,650㎡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며, 우선시공분(임시판매장 조성 등)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광주각화시장의 경우, 당초 '09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축소하여 '1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운영 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품질이 높은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09.1.1부터 도입하였다.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으로 판정되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09년부터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09년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중인 농수산물에는 견본만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07년부터 도입된 전자거래와 함께 농수산물의 물류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

도매시장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부산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추가로 개장되었다.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유통주체간 거래규제완화, 도매시장기능 복합화, 도매시장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 향후계획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성장가능성, 시설의 노후화 정도 및 과부족 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서울 가락, 광주 각화, 대전 오정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중앙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우선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도매시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위해 도매시장 경매가격 급등시 가격변동폭 완화를 위한 도매시장 가격안정명령제의 도입, 유통 효율화를 위해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동등하게 규정,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촉진을 위해 대금정산 조직 신설, 경매절차를 생략하고 직접적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농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 유통정책과 사무관 조규표

▣ 시행배경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농산물유통단계의 포장, 운송, 보관, 하역을 규격화 및 기계화할 수 있도록 일관수송체계(ULS:Unit Load System)에 적합한 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물류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일관수송 체계 구축,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물류기기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기반조성이 필요하여 지난 '97년도에 물류표준화사업(물류기기구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00년도부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 이용 촉진을 통한 물류이용 규모화, 복합운송 실현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물류표준화사업(물류기기 공동 이용)을 확대 지원하였다.

민간 보조형태의 사업으로 국고보조 50%, 자부담 50%의 부담 조건으로 물류기기구입은 '08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였으나, 물류기기 공동 이용과 함께 물류효율화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09년부터 전담 기관을 농협중앙회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자부담율을 감안하여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선택폭을 넓히도록 사업자선정, 자금지원, 정산 등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전산화를 도입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유통비용 증가로 농산물 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물류장비의 표준화 및 공동 이용 기반을 지속 확충하였다. 특히, '07년부터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무, 배추 등 품목의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한 포장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락시장, 구리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에서 플라스틱상자 회수·관리 시범사업('07~'08년)을 실시한 바 있다.

물류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선채소류 특히 무·배추의 기계화, 분산체계가 과제로 대두되어 여름철 고랭지 배추를 시범품목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보았으나, 차량 신선도 유지, 기계화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재, 수송, 분산 등 문제점으로 배추포장유통 활성화엔 큰 진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산지, 도매시장 등 유통주체의 역할을 정립하여 플라스틱상자 회수·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실적

지난 1997년 농산물의 물류기기 구입 및 공동 이용사업을 지원하여 2010년까지 2,101억원을 투자하였다. 물류기기 구입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작목반,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서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산물유통의 표준화 및 기계화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까지 1,294억원을 지원하였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농산물을 공영도매 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에 출하하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작목반, 공영도매시장,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등에 2009년까지 80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 연차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연 도 | 2004까지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계 |
|-----------|--------|------|------|------|------|------|------|-------|
| 물류표준화사업 | 920 | 143 | 177 | 210 | 225 | 226 | 200 | 2,101 |
| 물류기기구입지원 | 716 | 67 | 88 | 115 | 115 | 104 | 89 | 1,294 |
| 물류기기공동이용 | 204 | 76 | 89 | 95 | 110 | 122 | 111 | 807 |

● ●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성과

물류기기의 구입비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성격에 정부가 농산물 물류 개선 차원에서 지속 지원해 줌으로써 물류기기 이용량이 '02년도 18백만 매에서 '10년은 45백만 매로 증가하였다.

* 연도별 이용량 : ('02) 18백만매 → ('06) 39 → ('08) 44 → ('09) 49 → ('10) 45

산지에서 포장규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하역 기계화율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송비, 하역비, 청소비, 감모 등 소모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2-2〉 농산물하역기계화 및 소모성물류비 조사결과

| 지 표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하역기계화율(%) | 20.2 | 23.1 | 25.2 | 28.0 | 28.8 | 30.8 |
| 소모성물류비비중(%) | 54.5 | 53.5 | 53.0 | 52.5 | 51.9 | 51.7 |

주 : 소모성물류비 : 운송, 하역, 감모, 청소(포장, 가공, 보관, 일반관리비 제외)

▣ 향후계획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물류기기 구입자 및 장비 임대자에게 구입비 또는 장비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사업의 결과가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류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 특히, 한·미, 한·중 FTA 등 개방에 대비하여 농산물 물류시스템을 개선할 사업으로 WTO에서도 허용대상보조(하부구조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

다. 산지에서 생산자 조직이 결성되고 유통시설 현대화, 규모화가 됨에 따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한 기계화 증가, 소모성 경비 감소 등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작업공간 부족, 관행거래 방식 등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부피가 크고 부패가 빠른 배추 등의 신선채소류의 물류기계화 대책도 중지를 모아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에 따라 압상방지, 신선도 유지 등 품질향상과 환경친화 기능이 한층 증대되어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계속하여 관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 정부는 민간 기능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왔다. 따라서, 민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는 지원체계를 유지하겠지만, 보조금개편, 타 사업과 형평성, 물류여건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조건, 보조금액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2. 임산물 유통 개선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이우식

▣ 시행배경

임산물은 대부분 가을에 수확기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이 없어 수확 후 홍수출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장가격의 불안정은 지속되었으며, 단단계적 유통구조로 생산자는 저가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구매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지속되었다. 또한, 친환경 임산물의 수요 및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매년 증대되고 있으며, FTA 등 국제협약 등으로 국내 임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의 임산물유통체계 기반확충하고 원료상태로 유통되는 임산물의 부가가치제고를 위하여 유통·가공분야 지원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임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해 임산물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생산·유통·가격 등 다양한 임산물정보제공으로 경영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WTO 체제 출범, FTA 협상진행 이후 시장개방 등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산채류 등 값싼 외국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 산지의 전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는 직거래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95개소의 산림조합 유통조직 직매장을 통해 단기임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 집하장 17개소를 조성하여 목재수집·운반·가공기능 확대로 산지별 목재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관상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유도 및 직거래판매 유도를 위하여 현재까지 전국 주요 생산지역에 조정수유통센터 4개소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청정 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위한 산채 등 단기임산물유통센터 52개소를 지원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개선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2-3〉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 | 2008까지 | | 2009 | | 2010 | |
|------------|-----|--------|--------|--------|------|-------|------|-------|
| | 개 소 | 금 액 | 개 소 | 금 액 | 개 소 | 금 액 | 개 소 | 금 액 |
|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 52 | 28,528 | 21 | 12,828 | 18 | 9,100 | 13 | 6,600 |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천만 m³ 내외의 목재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는 어린 나무가 62%로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자급률은 낮은 실정이다. 국산 소경재의 활용을 위하여 1997년에 여주목재유통센터를, 2004년도에는 동해사업소를 준공하여 국산재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소에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 국산재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조직의 미흡 등으로 전문적인 임산물 생산자조직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바, 정부는 법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단지화·전문화된 임산물의 유통구조 조성을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공동

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산지와 시장의 출하 조절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자금 등 표준 출하자금(2010년 10억원) 및 밤,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구매자금(2010년 322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지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70개소(2010년 20억원) 지원하고, 지리적표시등록품목에 대한 명품화를 위한 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 보완시설 지원 8개소(2010년 5억원) 및 기계화가공 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가공기계장비 지원 308대(2010년 3억원)하고 있다.

최근 임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추세는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보다는 지역별 차별화·표준화된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표준출하규격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흐름을 반영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2005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2006년 3월에 양양 송이를 제1호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장흥 표고, 산청 꽃감, 정안 밤 등 32개 품목을 등록하였다. 앞으로 지역별 명품 임산물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 등 록 안 료 | | | | |
|--------------|-------------|---------------------|------------|-------------|
| 2006년(8품목) | 2007년(5품목) | 2008년(5품목) | 2009년(8품목) | 2010년(6품목) |
| 제1호 양양 송이 | 제9호 경산 대추 | 제14호 영덕송이 | 제19호 문경오미자 | 제27호 보은대추 |
| 제2호 장흥 표고버섯 | 제10호 봉화 송이 | 제15호 구례산수유 | 제20호 무주머루 | 제28호 청도반시 |
| 제3호 산청 꽃감 | 제11호 청양 구기자 | 제16호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 | 제21호 울진송이 | 제29호 정선곤드레 |
| 제4호 정안 밤 | 제12호 상주 꽃감 | 제17호 영암대봉감 | 제22호 횡성덕덕 | 제30호 거제맹종죽순 |
| 제5호 울릉도 삼나무 | 제13호 창선 고사리 | 제18호 천안호두 | 제23호 약양대봉감 | 제31호 태백곰취 |
| 제6호 울릉도 미역취 | | | 제24호 영등꽃감 | 제32호 인제곰취 |
| 제7호 울릉도 참고비 | | | 제25호 가평잣 | |
| 제8호 울릉도 부지깥이 | | | 제26호 홍천잣 | |

2003년부터 밤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을 시작하여 현재 6품목(밤, 표고버섯, 뽕은감, 대추, 조경수, 산채류)에 대하여 산지 생산현황,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 등 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업관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2010년 6억원)하고 있다.

임업인의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에 의한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임업인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2008년도까지 692개(11억원) 임가에 홈페이지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기 구축한 업인홈페이지 운영개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숲으로」임산물 종합홈쇼핑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소비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여주유통센터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orestinfo.or.kr)을 통한 임산물 가격·유통·생산기술 정보의 전파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임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밤 등 주요임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 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 활용에 의한 토양개량사업 등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식용 임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청정하고 안전한 임산물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GAP인증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을 지원(2009년 2억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임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여 지원(5개소, 1억원)하였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임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임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향후계획

원료상태로 유통되는 임산물의 다양한 가공 및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유통·가공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리적표시등록 등을 통한 임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임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유통·가격 등 다양한 임산물정보제공과 국내 임산물의 차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수산물 유통 개선

| 수산정책과 서기관 박승준

▣ 시행배경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지의 '위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도매 시장'이 주도하여 온 수산물 유통체계가 강제 상장제에서 임의 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을 기점으로 소매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불안정한 대금결제와 영세어업인의 가격 교섭력 부족 및 생산통계 부정확 등의 문제점 노정으로 공공유통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수산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과거의 생산자 위주 유통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업인의 판로기반을 늘려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유통의 주요 기능인 위판장 건립은 196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1993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위한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을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는 도매시장의 패류 및 선어의 실질 경매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에 직수탁하는 출하자에게 어상자 구입비용을 지원해 오다가 실질 경매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였다.

2005년도 말라카이트 사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주 5일제 본격 시행에 따라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졌으나, 산지 위판장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생산에서 유통으로 전환되는 산지 위판장에서 위생적인 유통처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같은 해 새로운 유통시설인 먹을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다기능 유통시설인 Sea Food Town 조성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0년도에는 수산물 유통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광특예산 세부사업인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사업으로 27개소 15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수산물 위판장 건립(16개소, 60억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4개소, 20억원),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4개소, 44억원) 및 전복일류 화상품기지개발 등 기타 유통시설(3개소 27억원) 건립 사업비로 지원되어 출하중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특히, 농특예산으로 수산시장(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하여 1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더 위생적인 유통시설로 탈바꿈하는 성과를 보였다.

▣ 향후계획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취가 제고 및 소비자에게 보다 더 위생적인 유통시설에서의 수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유통시설 개선과 부족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1. 농수산식품 부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이호재

▣ 시행배경

2009년 말 기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행정규제는 주 규제 639개, 부수규제 522개 등 총 1,161개이다. 2010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의 기초를 이어가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투자여건 개선에 정책수단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과 세계경제 질서와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투자활성화」를 추진하고, 일과 복지를 통한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성숙한 세계국가 진입을 위한 제도선진화를 추진하는 「미래대비」 등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농어업부문도 경제난 극복 및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농어업인 실수요자 등이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규제 및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발전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도 규제개혁 과제는 종전의 등록규제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농어업 현장으로부터의 각종 애로사항이나 정책 건의 등 각종 규제건의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규제개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먼저, 2010년 자체 규제개혁과제로 50건을 발굴, 선정하여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되면 규제개혁 과제로 추가 선정하는 등 규제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였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요트 계류장·마리나 시설 등 해양 레저시설을 허용하고 관광지·농어촌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1천㎡, 3층 이하 → 건폐율 40% 이하, 21m 이하)하는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함으로써 관광수익을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축산법상 모든 500마리 이상 양돈업,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금지를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축산경영을 통한 녹색성장과 환경·식수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으로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이나 농어업시설 피해에 대해 복구비용이 지원되고 있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품목의 농작물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대상품목의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현실가격과 기준단가 차이가 큰 감귤 복구비 기준단가를 인상하였고 참다래를 재해복구 대상품목에 추가하도록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고시)를 개정하였으며, 부정하게 영어자금을 융자받거나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60일 이상 어업정지 등을 받은 자에게 6개월간의 대출을 중지하던 것을 영어자금 대출 중지기간이 6개월씩 가산되는 위반행위 기준을 개선하여 기준 없이 대출중지를 6개월 가산하던 불합리한 점과 이로 인한 어민들의 가중한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미래대비 과제로서는 농수산물 관련 원산지가 농산물, 수산물, 음식점 별로 여러 개의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관리가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고자 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음식점(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원산지 관련법규를 통합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

국민부담 경감 및 편의제고를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건본 농수산물 거래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 내에 일정기준의 보관·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건본거래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개설자의 개설구역 내 보관·저장시설의 위치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보관시설 면적기준을 165㎡에서 330㎡로 완화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사용료를 거래액의 0.5%에서 0.3%로 인하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관련하여 쌀과 김치는 100㎡ 이상 음식점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닭고기 소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배달용 닭고기와 웰빙 열풍으로 소비가 많은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시행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새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각 부문에 걸쳐 폭넓게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비해 왔음에도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특정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총리실 전략과제로 삼아 추진하였다.

먼저 2010.6.7일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부처별 장·차관 참석하에 총리가 주재하는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100대 과제」를 확정·발표하였으며, 10.7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4개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 아울러, 서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규제·규정·관행 등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농어업분야 서민불편과제 68건도 발굴, 개선하였다.

▣ 향후계획

2011년은 그동안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3년 동안 성과를 분석하고, 규제개혁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2010년 중에 확정·발표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이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별로 일선현장 집행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규제개혁 교육을 통한 일선공무원의 규제개혁의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농어업인의 체감도를 높여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규제정비 과제의 효율적인 발굴과 정비를 위해서는 농어업 현장으로부터의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2. 산림 부문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장용진

▣ 시행배경

2010년도 현재 산림청 소관 규제는 모두 75개이며 이 중 산림자원의 육성 및 토지이용 규제가 34개(45%), 산불 등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20개(27%), 산림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규제가 21개(28%)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적·환경적 가치 즉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산림은 한 번 파괴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행정규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국가로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산지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규제개혁이 국정 최고의 어젠다(agenda)로 관리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도 규제개혁 방향은 산지이용 활성화, 기업부담 완화, 산림자원의 활용증대, 농산촌 현장애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우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 지방산림청별로 ‘규제개혁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최일선 기관장을 ‘현장특임관’으로 활용하여 농산촌 현장애로 및 규제개혁과제 28개를 발굴하여 적기에 개선하였으며, 이들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지이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편입비율이 10% 미만이고 집단화(3ha 이상)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산지복구비 예치방법도 매년 예치하던 것을 인상률을 적용 일괄 예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산지전용 허가·신고시 납부하던 수수료를 농림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50% 감면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기업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산지에서 굴진채광시 허가면적(2만ha 미만)에서 진입로 면적을 제외하였고, 사방사업이 아닌 공사로 인하여 사방사업이 필요한게 된 경우 소요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던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석재의 굴취·채취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을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영업활동 촉진을 도모하였다.

산림자원의 활용증대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소나무류 조림·육림 금지구역을 축소(6km→3km 이내)하고, 모두베기시 벌채면적을 상향(30ha→50ha)하는 등 산림의 벌채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입목 벌채시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표시를 하던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 효율성 및 산업용재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산촌 현장애로 분야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요건에 민간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추가하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시 4대강 양안 5km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 분수령 밖의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을 국유림에서 허용하는 등 농산촌 주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다

▣ 향후계획

국민이 체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산림규제개혁 달성을 목표로 규제개혁과제 발굴 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수요자에게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개혁 추진기반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폐지를 추구함에 있어 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 산림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제1절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 제2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제5절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 제6절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제1절 경쟁력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1. 농지은행제도

| 농지과 사무관 신지영

▣ 시행배경

농촌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지법」 개정(20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2005.12.29)을 통해 농지은행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으로는 농지유동화정보제공, 농지규모화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등이 있다. 특히 2010년부터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농지유동화정보제공

2005년 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를 구축(www.fbo.or.kr)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 등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2006년 1월부터 농어촌종합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10년 말 : 회원 수 227천명, 접속 6,186천건(3,077건/일)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은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해 농지은행이 비농가, 이농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저리의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농업인간의 교환·분합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2010년도에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1,751ha 1,507억원, 농지임대차 2,523ha 600억원, 농지교환·분합 8ha 10억원 등 총 4,282ha 2,117억원을 4,92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조 3,413억원을 지원하여 158,869ha의 농지를 규모화·집단화시켰다.

〈표 3-1〉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 구 분 \ 연 도 | 합 계 | 1990~2005까지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면 적 | 158,869 | 125,222 | 10,427 | 7,855 | 5,863 | 5,220 | 4,282 |
| 금 액 | 63,413 | 47,839 | 4,341 | 3,400 | 3,204 | 2,512 | 2,117 |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1년

특히,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2013년까지 6ha 규모의 쌀전업농 70천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쌀전업농을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31천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쌀전업농 수는 1995년 13천 호에서 2010년 70천 호로 늘어나고, 호당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2010년 5.2ha로 확대되었다.

* 쌀전업농 호당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09) 5.0 → ('10) 5.2

이는 2009년 전체 벼 재배농가 평균 경영규모 1.12ha의 4.6배이다. 또한, 2010년 쌀전업농의 벼 재배면적(361천ha)은 전체 벼 재배면적(892천ha)의 약 40%로서 쌀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이 농지의 임대를 수탁받아 전업농·창업농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과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한 농지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수탁기간을 5년 이상

으로 설정하고, 계약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으로 위 약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12,741농가에 8,127ha를 임대하여 호당 평균 0.6ha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3-2〉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 구 분 \ 연 도 | 합 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농가수 | 64,544 | 219 | 6,613 | 7,997 | 9,737 | 27,237 | 12,741 |
| 면 적 | 37,006 | 111 | 3,372 | 4,277 | 5,163 | 15,956 | 8,127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을 이용해 부채를 갚도록 한 후, 해당 농지를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다시 매입해 갈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희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업인이 부채를 갚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은 물론, 농지 경매시 정상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낙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14~19%) 대신 낮은 임차료(매매가격의 1%이내)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완화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희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0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부채 4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하였다. 또한, 매입대상을 농지 외에 농업용 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기간을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환매가격을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당초 매입금액에 정채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표 3-3〉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실적

(단위 : 호, ha, 억원)

| 구 분 \ 연 도 | 합 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농가수 | 2,900 | 183 | 444 | 490 | 635 | 1,148 |
| 면 적 | 3,883 | 311 | 629 | 696 | 878 | 1,369 |
| 금 액 | 6,670 | 422 | 953 | 1,195 | 1,700 | 2,40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촌고령화 심화,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지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 이농·전업(轉業)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창업농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용 규제 및 개발 제한으로 일반 농지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안의 우량농지를 시가로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고령은퇴 및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창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해 주는 등 농업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는 도입 첫해로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495ha(750억원)를 매입하여 589농가 465ha를(농가당 0.8ha) 임대해 주었다. 특히, 2010년 9월부터 매입비축 농지는 벼 이외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우선 임대하여 쌀 수급조절에 활용하고 있다.

▣ 향후계획

농지규모화사업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3년까지 6ha 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해 2.5~4ha 규모의 쌀전업농을 중점 지원하여 규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11년 사업목표를 14,000ha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및 수탁대상 농지 물색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보다 많은 경영위기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회생자금(농협)과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회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2011년 1,000ha의 농지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농지가격이 급락한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은행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1년부터는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 김문갑

▣ 시행배경

현대의학의 발달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켜서 노인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 나감에 따라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99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201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는 43.2%에서 49.7%로 6.5%p(45천 가구) 증가되었고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29.1%에서 34.2%로 늘어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화 10.7%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65세 이상 농가가 경영하는 경지의 72.4%는 1.0ha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고령농의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WTO·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여건하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토록 하는 대신 일정금액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25만원(연간 30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09년도 1월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

으며,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렇듯 한·미 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비준 지연,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영농 편리성, 고령농업인의 강한 농지 소유욕 등으로 사업 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었으며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다.

'10년도에는 당초 1만ha의 경영이양 신규 사업물량을 3천ha로 재조정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 경영이양대상자인 96천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지방지 116회 광고게재, 안내문 33만매, 포스터 25천매, 리플렛 48만매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97~'10년까지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경영이양 농업인 91.5천명에게 직불금 2,312억원(1인당 연간 25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65천ha를 전업농 62.3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4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표 3-4〉 경영이양 사업추진 실적(1997~2010)

| 구 분 | 예 산 | | 경영이양실적 | | | 전업농 지원현황 | | |
|-----|----------|----------|---------|----------|----------|----------|--------------|------|
| | 면 적 (ha) | 금 액 (억원) | 인 원 (명) | 면 적 (ha) | 금 액 (억원) | 인 원 (명) | 1인당 이양면적(ha) | |
| 합 계 | 계 | 97,798 | 356,810 | 91,498 | 65,041 | 251,209 | 62,290 | 1.04 |
| | 매 도 | 17,808 | 76,713 | 15,217 | 7,368 | 37,084 | 13,901 | 0.53 |
| | 임 대 | 79,990 | 257,264 | 79,012 | 57,673 | 194,077 | 61,005 | 0.95 |
| | 운영비 | - | 22,833 | - | - | 20,048 | | |

주 : 매매·임대차 중복지원자 '계'에서 제외(고령농업인 2,731명, 전업농 12,616명)

▣ 향후계획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경우 연금, 의료, 복지 분야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인 보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농업인에게는 ha당 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

행하여 왔다.

고령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대상자를 찾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11년도에는 경영이양직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신청 가능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의향 조사, 고령 경영주 농가 증감율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농업인의 만족도 조사를 향후 제도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잠재 고객 확보와 젊은 영농인에게 든든한 후원자로서 고령 농업인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미지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유통정책과 주무관 정순일

▣ 시행배경

FTA, DDA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자 단체 및 산지유통주체도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한 교섭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산지유통조직이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0년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사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대형(공동마케팅조직), 중형(전문조직), 소형(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차등 지원,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10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31개소) 및 전문조직(282개소) 등을 선정하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18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2005년도에 최초로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공모를 통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산지유통활성화자금(대출기간 3년, 이자율 1%)과 무이자 인센티브,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2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상대평가를 통해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

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 컨설팅도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계 개선안을 마련(10.7월)하여, 장기정체 조직의 지원중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조직 간 합병·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유인을 제고하고, 합병·계열화의 결과, 통합조직 또는 계열화 상위조직으로 다량의 원물이 집중되어, 산지의 시장교섭력 제고 및 취급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향후계획

산지유통사업체계 개편안(10.7월)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기정체 조직에 대한 지원중단 강화로 산지조직의 적극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고, 산지조직간 수직계열화 촉진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이 중단된 조직이 자력으로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 계열조직으로 편입(상위등급 조직에 원물 공급)하여 상위등급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산지조직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합마케팅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지유통 조직의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점유비가 '17년까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농업종합자금제도 개선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조정래

▣ 시행배경

농업종합자금은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 등이 스스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 등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산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게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추진 경과

1999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0년에는 전업농육성사업 및 품목별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원하는 시설자금 13개 사업자금을 통합하였고, 2002년에는 농기업경영자금 및 전업축산경영자금 등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운전자금인 2개 사업자금을 통합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3천만원 이상),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지원, 관광농원개발, 농촌민박마을조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2004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2천만원 이상),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농기계생산지원자금,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객토자금, 전통식품개발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2005년도에는 농기계구입자금(대당 1천만원 이상),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농기계보관창고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경우 인력 육성을 위한 집중관리 필요성에 따라 '07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

이 필요한 사업은 능동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현황

지원조건은 연리 3%,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농기계구입자금은 1년 거치 4~7년 상환이며,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표 3-5〉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 연 도 | 2000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금 액 | 1,251 | 8,233 | 9,567 | 10,202 | 12,010 | 11,050 | 12,978 |

(단위 : 억원)

●● 지원성과

농업종합자금제 도입에 따라 농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조되고, 대출기관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 결과 무리한 과잉투자와 자금의 가수요가 불식된 것은 큰 성과이다. 또한,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점도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6〉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 구 분 | 기존 지원체계 | 종합지원 제도 |
|--------|--------------|----------------------|
| 지원방식 |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농발심의회) | 대출취급기관(농협) |
| 자금지원 | 연1회 일괄 선정·지원 | 수시선정·지원, 사업평가 후 추가지원 |
| 사후관리 | 채권관리 중심 |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

▣ 향후계획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평가항목 삭제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대출절차를 표준화하고 제출서류 등을 더욱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 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 징후 사전감지 및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 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핵심인력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경영인력과 사무관 김희중

▣ 시행배경

농가인구의 감소 및 농업생산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동력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술·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고 유능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있고,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영농기반 확장을 통해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 외에도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2005년부터 잠재농업인력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선도농가에 인턴으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10년 말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던 인턴사업을 통합하였는데, 농산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해외농업인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2009년까지 이전년도에 선정하여 다음연도에 자금지원하여 선정과 지원간의 시차에 의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선정된 당해연도에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0년 후계농업경영인은 1,559명이 선정되었다. 이중 남성이 1,350명(86.6%), 여성이 209명(13.4%)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93명(31.8%), 30대가 676명(43.4%), 40대가 387명(24.8%)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95명, 전북 287명, 전남 230명, 경기 177명, 충남 174, 경남 161명 순이다.

〈표 3-7〉 2010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명, %)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
| 1,559 | 177 | 67 | 93 | 174 | 287 | 230 | 295 | 161 | 24 | 51 |
| 100% | 11.4 | 4.3 | 6.0 | 11.2 | 18.4 | 14.8 | 18.9 | 10.3 | 1.5 | 3.3 |

주: 기타는 서울 1, 부산 8, 대구 12, 인천 10, 광주 11, 대전 5, 울산 4

●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이들에게는 사업계획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리 3%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0년에는 지원대상자로 1,559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저리의 장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농산업인턴제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

턴제는 만 18세에서 44세 사이의 미취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턴자격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실무연수를 하면서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는 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농업인턴에 지급하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2010년에는 345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창업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선도농가, 전문가와 협약을 맺어 기술과 경영 등에 대한 조언 및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0년에는 131명을 선정하여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였다.

● 해외농업인턴제

2009년부터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 양성하기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농장에 파견하는 해외농업인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인턴 1인당 64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28명에게 지원하여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우수농업인 추가지원사업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 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기반 확보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0년에는 경영성과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로 630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향후계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약 2조7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31천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컨설팅,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어업법인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황규광

▣ 시행배경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 친환경 농어업, 농수산물의 안전성 요구 증가, 각종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어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함) 설립 등의 근거규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이 총 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법인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 조항도 신설한 바 있으며, 최근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시장·군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를 종전 비농업인 3/4 이내에서 최대 90% 까지 투자자가 가능하도록 출자한도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 근거 및 조직변경 근거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경영효율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 말 현재, 농어업법인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면 농업법인 수는 6,537개로 전년대비 8.9% 증가, 어업법인수는 481개로 4.0% 감소하였고,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37.7천명,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2.9천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6.5%,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7.7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규모 법인은 전체의 62.7% 수준이며, 사업유형은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은 39.8%, 유통판매는 21.5%, 가공판매는 17.4%로 나타났다. 판매액도 법인당 판매액은 14.9억원,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35.5%, 농업생산수입 29.6%, 가공업 24.4% 수준이며, 재정상태의 경우는 법인 당 자산은 15.2억원, 부채는 9.6억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73.9%로 전년(193.3%)보다 19.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ha)

| 구 분 \ 연 도 | 2008 (A) | 2009 (B) | 증 감 (B-A) | 증감률 (B/A) |
|-----------|-------------|-------------|--------------|--------------|
| 법인 수 | 6,003 | 6,537 | 534 | 8.9 |
| 종사자 수 | 35,392 | 37,681 | 2,289 | 6.5 |
| 판 매 액 | 57,901 | 72,796 | 14,895 | 25.7 |
| 경영 경지면적 | 13,801 | 19,211 | 5,410 | 39.2 |

자료 : 통계청, 2009년

어업법인의 경우도 법인당 종사자 수 7.8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64.0%이며, 사업유형과 판매액에서는 어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은 58.3%, 법인당 판매액은 10.8억원, 어업생산수입은 전체 판매액 중 40.8%를 차지하였다. 재정 상태는 법인당 자산 11.2억원, 부채 7.4억원, 자본대비 부채비율 196.3%로 전년대비 45%p 감소하였다.

〈표 3-9〉 어업법인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ha)

| 구 분 \ 연 도 | 2008 (A) | 2009 (B) | 증감 (B-A) | 증감률 (B/A) |
|-----------|-------------|-------------|-------------|--------------|
| 법인 수 | 501 | 481 | △20 | △4.0 |
| 종사자 수 | 2,793 | 2,866 | 73 | 2.6 |
| 판 매 액 | 2,935 | 3,994 | 1,059 | 36.1 |
| 양식장 면적 | 1,368 | 1,342 | △26 | △1.9 |

자료 : 통계청, 2009년

▣ 향후계획

농어업 경영,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 경영을 압박시키는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농식품모태펀드 등 창업·투자유치 활성화와 세제지원, 농어업법인에 대한 전문화된 경영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군별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사후 관리 점검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조성해 나가는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한우, 양돈, 양식업 등 생산분야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유통분야, 농약, 종자 등 농업투입재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에너지 절감 및 활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가능케 하고 외부자본에 의한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경영인력과 서기관 박영근

▣ 시행배경

FTA 등으로 급변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인에게는 전문적인 생산기술,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혁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습위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

여 선도농가 실습장, 전국대표실습장 지정 등 현장실습교육장 확충과 현장실습교육(WPL)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과 소득 증대와 연계하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정 목표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전면 경쟁체계를 도입한 공모방식으로 기관과 과정을 선정한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국외연수 운영 전문기관을 점검하고 '10년 농정방향에 부합되는 국외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예비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특성화농고 및 농대 영농 정착교육과정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 농업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농업교육 포털서비스(AgriEDU) 확대 운영 등으로 교육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마이스터제도, 농업교육프로그램인증제 등 도입과 농업교육 인적자원지표 통계조사, 농업인능력 표준점검으로 교육성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선도농가실습장 45개와 전국대표실습장 8곳을 지정 및 지정에 대한 지원을 하며,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하고, 축산실습장, IT기반 첨단농업교육센터,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그린낙농교육장 등 구축으로 교육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23개 캠퍼스에서 85개 과정의 교육을 2년 동안 40학점을 이수하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농정에 부합하도록 창업·경영·마케팅, 친환경·품목기술, 조직화·리더십·농촌, 소비자·청소년, 농업회계·경영장부, 비용절감,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37개 기관 53개 과정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전문농업교육을 운영하였다. 이주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여성농업을 연계 1:1 맞춤 농업인교육을 통한 우수 여성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업·농촌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 총 18개 기관 2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8개 기관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국외 시장개척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의 학교교육을 활성화하였다. 특성화농고 10개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학교별 특성화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4개 농고를 대상으로 교사국내외직무연수, 우수학생국외연수, 농고비전 스쿨, 전국FFK전진대회, 농고멘토링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농과대영농정착교육과정은 전국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운영으로 현장견학 및 체험, 현장실습교육(WPL), 인턴십, 학교별 연계수업, 우수학생 대상 국외연수 등을 지원하였다.

공모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과과정, 해외연수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5개 교육 유형 특성에 적합한 교육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체평가·서면평가·현장평가·강의평가/모니터링 등 4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익년도 교육기관 선정에 반영하였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 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포털서비스(AgriEDU)에 대한 웹기반 농업교육기반 확대, 서비스 보완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농업교육분야의 교육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교육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고의 기술력과 경영능력,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으로 인증하기 위한 농업마이스터 시험제도 개발, 농업교육이 농업경영체 성공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연구, 교육기획단계에서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교육프로그램인 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모델개발과 운영매뉴얼 개발연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운영을 위한 모델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준비를 위한 농업교육 학위취득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방안연구, 농업교육 관련 현황을 통계로 정리하여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농업인적자원지표 개발연구와 농업교육 전·후의 농업인 역량(능력표준)을 점검하고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 향후계획

농업교육훈련은 농업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어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등 운영으로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제 영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기관간의 경쟁이 발생하여 교육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교육비의 30% 이상을 교육생 부담으로 하여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전략에 의해서 농업 성과 중심의 실습 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 실천 중이나 농정 핵심이 농어촌 정책분야로 확

대되면서 사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교육 대상자 및 과정 확대·특화, 지역교육공동체를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체계 확립, 농어촌 지역사업과 연계하는 지역중심 상향식 교육운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축적과 능력 발전을 통해 농어촌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 경영컨설팅 지원

| 경영인력과 사무관 홍승길

▣ 시행배경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 개선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한 농업분야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였다. 컨설팅사업은 우리부의 대규모 기업농 대상 민간컨설팅, 민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농가를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공적컨설팅, 농협 등의 농업인단체 컨설팅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에게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해양수산부와의 통합으로 2009년 사업부터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업,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어촌계를 사업대상에 추가하고 어업분야 컨설팅을 담당할 컨설팅업체 인증을 통해 어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하였다. 또한 어선어업은 10톤 이상, 정치망 어업 10ha 이상 등, 양식 어업은 육상수조식 중 어류 등은 250평, 패류는 200평 이상 육상축제식은 2ha 이상 등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중규모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농업분야와 균형을 맞추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경과후 인증기간 준수여부 현지점검 및 사업수행 상황 설문조사 등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간 경쟁 및 컨설팅 질 향상을 유도하였다.

일부 서식 및 별표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재하여 지침을 간소화하고, Agrix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평가점검단(농업인재개발원)을 지정하여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컨설팅 성과에 대한 저해요소와 부실 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고,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당 사업량 제한, 컨설팅 수행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평가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산기술위주의 농어가 컨설팅을 축소하고 법인 및 조직경영체 중심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였다.

● 컨설팅 수행단계별 점검평가

2010년 994개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수행단계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행계획이 불량한 415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컨설턴트 1명 자격정지, 컨설팅업체 4곳에 주의 조치, 60개 경영체의 컨설팅 부실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다.

● 컨설팅 후 농가소득 증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컨설팅 대상 농업경영체의 10%(150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 고객관계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 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컨설팅 성과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후의 농가소득이 25.7% 증가되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표 3-10〉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비 지원현황

| 구 분 \ 연 도 | 2000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사업량(개소) | 441 | 1,000 | 1,009 | 1,080 | 1,250 | 1,448 | 994 |
| 사업비(백만원) | 3,388 | 8,000 | 8,640 | 8,640 | 9,750 | 11,200 | 10,080 |
| 국 고(백만원) | 1,227 | 4,000 | 4,400 | 4,400 | 5,000 | 5,600 | 5,040 |

▣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가, 법인, 조직경영체에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평가점검단(농업인재개발원)이 '10년 사업을 평

가 해본 결과 컨설팅 점수는 71.63점, 컨설팅 만족도점수 81.45점으로 나타났다. '11년부터 자부담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자율적 컨설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및 어업컨설팅을 활성화시키고, 컨설팅주체(지자체, 컨설팅업체, 경영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마. 농업벤처 육성

| 경영인력과 사무관 홍승길

▣ 시행배경

농업벤처는 농업,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원)를 결성하였으며, 2007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4호(200억원)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117억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실현 제8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10점을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2005년에 영남지역(경상대학교), 2006년도에는 호남지역(전남대)에 이어 2007년도에는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표 3-11〉 제9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출품자 | 시상금 | 아 이 템 |
|------------|-----|-----|--------------------------|
| 최우수 | 최영기 | 10 | 금차(金茶) 개발 |
| 우 수 (3) | 김수일 | 5 | 파손되기 쉬운 농산물의 택배포장재 개발 |
| | 정영학 | 5 | 당뇨환자를 위한 산양유 허브 요구르트 |
| | 최승국 | 5 | 초고압살균기를 이용한 비가열살균 생과일 주스 |
| 장 려 (6) | 성인환 | 3 | 인삼열매 가공하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
| | 차기설 | 3 | 연근발효 효소 |
| | 이경옥 | 3 | 생식용 콩나물 재배 및 상품화 |
| | 이대섭 | 3 | 조사료 자동 급이기 |
| | 이원호 | 3 | 송이버섯 배양균을 이용한 차 개발 |
| | 정종수 | 3 | 항산화 물질 다량 함유 쌀 맥주 |

▣ 향후계획

2011년부터는 농업벤처업무를 식품산업정책과에서 기존의 농업벤처업무에 식품업무를 추가하여 농식품관련 창업지원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벤처 업무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6.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

가. 전문임업인 육성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주무관 함홍식

▣ 시행배경

우리나라 전체산림 6,447천ha 중 68%에 해당하는 4,352천ha가 사유림으로서 소유 규모는 1인당 2.2ha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또한,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유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을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하는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육 및 육성자금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통해 임업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전문임업인 선발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을 지역사회 임업을 선도하는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수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비와 임도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시설 사업비,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장기수 조림을 위한 임야 매입비, 기타 산림경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문임업인은 2010년도에 본인사망 또는 자격포기자 등 31명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로 독립가 63명, 임업후계자 623명을 선정(선발)하여, 독립가 484명, 임업후계자 3,742명, 신지식임업인 61명을 합하여 총 4,287명을 선정(선발)하였다.

● 전문임업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에게 임업경영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국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리 1.5%~3.0%로, 상환기간 15~35년으로 융자지원하였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임업경영 능력향상과 의욕고취를 위하여 임업경영에 대한 교육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전문임업인을 선발하여 해외 선진임업국(북유럽)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 향후계획

전문임업인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금 지원확대, 융자조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세제감면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기능인 영림단 육성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조용철

▣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수령 30년 미만의 나무가 전체 산림면적의 53%를 차지하는 어린나무 위주의 숲으로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농·산촌 인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산림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업 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 영림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림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기능인력은 2017년까지 20,000명을 양성할 계획(제5차 산림기본계획) 으로, 2010년까지 911개단 8,226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39단 1,686명, 산림조합 396단 4,284명, 산림사업법인 376단 2,256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12〉 임업기능인 영림단 조직 현황

| 구 분 | 연 도 | 2008 | | 2009 | | 2010 | |
|------------|-----|------|--------|------|--------|------|--------|
| | | 단 수 | 인 원(명) | 단 수 | 인 원(명) | 단 수 | 인 원(명) |
| 계 | | 800 | 7,595 | 837 | 7,941 | 911 | 8,226 |
| 국유림 영림단 | | 142 | 1,681 | 143 | 1,854 | 139 | 1,686 |
| 산림조합 영림단 | | 393 | 4,324 | 392 | 4,275 | 396 | 4,284 |
|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 | 265 | 1,590 | 302 | 1,812 | 376 | 2,256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임업노동력은 주로 농산촌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 영림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개단 240명의 영림단이 신규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신설 영림단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통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기계톱 등 산림사업 장비 1,730점(170백만원)을 신규 영림단에 지원하였다.

신규로 양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중심 및 현장위주의 체험식 적응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업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향후계획

앞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의 확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험식 교육 훈련, 기술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 어업인력 육성

|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 시행배경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시·도(수산사무소 등)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 보급 등을 통하여 단계적(일반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운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일반후계자의 경우 1인당 ~50백만원, 전업경영인의 경우 1인당 ~7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의 경우 1인당 ~100백만원을 지원하여 1981년부터 2010년까지 18,750명에게 총 469,741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3-13〉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 구 분 | 연 도 | 합 계 | | 2009까지 | | 2010 | |
|------------------|-----|--------|---------|--------|---------|------|--------|
|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합 계 | | 18,750 | 469,741 | 18,246 | 445,799 | 504 | 23,942 |
| 일반후계자(1981년부터) | | 15,753 | 307,677 | 15,413 | 294,875 | 340 | 12,802 |
| 전업경영인(1992년부터) | | 2,850 | 148,309 | 2,727 | 141,199 | 123 | 7,110 |
| 선도우수경영인(1995년부터) | | 147 | 13,755 | 106 | 9,725 | 41 | 4,03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통계자료

▣ 시행내용 및 성과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2010년도에 240억원(504명)을 3년 거치 7년 균분으로 지원하였으며,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자를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장에 인턴으로 고용하는 수산업인턴제와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향후계획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후계인력 유도를 위해 전업경영인의 경우, 대상연령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원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집행대상사업을 당초 양식어업, 어선어업, 가공분야에서 유통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해서도 정착자금지원(2억원/인) 및 주택구입비(4천만원/인)를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제2절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1.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대구획 경지정리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시행배경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기존에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 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

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9년 봄마무리까지 국고 2조 2,438억원, 지방비 6,884억원 등 2조 9,322억원을 투자하여 112.5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3-14〉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연 도 | 목 표 | 2010까지 | | 2011 계획 | | 2012 이후 |
|----------|-----|--------|--------|-------|---------|------|---------|
| | | | 누계(%) | 누계(%) | | | |
| 사업량(천ha) | | 169.6 | 116.2 | 68.5 | 3.8 | 70.8 | 49.6 |
| 사업비(억원) | | 46,886 | 29,842 | 63.6 | 1,059 | 65.9 | 15,985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1년

▣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의향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나. 밭기반 정비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시행배경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 기반 정비를 시

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 기반 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확충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고, 2009년까지 2조 25억원을 투입하여 1차 목표면적 110천ha 중 85.4천ha를 완료하였다.

〈표 3-15〉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연 도 | 목 표 | 2010까지 | | 2011 계획 | | 2012 이후 |
|----------|-----|--------|--------|-------|---------|-------|---------|
| | | | | 누계(%) | | 누계(%) | |
| 사업량(천ha) | | 110 | 89,5 | 81,4 | 5,7 | 86,5 | 14,8 |
| 사업비(억원) | | 25,794 | 20,933 | 81,2 | 968 | 84,9 | 3,893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1년

▣ 향후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기준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밭 기반 정비사업이 국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시행배경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고,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군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9년까지 1조 7,453억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1.2천km를 완료하였다.

〈표 3-16〉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연 도 | 목 표 | 2009까지 | | 2010 | | 2011 이후 |
|----------|-----|--------|--------|-------|------|-------|---------|
| | | | | 누계(%) | | 누계(%) | |
| 사업량(천km) | | 35 | 21,2 | 60,6 | 1,1 | 63,7 | 12,8 |
| 사업비(억원) | | 29,689 | 17,453 | 58,8 | 953 | 62,0 | 11,283 |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국, 2011년

▣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추진하고, 농업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수리시설 개보수

| 농업기반과 사무관 조래청

▣ 시행배경

최근 들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에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시설의 경우 56%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용·배수로의 경우 구조물화 등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흙수로가 61%에 달하여 누수 손실이 많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또는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3-17〉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저수지 | 양·배수장 | 취입보 | 집수암거 | 관정 등 |
|--------|--------|--------|-------|--------|-------|--------|
| 계 (개소) | 69,324 | 17,569 | 7,467 | 18,114 | 2,696 | 23,478 |
| 30년 이상 | 38,867 | 16,585 | 2,647 | 14,618 | 2,243 | 2,774 |
| 30년 미만 | 30,457 | 984 | 4,820 | 3,496 | 453 | 20,704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2009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 시행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4,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410지구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중 80지구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505km를 구조물화 또는 친환경 수로 등으로 정비하였다.

〈표 3-18〉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지구, 천km)

| 구 분 | | 연 도 | 총 계 획 | 2009까지 | 2009 | 2010 이후 |
|-------|-------|-----|---------|--------|-------|---------|
| | | | | | | |
| 사 업 비 | | | 109,323 | 48,971 | 4,000 | 56,352 |
| 사 업 량 | 수 원 공 | | 4,330 | 2,090 | 80 | 2,160 |
| | 수로정비 | | 15.9 | 5.4 | 0.5 | 10 |

▣ 향후계획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정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조래청

▣ 시행배경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까지 3조 5,386억원을 투입하여 149.4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이상 기후 여건과 지방재정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88천ha에서 232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3-19〉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구 분 | 연 도 | 목 표 | 2010까지 | | 2011 계획 | | 2012 이후 |
|----------|-----|--------|--------|-------|---------|-------|---------|
| | | | | 누계(%) | | 누계(%) | |
| 사업량(천ha) | | 232.5 | 149.4 | 63.4 | 4.1 | 66.0 | 79.0 |
| 사업비(억원) | | 75,610 | 35,386 | 46.8 | 1,801 | 49.2 | 38,423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1년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제도장,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등 3,490지구(국가관리 206지구, 지방관리 3,284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1,521지구를 완료하였다.

▣ 향후계획

최근 기상여건 변화와 논에서의 작목 다양화에 따라 '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밭(원예)작물 배수개선 시범사업(4지구)의 중간평가를 통해 재해대비 배수개선 설계기준 변경(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구축·보전할 것이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

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바. 농촌용수 개발

| 농업기반과 사무관 유재중

▣ 시행배경

농촌용수 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영농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여전히 저수지·양수장 등의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를 준공 위주로 추진하는 등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면적은 1,010천ha로 농업용수 개발에 의하여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806천ha(79.8%)이고, 비수리답(천수답) 면적은 204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04천ha(49.9%)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3-20〉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 구 분 \ 연 도 | 단 위 | 2000 | 2003 | 2006 | 2009 |
|-----------|--------|-------|-------|-------|-------|
| 답 면 적(A) | 천ha | 1,149 | 1,127 | 1,084 | 1,010 |
| 수 리 답(B) | 천ha | 880 | 878 | 859 | 806 |
| | (B/A)% | 76,6 | 77,9 | 79,2 | 79,8 |
| 수리안전답(C) | 천ha | 421 | 440 | 478 | 504 |
| | (C/A)% | 36,6 | 39,0 | 44,1 | 49,9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물이 부족한 수혜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67개 지구에 1,900억원을 투입하여 1개지구 0.3천ha를 준공하였고, 2011년도에는 66개 지구에 1,729억원을 투입하여 0.1천ha를 준공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3-21〉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 구 분 \ 연 도 | | 총계획 | 2010까지 | 2011 계획 | 2012 이후 |
|-----------|----------|-------|--------|---------|---------|
| 중 규모 | 사업량(천ha) | 107,5 | 61,3 | 0,1 | 46,1 |
| | 추진율(%) | 100 | 57,0 | 57,1 | |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국고 12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는 국고 149억원을 투입하여 0.3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3-22〉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 구 분 \ 연 도 | | 총계획 | 2010까지 | 2011 계획 | 2012 이후 |
|-----------|----------|------|--------|---------|---------|
| 소 규모 | 사업량(천ha) | 11,0 | 1,1 | 0,3 | 9,6 |
| | 추진율(%) | 100 | 10,0 | 12,7 | |

● 지표수 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국고 548억원을 투입하여 0.9천ha를 준공하였고, 2011년에는 국고 632억원을 투입하여 1.1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3-23〉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 구 분 | | 연 도 | | | |
|--------|----------|------|--------|---------|---------|
| | | 총계획 | 2010까지 | 2011 계획 | 2012 이후 |
| 지표수 보강 | 사업량(천ha) | 31,8 | 27,6 | 1,0 | 3,2 |
| | 추진율(%) | 100 | 86,8 | 89,9 | |

▣ 향후계획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 등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하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농촌경관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으로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 부가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강수가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21세기에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목적이 다각화되고 새롭게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연간 강수량의 변동폭이 커지고 홍수와 가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양한 용수 수요의 증가와 안정적인 용수가 공급되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및 간척

▣ 4대강새만금과 서기관 김동권 /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형주

▣ 시행배경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은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대부분 단일 목적의 개별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하여, 1970년대부터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즉,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사업을 한 지구 내에서 동시에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이 국가사업을 위탁·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로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육지부의 농업개발과 해안부의 간척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3-24〉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지구 개발 유형

| 구 분 | 지 구 명 | 개 발 유 형 | 재 원 |
|--------------------|---------------------------------|--|-------------------|
| 육지부 (4) | 금강Ⅱ, 미호천Ⅱ 홍보, 영산강Ⅳ | 기존 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농 특 회 계 |
| 해안 + 육지부 (5)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옹, 시화, 새만금 |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옹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 농 지 관 리 기 금 |

▣ 시행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도입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총 24지구 293천ha를 추진하여 2009년까지 15지구 162천ha를 완료하고 현재는 금강Ⅱ지구 등 9지구 131천ha를 시행중에 있다.

시행중인 사업지구에 '10년까지 총 5조 9,087억원을 투입하여 급수면적 확대 13,661ha, 경지정리 11,035ha, 배수개선 1,320ha, 간척농지 8,000ha 조성 등 부분준공을 실시하여 한해·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가 '10년 마무리됨에 따라 도로를 개통하여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33.9km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기네스월드레코드)을 받아 우리의 간척 기술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방수제공사 착수를 통해 내부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종 연결공사(물막이)를 완료한데 이어 방조제 완공을 위해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부토지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부토지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 공급과잉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다양한 간척지 수요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2008년도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새만금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반영하였다.

〈표 3-25〉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 지 구 별 | 위 치 | | 개발면적 (ha) | 사업기간 | 총사업비 (백만원) |
|----------|-----|--------|--------------|-----------|---------------|
| | 시 도 | 시 군 | | | |
| 계(15지구) | | | 161,667 | | 1,376,806 |
| 금 강 | 전 북 | 부여, 익산 | 12,148 | 1970~1976 | 16,823 |
| 평택 | 경 기 | 평택, 화성 | 18,419 | 1970~1977 | 37,657 |
| 영 산 강(Ⅰ) | 전 남 | 나주, 담양 | 34,500 | 1972~1979 | 81,238 |
| 경 주 | 경 북 | 경 주 | 1,140 | 1974~1977 | 4,916 |
| 계 화 도 | 전 북 | 부 안 | 2,467 | 1974~1979 | 12,521 |
| 창 념 | 경 남 | 창 념 | 2,269 | 1975~1981 | 17,358 |
| 임 진 | 경 기 | 파주, 고양 | 7,185 | 1975~1983 | 45,807 |
| 남 강 | 경 남 | 진주, 함안 | 5,754 | 1977~1985 | 61,903 |
| 낙 동 강 | 경 북 | 안동, 예천 | 3,600 | 1978~1984 | 23,029 |
| 미호천(Ⅰ) | 충 북 | 음성, 진천 | 11,554 | 1977~1989 | 104,871 |
| 논 산 | 충 남 | 논산, 공주 | 9,938 | 1978~1990 | 94,035 |
| 금 강(Ⅰ) | 전 북 | 서천, 군산 | 하구둑 | 1983~1990 | 101,000 |
| 삼 교 천 | 충 남 | 아산, 당진 | 24,574 | 1975~1994 | 235,546 |
| 대 호 | 충 남 | 서산, 당진 | 7,419 | 1980~1996 | 185,630 |
| 영 산 강(Ⅱ) | 전 남 | 목포, 나주 | 20,700 | 1976~1998 | 354,472 |

▣ 향후계획

2011년도에는 금강Ⅱ지구 등 시행중 9지구에 대해 국고(농특회계) 715억원, 농지관리기금 1,981억원 등 총 2,696억원을 투입하여 간척농지 895ha, 경지재정리 200ha 등을 부분준공하고, 가뭄상습지역 2,819ha에 대한 용수개발을 신규착수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은 '10년도에 착수한 방수제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대규모농어업회사가 입주할 농업용지도 '11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다. 아울러 방조제 및 그 주변에 조성된 다기능 부지를 민간자본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착수한 지 14~22년이 경과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 방식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 중간성과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에도 타당성 재조사, 심층평가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진

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심층평가(2008~2009.7월 KDI 및 시장경제연구원) 및 화옹지구 타당성재조사(2009년 KDI)를 실시하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당년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3-26〉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 지 구 별 | 위 치 | | 개발면적 (ha) | 사업기간 | 총사업비(억원) | |
|--------|------|-------|--------------|---------------|---------------|--------|
| | 시도 | 시군 | | | | |
| 계(5지구) | | | 72,608 | | 79,072 | |
| 영산강Ⅲ-1 | 전 남 | 영암·해남 | 13,160 | 1995~2015(21) | 6,255 | |
| 영산강Ⅲ-2 | 경 남 | 해 남 | 7,840 | 1997~2014(18) | 4,069 | |
| 화옹 | 경 기 | 화 성 | 6,212 | 1991~2012(22) | 9,035 | |
| 시화(대송) | 경 기 | 안 산 | 4,396 | 1998~2012(14) | 4,291 | |
| 새만금 | (외곽) | 전 북 | 부안, 김제, 군산 | 41,000 | 1991~2010(20) | 29,490 |
| | (내부) | 전 북 | 부안, 김제, 군산 | - | 1909~2020(12) | 25,932 |

이와 더불어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지구별 부분 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준공 간척지 또는 준공 후 미 처분된 간척지는 기존의 벼농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축산·원예 등 다양한 농업적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 고소득 대규모 농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2. 농업의 기계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김규욱

▣ 시행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기계화는 농기계의 개발, 보급 촉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기계 구입비용의 70~90%를 저금리로 2009년에는 총 6,20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7개 농업기계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안전장치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확인을 받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농기계의 이용 효율을 높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 60개소, 지역농협 665개소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의 보급 촉진과 이용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논농업은 건조를 제외하면 거의 완전한 기계화를 달성하였으며, 지역농협 임대사업소를 통해 벼 재배면적의 약 8%인 7만7천ha에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였다.

다만, 아직도 품목, 농작업이 다양한 밭작물 재배에는 경운, 정지를 제외한 파종, 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이 지연되어 밭농업 기계화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 등으로 농기계의 이용률도 낮은 편이다.

▣ 향후계획

2011년에는 농기계 구입 자금을 융자하여 오래된 농기계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각 임대사업소에 임대용 농기계를 더욱 확충하여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나갈 것이다.

3. 농업시설의 현대화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식량산업과 사무관 문석호

▣ 시행배경

정부는 1991년부터 쌀 주산지에서 벼를 일괄처리(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 과정)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쌀 품위향상 및 산지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된 RPC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1년까지 328개소(농협 200, 민간 128)가 설치한 후 2002년부터 쌀 가공시설 과잉문제가 대두되어 신규설치 지원은 중단되었다.

한편, RPC의 수확기 농가벼 산물처리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건조·저장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5년부터는 벼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을 설치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전국에 1,206개소를 지원하였다.

▣ 향후계획

2011년에는 건조·저장시설 29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국고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화된 통합 RPC 시설지원(14개소, 63억원) 및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위성 증설시설 지원(10개소, 18억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5개소, 8억원)할 계획이다.

〈표 3-27〉 연도별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단위: 개소, 억원)

| 구분 \ 연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계 |
|---------|------|------|------|------|------|------|------|------|------|------|------|------|------|------|------|------|-------|
| 사업량 | 22 | 25 | 64 | 81 | 90 | 85 | 76 | 81 | 44 | 71 | 50 | 110 | 110 | 110 | 104 | 83 | 1,206 |
| 국고보조 | 38 | 36 | 87 | 118 | 164 | 190 | 145 | 157 | 79 | 126 | 93 | 249 | 258 | 253 | 239 | 207 | 2,439 |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 원예경영과 서기관 박희수

▣ 시행배경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작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절실하다. 또한, 시장개방이 진행되면서 국내산 원예·특용 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제어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있다.

해마다 기상재해로 인한 시설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원예특작 시설 내재해시설 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도면 45종을 개발·보급해 재해경감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도부터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 및 시설 증개축을 통해 고품질의 시설원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제공

2007.4월부터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예·특작시설 관계 전문기관에서 조사·개발한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 ‘내재해형 규격시설’에 맞는 설계도·시방서 48종을 개발하고 농업기술지도기관인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여 재해경감 기반을 조성하였다.

●● 시설원예 품질개선

원예전문생산단지 중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되어 노후화가 심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통해 기존시설의 현대화, 시설 증·개축 등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8년 9,841천㎡, 2009년 1,450천㎡, 2010년 4,211천㎡에 대하여 지원하여 채소, 과채류 및 화훼류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표 3-28〉 농지임대수탁사업 추진실적

(단위 : ㎡)

| 연도별 | 계 | 현대화 | 증개축 |
|------|-----------|-----------|---------|
| 2008 | 1,387,531 | 1,113,458 | 274,073 |
| 2009 | 1,449,868 | 1,130,112 | 340,756 |
| 2010 | 4,210,602 | 3,783,185 | 427,417 |

▣ 향후계획

2011년에는 기존의 내재형 규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규격은 폐기하고, 품목별·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강도 변화기준에 맞는 모델을 추가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 재배 재활용 시설 등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인삼계열화 사업 등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과 함께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다. 축산시설 현대화

|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홍식

▣ 시행배경

2009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한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섬유질 및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도축·가공·판매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LPC)을 1994~2001년까지 전국에 총 7개소를 건설·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도축장에서 지육으로 유통되는 낙후된 유통체계를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되었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이 실현되었다. 또한, HACCP 제도 운용으로 도축장 등 축산물 생산시설의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었다. 또한, 2010년(3개소)부터 모든 번식전문 농장을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자돈 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

* LPC 건설비 : 총 156,550백만원(융자 89,612, 자부담 등 66,938)

* 축산물 생산시설(도축장·축산물 가공업체 등) 시설자금 예산 : (06) 24,450백만원 → (07) 18,450 → (08) 31,041

* 축사 현대화시설자금 지원 예산 : (09) 99,539백만원 → (10) 114,728 → (11) 163,255

▣ 향후계획

한·미, 한·U FTA에 대비하여 축산농가가 조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축사시설

에 대해 2020년까지 편성된 증장기 자금지원 계획을 2017년까지 조기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11년에도 4개소의 모돈 번식전문 농장 설치를 지원하여 양돈농장의 전문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까지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을 70개소 설치하고, 녹색성장 대비 에너지화 시설을 2013년까지 15개소를 확대하고, 퇴·액비 이용활성화 및 수요확대를 위해 음식 잔재물 등의 소화액을 퇴·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을 개선하고 액비살포 지역을 농경지 및 초지 외에 골프장과 임야에 추가할 계획이다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추진

▣ 시행배경

우리 어촌은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어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어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인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 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개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9〉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형태 | 사업내용 |
|------|------------|---------|--------|--------------------|---------------------|
| 지자체 | 1994~2013년 | 8,795억원 | 230개권역 | 국비 70%, 지방비 30% |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

▣ 시행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어촌의 항·포구를 축으로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

편하였다.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 등으로 어촌종합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8,795억원 중 2010년까지 6,531억원(국고지원 3,814억원)을 투자하여 173개 권역은 완공하고 25개 권역은 사업추진(완공률 75%)중에 있다.

〈표 3-30〉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원)

| 구 분 | | 연 도 | | | | | |
|--------------|-------|---------|--------|--------|--------|--------|---------|
| | | 2007까지 | 2008 | 2009 | 2010 | 2011 | 2011 이후 |
| 어촌종합 개발사업 | 사 업 량 | 152(24) | 8(12) | 10(13) | 3(16) | 7(25) | 50 |
| | 사 업 비 | 562,062 | 38,653 | 25,831 | 26,457 | 39,484 | 187,044 |

주 : ()내는 계속지원대상 권역수임.

사업의 지원규모를 보면, 1단계 사업 160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당 평균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 70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중·소 권역으로 구분, 권역당 최대 50억원 까지 증액하여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기반시설이 가능토록 하였다.

▣ 향후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사업이면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지역별 특성에 맞게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어촌을 생산과 휴양이 가능한 「어촌복합생활공간」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1. 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김경미

▣ 시행배경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 참여도의 확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식품산업은 농어업 후방 관련 산업으로서 농수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수산물의 가공 및 의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8년 2월 농림수산식품부를 출범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존의 산지 가공산업과 전통식품에 대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대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식품산업 육성 근거법인 「식품산업진흥법」을 2007년 12월 27일 제정·공포하였고, 2008년 6월 28일 동 법의 시행에 이어 2008년 11월 13일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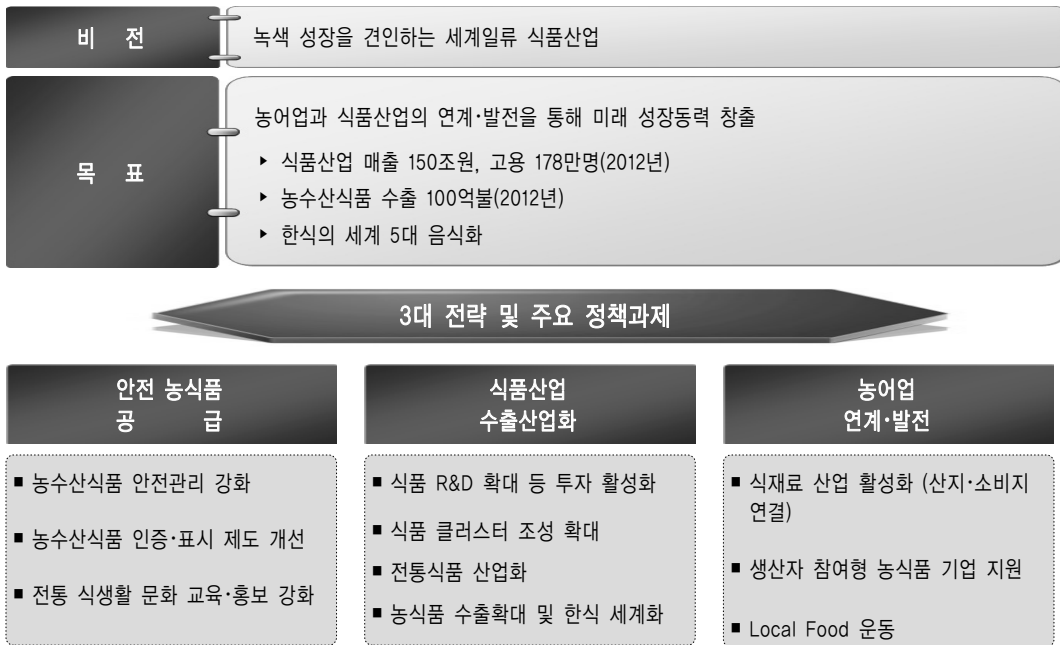
▣ 시행내용 및 성과

2008년 11월 수립·발표한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의 식품산

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 기준 100조원인 식품산업시장을 '12년까지 150조원으로 확대, 38억불 수준인 농수산식품 수출을 '12년까지 100억불로 증가, 우리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성과 지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으로는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둘째, 세계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강화하며, 셋째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①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 강화, ② 식품 R&D투자 확대, ③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지원, ⑤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 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 농어업·식품산업 연계 등 7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비전, 목표 및 전략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표 3-31〉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비전·목표·전략



동 종합대책을 토대로 농식품 100억불 수출계획,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고, '09.2월 식재료 수출활성화 기본계획, '09.4월 한식세계화 세부 추진전략, '09.6월 식품산업 R&D 중장기 계획, '09.8월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특히, 2009년 12월 30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0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을 토대로 술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경영개선 지원, 제조면허 추천, 사업자단체 설립,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막걸리의 경우 2009년 히트상품 1위로 선정되어 우리 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농어업은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동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의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10년 7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원료조달,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앞으로 정부는 '12년까지 이와 같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곳을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책 금융 지원 강화, R&D 투자 강화, 창업촉진 및 규제완화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계획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및 분야별 추진과제를 토대로 식품산업 진흥 기반을 확충하고 전략품목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그간 마련된 식품산업 육성 법적·제도적 기초를 토대로 성장단계 진입 모색, 시장 변화 등을 감안하여 종합대책을 대체하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과 농어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임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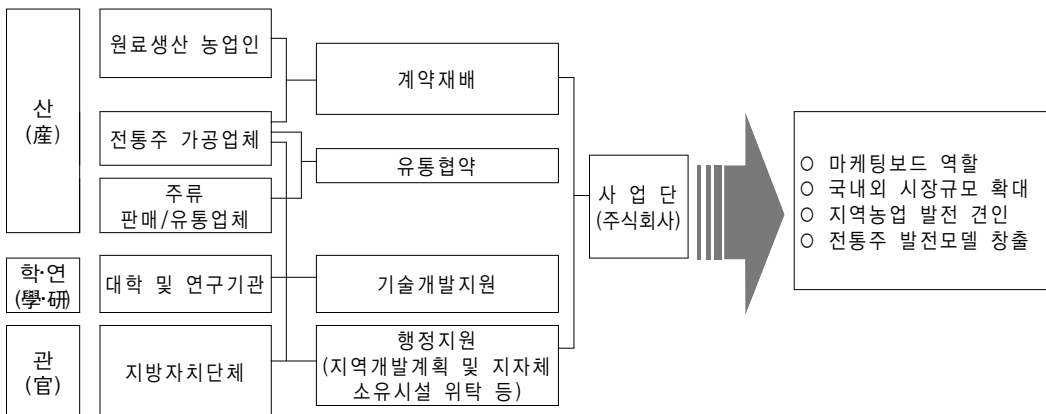
▣ 시행배경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과거 생산 위주의 농정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적 농정시스템을 가동하며, 창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05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사업의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농수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특산물을 R&D를 통해 고차 가공하는 등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지방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표 3-3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전통주) 운영 모델(예시)



지원분야는 사업단 컨설팅, 인력양성,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분야」와 사업단 자체 공동브랜드 개발,

상품개발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05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¹⁾은 3년 동안 20개 사업단에 총 54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시행 주체의 교육활동 및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협력 문화기반 조성, 농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 수요자 중심의 농림사업 패키지화, 지방농정과 농산업체간의 대화채널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업단간의 경쟁체제 확립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단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08년에는 18개 사업단에, '09년에는 15개 사업단에 국비를 추가지원 하였다.

'08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인 클러스터 개념 이해 부족과 추진체계 구축 미흡, 책임성·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을 보완하는 본 사업추진 방안 마련하여 22개 본 사업단²⁾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09년부터는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단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사업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12개 사업단³⁾을 선정하여 지원중이다.

'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에 따라 식품부문을 중점 육성·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농어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지도·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각 사업단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 1) 시범사업단(20개) : 안성마춤, 포천 전통한과마을, 하이록한우, 백두대간농업포럼, 영동포도, 괴산 친환경청정고추, 아산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한산모시, 장수사과, 정읍환원순환농업, 임실 낙농(치즈), 보성녹차, 함평 과학농업, 전남 친환경쌀, 경북한우, 풍기인삼, 경남친환경쌀, 하동녹차, 경남양돈, 제주 감귤
 - 2) 본 사업단(22개) : 화성 웰빙떡, 강원 영동 한우령, 흥천 늘푸름 한우, 충북 친환경 축산, 서산 생강, 논산 예스민 딸기, 홍성 백년대계 한우, 진안 친환경한방, 무주 반딧불 산머루, 남원 친환경 흑돈, 완주 감, 영암 무화과, 곡성 멜론, 신안 시금치, 구례 산수유, 무안 황토고구마, 경산 종묘, 상주 고랭지포도, 영천 와인, 남해 보물섬 시금치, 경남 서북부 한우, 제주 마(馬)산업
 - 3) 광역사업단(12개) : 팔당클린 농식품, 산우리 재래돼지, 육품정 육우,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청보리를 활용한 참예우, 청보리 녹색산업, 녹색한우 명품화, 전남 딸기신산업, 감 고부가가치, 청정 약용작물, 제주 넓치, 우리밀 산업화

▣ 향후계획

'11년에는 식품산업과 연계성이 강한 사업단을 신규로 선정하고 '08, '09년에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을 평가하여 우수사업단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정책 Feed-back 시스템을 강화하여 각 사업단이 클러스터 산업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 3-33〉 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 | 〈1단계〉 클러스터前단계 | 〈2단계〉 클러스터구축단계 | 〈3단계〉 클러스터산업화단계 |
|--------------|--|---|--|
| 발전 단계 | <p>지역농업 가치발견</p> | <p>클러스터 구축</p> | <p>클러스터 發顯</p> |
| 발전 목표 | 지역농업자원 발굴과 차별화 요소의 극대화 | 지역농업주체간 네트워킹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산업화 달성과 성과 도출 |
| 핵심 활동 | -특성화 전략 선택 -생산,특화품목,마케팅,농촌 관광 등 농산업전반에서 특화요소의 전략적 선택 | -주체간 역할분담 -지역농업 코어(Core)구축, 핵주체 구축 -핵심 인재(人才)육성 | -농산업 확장 (1차+2차+3차+@) -본격적인 지역농업 마케팅 실천 -신사업(新事業)도입 |
| 지원 사업 | -품목육성 정책 -마케팅조직육성 정책 -생산유통기반 구축 | -클러스터 구축지원 -지역특성화교육 -브랜드육성 | -R&D추가 지원 -패키지(Package)지원(생산 → 마케팅) |
| 지원 체계 | <p>농업종합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업클러스터육성 지역농업 주체 육성 마케팅,산업화 기반구축 품목,생산 기반 구축 | | |

3. 종자산업의 육성

▣ 시행배경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영세한 종자업체들이 첨단화·규모화되어 가는 연구시설과 장비구축에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육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를 갖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지역 54ha를 연구단지 부지로 선정하여 조성중에 있다.

또한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참고로 국내 종자업 등록 업체수는 2010.12월 말 현재 950개로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34〉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 연도 \ 구분 | 계 | 식량 | 채소 | 과수 | 화훼 | 버섯 | 뽕 | 기타 |
|---------|-----|----|-----|-----|-----|-----|----|-----|
| 2002 | 485 | 8 | 93 | 188 | 58 | 100 | 18 | 20 |
| 2004 | 571 | 16 | 117 | 210 | 78 | 104 | 20 | 26 |
| 2006 | 736 | 18 | 163 | 235 | 110 | 115 | 26 | 69 |
| 2007 | 813 | 25 | 182 | 249 | 126 | 123 | 26 | 82 |
| 2008 | 871 | 33 | 189 | 257 | 139 | 126 | 28 | 99 |
| 2009 | 819 | 37 | 173 | 250 | 121 | 110 | 30 | 98 |
| 2010 | 950 | 35 | 197 | 283 | 152 | 130 | 30 | 139 |

한편,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종자유통제도 등 실체법적 규정과 품종보호와 관련한 절차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전부개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안)으로 분리하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종자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포함되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은 품종보호대상작물의 모든 식

물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제정된다.

또한,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신품종 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정책효과와는 별도로 종자수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하여 '10.12월 말 현재 종자수출액은 25백만불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다. 다만, 수출종자 품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을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보호제도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출원 건수가 세계 8위 수준일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0.12월 말 현재 품종보호등록은 3,385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5〉 작물별 품종보호 등록현황

(단위: 건)

| 작물 | 국 내 | | | | | | 외 국 | | | | 계 | | | | | |
|------|-------|-----|-----|-----|-------|----|-----|----|-----|----|-------|-----|-------|-----|-------|----|
| | 계 | 개인 | 업체 | 지자체 | 국가 | 기타 | 계 | 개인 | 업체 | 국가 | 계 | 개인 | 업체 | 지자체 | 국가 | 기타 |
| 화훼류 | 958 | 195 | 63 | 311 | 379 | 10 | 972 | 12 | 960 | 0 | 1,930 | 207 | 1,023 | 311 | 379 | 10 |
| 식량작물 | 604 | 15 | 20 | 44 | 485 | 40 | 2 | 0 | 2 | 0 | 606 | 15 | 22 | 44 | 485 | 40 |
| 채소류 | 505 | 14 | 380 | 26 | 64 | 21 | 2 | 0 | 2 | 0 | 507 | 14 | 382 | 26 | 64 | 21 |
| 과수류 | 148 | 60 | 18 | 9 | 58 | 3 | 1 | 0 | 1 | 0 | 149 | 60 | 19 | 9 | 58 | 3 |
| 특용작물 | 126 | 1 | 7 | 9 | 106 | 3 | 1 | 0 | 1 | 0 | 127 | 1 | 8 | 9 | 106 | 3 |
| 버섯류 | 46 | 12 | 4 | 18 | 11 | 1 | 2 | 1 | 1 | 0 | 48 | 13 | 5 | 18 | 11 | 1 |
| 사료작물 | 18 | 0 | 0 | 0 | 18 | 0 | 0 | 0 | 0 | 0 | 18 | 0 | 0 | 0 | 18 | 0 |
| 계 | 2,405 | 297 | 492 | 417 | 1,121 | 78 | 980 | 13 | 967 | 0 | 3,385 | 310 | 1,459 | 417 | 1,121 | 78 |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유중인 농업유전자원은 291천점('10년말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작물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이용형질 특성평가는 15%('09년) 수준에서 18%('10년)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향후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육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종자산업법을 분리 제·개정하여 품종보호대상작물의 모든 식물 확대에 대비하고, 종자산업의 육성과 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활용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중인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2013년까지 '생명자원 통합 DB'를 구축하여 생명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검색부터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종축산업의 육성

| 축산정책과 사무관 서재호

▣ 시행배경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주요 가축 중심으로 추진한 가축개량 시책을 살펴보면, 한우개량 부분에서는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한우 육종농가는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된 암소 50마리 내외(목표 100마리 이상)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호 내외로 총 63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

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6,881마리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여 검정했다. 이 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마리씩 선발하여 인공수정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육종농가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2개소(농가 48, 도센터 4)를 선정하였고, 2010년엔 11개(농가 10, 도센터 1)를 선정 추진하였다.

둘째, 2010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사업을 통해 암소개량에 의지가 있는 한우농가 및 사업단을 중심으로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육질조사 및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우수한 암소개량집단 구축하여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01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3,871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75,762마리에 대해 암소검정(초음파, 친자확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45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사업참여 농가를 12천호(200천마리)까지 확대하여 한우암소능력검정 및 평가로 한우 농가 고능력암소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및 계획교배에 의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표 3-36〉 주요 가축개량 추세

| 구 분 \ 연 도 | 2000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한 우 | | | | | | | |
| 18개월 체중(kg) | 509.6 | 564.5 | 571 | 567 | 575 | 572 | 553 |
| 1등급 출현율(%) | 24.8 | 47.9 | 44.5 | 50.3 | 54.0 | 56.7 | 63.1 |
| 젖 소 | | | | | | | |
| 검정농가 (초산우) | 8,086 (7,445) | 9,014 (8,142) | 9,271 (8,362) | 9,556 (8,554) | 9,598 (8,553) | 9,563 (8,527) | 9,638 (8,584) |
| 돼 지 | | | | | | | |
| 일당 증체량(g) | 663 | 638 | 640 | 650 | 647 | 657 | 678 |
| 닭 | | | | | | | |
| 산란계 산란지수(개/년) | 279 | 320 | 312 | 318 | 319 | 319 | 321 |
| 육용계 체중(6주, g) | 2,300 | 2,650 | 2,530 | 2,644 | 1,974 (5주) | 1,950 (5주) | 1,991 (5주) |

- 한우의 경우 고급육에 대한 소비자 기호 증가로 증체량보다는 육질위주의 고급육 생산 중심으로 개량방향 전환으로 체중 증체가 정체기를 맞고 있음
 - 한우 씨수소 육질선발 강화('07) : (육량1:육질1) → (육량1:육질3)
 - 한우 18개월령 연간 증체량 : ('92~'04) 5.4kg/년 → ('04~'10) 4.1kg/년

그밖에 2010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46마리와 보증씨수소 24마리를 새로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55마리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2,229천마리 분을 번식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젖소개량 부분에서는 검정을 받는 낙농가 3,504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228,546마리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검정비 총 2,144백만원을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를 3마리 선발한 것을 포함하여 보증씨수소 총 17마리를 확보하여 국내산 젖소 정액 363천마리 분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 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돼지개량 부분의 성과를 보면 듀록 수퇘지의 경우 농장검정성적을 기준으로 일당 증체량이 2000년 663g에서 2010년 678g으로 2.3%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추진중인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의 우량종축 선발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듀록 수퇘지의 등지방 두께의 경우 2000년 13.0mm에서 2010년 12.4mm으로 0.6m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 개량 부분에서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2000년도 279개에서 2010년 321개로 15.0% 향상되었으며, 2002년 이후 산란지수는 317개 수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종돈장, 종계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돼지개량은 규모 있는 종돈장의 경우 자체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종돈장은 종돈을 수입한 뒤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검정을 통해 종돈장에 우량종돈의 선발·계획교배의 자료를 제공하고 양돈농가에는 종돈 선택지표를 제공하여 양돈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닭의 경우는 원종계를 수입하는 종계장에서 닭경제능력검정소에 검정을 의뢰하여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 검정소부지가 노후화되고 주변여건이 열악하여 매각처분하고 이전을 검토중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종축장(종돈·종계장)의 청정화·규모화를 유도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종축장(종돈·종계장)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종축장 인증을 시작하였다.

▣ 향후계획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축종별 가축개량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할 계획이다.

한우개량 부분은 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육질 중심 개량체계로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량한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마리수를 400마리(보증씨수소 20마리 선발)에서 2013년까지 800마리(보증씨수소 30마리 선발)로 확대하여 선발 강도를 강화하고,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를 12천호(200천마리)까지 확대하여 수소 중심의 개량에서 암·수 동시개량으로 개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젖소개량 부분에서는 산유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경제수명연장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낙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량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검정농가의 혈통비율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7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지원은 종전과 달리 보증씨수소 선발 등에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까지 청정육종농가 20호를 선정하고 고능력수정란(300개/년)을 이식하여 2017년까지 보증씨수소를 확대생산(5마리/년)하고,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종자소 유전평가(인터블)에 참여하여 국내환경에서의 한국보증씨수소의 객관적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써, 고효율개량, 유전자원 자립화 및 국산정액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개량의 경우 청정화된 종돈장을 대상으로 종돈장별 최우수 종돈을 선발하고, 그 종돈의 정액을 여러 농장과 공유, 유전적 연결을 도모하여 국가단위평가를 통해 우량종돈 생산을 위한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종돈장 및 우수정액등 처리업체 인증을 통해 청정·우량종돈(정액)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장검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종돈장 확대 유도하고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 등 정책사업을 검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닭 개량은 종계 대부분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으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닭능력검정소 매각에 따른 검정소 신축은 관련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 등을 감안하여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종축시설현대화사업을 종축시설전문화지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종축장(10개소 이내)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참여 전문종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 등을 개소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5.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봉현

▣ 시행배경

식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식품을 선호하는 바람을 타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수산식품의 소비도 증가하여 조리가 간편하고 편리한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고급화·다양화·건강 지향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고품질의 수산식품산업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으로서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WTO DDA 체제 출범 및 FTA 확대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다양한 수산가공품의 공급을 위해 기존 수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신설을 통하여 수산가공품의 위생·안전 확보는 물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국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자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물 중심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68개소, 205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1개소, 15억원), 젓갈타운 조성(3개소, 56.4억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현대화(1개소, 2.5억원)등 총 73개소에 대해 국고 278억 96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 소비자들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풍부한 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10년도 10억원, '08~'11년),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조성('10년도 23.6

억원, '09~'13년),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산학관연구센터 건립('10년도 11.5억원, '09~'10년),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 건립('10년도 2.5억원, '10~'12년), 여수 수산물종합센터 조성('10년도 20억원, '09~'12년),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10년도 10억원, '09~'12년) 및 영광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10년도 10억원, '09~'12년) 등 총 7개소에 94억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우수 수산물 확대 보급을 위한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이 지난해 10개(종전 7개) 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0년 말 현재 친환경 수산물 4,446톤을 출하함으로써 식품 안전성과 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

〈표 3-37〉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

| 구 분 | 연 도 | 인 증 실 적 | | | 비 고 |
|------|-------|---------|-------|-------|-------------------|
| | | 2009 | 2010 | 증(Δ)감 | |
| 인증건수 | 수 산 물 | 2 | 15 | 13 | |
| | 수산가공품 | - | 6 | 6 | |
| 인증업체 | 수 산 물 | 2 | 15 | 13 | |
| | 수산가공품 | - | 6 | 6 | |
| 인증품목 | 수 산 물 | 1 | 3 | 2 | 굴, 김, 미역, 톳 |
| | 수산가공품 | - | 3 | 3 |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
| 출하실적 | 수 산 물 | - | 4,446 | 4,446 | 김 3,849톤, 미역 597톤 |
| | 수산가공품 | - | - | - | |

주: 1) 인증 수산물(양식):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2) 인증 수산가공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표 3-38〉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등록번호 | 등 록 일 | 등록명칭 | 등 록 자 |
|-------|-------------|---------|----------------|
| 제 1 호 | 2009. 2. 25 | 보성벌교 꼬막 | 보성벌교꼬막영어조합법인 |
| 제 2 호 | 2009. 2. 25 | 완도 전복 |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
| 제 3 호 | 2009. 2. 25 | 완도 미역 | (사)완도군미역협회 |
| 제 4 호 | 2009. 2. 25 | 완도 다시마 |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
| 제 5 호 | 2009. 2. 25 | 기장 미역 |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
| 제 6 호 | 2009. 2. 25 | 기장 다시마 |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
| 제 7 호 | 2009. 2. 25 | 장흥 키조개 |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
| 제 8 호 | 2010. 8. 20 | 완도 김 | 완도김영어조합법인 |
| 제 9 호 | 2010. 8. 20 | 완도 넙치 | 완도넙치영어조합법인 |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성 벌교 꼬막, 완도 전복, 기장 미역, 장흥 키조개, 완도 넙치 등 9개 품목이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수산물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현행 동일·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일원화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 확대와 수산물 지리적표시품 등록을 늘려 나가는 한편, 수산물을 고차가공품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과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책과 서기관 박정훈

▣ 시행배경

세계적으로 농림업 분야는 기술경쟁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농림업은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아 기술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은 농식품업 관련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림업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FTA 확대, 세계 곡물가 변화 등 글로벌 농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쟁국보다 한 발 빠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림업을 IT·NT·ET 등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복합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3차 산업으로의 육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정부는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사업체계를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연구기획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공모 유형에 따라 기획과제(지정공모형)와 일반과제(자유응모형)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부가 식품개발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고, 농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장기 R&D 프로그램인 농업연구센터(ARC)를 신규로 추진하였었다.

〈표 3-39〉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 구 분 | 기 획 과 제(지정공모형) | 일 반 과 제(자유응모형) |
|-----|---|---|
| 내 용 |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과 제 또는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유망기술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내용 등을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 농림업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응모하는 과제 |

▣ 시행내용 및 성과

● 연구과제 관리현황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총 4,462개 과제 7,422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도에는 계속추진과제 258개 505억원, 신규선정과제 103개 225억원 등 총 387개 과제에 730억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 신규로 선정한 농업연구센터에 3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40〉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 연 도 | 1994~2009 | | 2010 | | | |
|-----------|-----------|-------|------|-----|------|-----|
| | 과제수 | 금 액 | 계속과제 | 금 액 | 신규과제 | 금 액 |
| 합 계 | 4,462 | 7,422 | 258 | 505 | 103 | 225 |
| 기획과제 | 198 | 1,552 | 57 | 296 | 20 | 123 |
| 일반과제 | 4,264 | 5,531 | 201 | 209 | 83 | 102 |
| 사업관리비 | | 339 | | | | 29 |

● 완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

2010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2,712과제이며, 이 중 363과제(13.4%)가 산업체 및 농가에 기술이전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책활용에 381(14.0%), 기술교육 및 컨설팅에 783(28.9%), 지식기반조성(특허, 논문, 인력양성)에 1,017(37.5%), 타연구활용에 19(0.7%) 과제가 활용되고 있다.

〈표 3-41〉 1994~2010년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

(단위: 개)

| 구 분 | 농산업 기술사업화 | 정책 활용 | 기술교육/ 컨설팅 | 지식기반 조성 | 타연구 활용 | 성과활용 추진중 | 성과 미활용 | 합 계 |
|------------|---------------|---------------|---------------|-----------------|-------------|-------------|-------------|----------------|
| 과제수 (%) | 363 (13.4) | 381 (14.0) | 783 (28.9) | 1,017 (37.5) | 19 (0.7) | 65 (2.4) | 84 (3.1) | 2,712 (100) |

▣ 향후계획

2011년부터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생명산업분야의 중추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생명산업기술 개발’로 명칭을 변경하고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융복합연구센터’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 R&D 기획단」을 운영하여 신규과제를 발굴·기획할 계획이다.

2. 농업 정보화 촉진

|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서봉열·최재웅

▣ 시행배경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에도 초고속통신망 구축, PC 보급, 정보화 교육 등의 정보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농어업·농어촌 정보화 추진 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던 인터넷망의 접근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농간 정보 격차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및 다양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어업인을 육성함은 물론 영농의 과학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등을 목표로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업·농어촌 정보화사업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춰 정보화를 통한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가격, 시황·전망 정보, 해외 농어업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

도시 소비자 또는 타 산업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이용수단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정보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98년부터 '10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지역농협, 농업계 대학 등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총 70만명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10년도에는 농업계대학 및 정보화선도자에 의존한 단발적인 농가 방문교육은 축소하고, 경영 효율화와 소득 창출로 연결되는 품목별·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였다. 컴퓨터 사용법 등 기초 적수준의 정보화교육은 이를 기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실제 소득창출과 연계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아울러 일손부족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심화·반복학습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교육 전담제(e-Tutor)와 헬프데스크, 원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교육자의 수준별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개발된 농업인 정보화역량진단 시스템을 심화·개선하여 피교육자의 교육 전후 정보화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까지의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42〉 정보화교육 실적

(단위 : 명)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온라인 교육 | 6,842 | 7,814 | 7,859 | 7,761 | 11,090 |
| 기초교육(컴퓨터·인터넷활용) | 7,047 | 5,289 | 6,901 | 3,210 | - |
| 중급교육(농업정보활용) | 4,008 | 4,019 | - | - | - |
| 경영·회계 S/W | 2,139 | 2,591 | 2,795 | 2,504 | - |
|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 359 | 604 | 751 | 1,024 | 1,750 |
| 농업정보 119대학 | 10,044 | 10,044 | 10,836 | 2,537 | - |
|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 512 | 542 | 255 | - | - |
| 정보화선도자 | 29,858 | 32,608 | 35,068 | 34,563 | 29,409 |
| 총 계 | 60,809 | 63,511 | 64,465 | 51,599 | 42,249 |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 정보통계담당관실

●●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콘텐츠 확충

'99년부터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및 도·농간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해 농림수산물정보망(옥답, www.okdab.com)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전국 농수산물 가격 유통정보, 시황·전망정보, 뉴스, 검색 등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농업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도·농간 정보교류를 촉진하였으며, '10년부터 농식품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경영·사회·문화 관련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옥답은 '99년 구축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0년 말 현재 회원수 282천명, 일평균 방문자수 17천여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72개 유관기관의 one-stop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농업인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를 위한 70여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옥답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농촌 대표 웹사이트(웹 분석사이트 랭키닷컴, www.rankey.com, 농학분야 1위, 2010년 말 기준)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농어업·농어촌 대표 웹사이트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3-43〉 농림수산물정보망 현황

(단위 : 명, 개)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회 원 수 | 218,323 | 239,726 | 257,646 | 269,113 | 281,985 |
| 연계기관 수 | - | 51 | 65 | 72 | 72 |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 정보통계담당관실

●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농수산사업의 신청·집행·사후관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행정업무 효율화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이다. 2010년까지 6차에 걸쳐 50여개의 농수산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2010년에는 과수 생산단지 기반조성 관리, 시설채소 온실현황 조사 등을 비롯한 과수·농업 통계분야 3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농업경영체 중심의 사업신청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연계 기능 확대, 농기계보유현황 및 쌀직불제 사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농수산사업의 이용자와 정보화 요구증가에 대비하여 정보자원을 일부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쌀소득, 친환경, 조건불리 등 직불제 사업의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신청을 차단하고, 농림사업간 DB검증을 통해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5년간 총 5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 향후계획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격분석 서비스 등 정보수요가 높은 콘텐츠를 확충하고, SNS·스마트폰 등 급변하는 IT환경에 부응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개인별 정보화역량 측정을 통한 수준별 맞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에 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농어업인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각 농림사업과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주요 농림사업별 공통·유사정보 등을 재편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3. 임업 정보화 촉진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 김명중

▣ 시행배경

정보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이용 기회 증가에 따라 식물자원 정보관리가 고부가가치 창출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정보화를 위하여 1998년부터 국가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추진 등으로 산림생물자원의 역할 증대 및 정보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산림생물정보의 선진화 요구에 따른 산림정보화 시행계획(2010~2014)에 의해 산림청내 및 대외 웹사이트를 국가생물종자식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산림생물정보 정보망 개발 및 생물분류체계, 식물목록, 식물도감 DB를 구축하였으며 국립수목원 등 식물보유기관 10개소의 보유식물 정보화와 대학 등 국내 식물표본관 15개소의 산림생물표본정보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종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수목원 보유식물의 종 및 이미지 정보의 보완과 식물명의 국가표준식물목록을 적용하여 표준화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 구축된 산림생물자원의 표본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종합생물자원 정보포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양의 표본에 대해 DB구축 확대를 위하여 16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 및 곤충표본 등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국가생물종자식정보시스템의 DB영문화와 영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103만점의 산림생물종 데이터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네트워크와 연계하였다. 국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전국 23개 기관에 산재된 식물 및 곤충 표본정보에 대한 DB구축과 기 구축된 국가 생물종 이미지 정보의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정보 변환작업을 수행중이며, 검색기능 및 서비스강화, DB 성능향상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도화 작업을 수행중이다.

2010년까지 산림생물정보 DB 식물·곤충도감, 표본, 종자, 수목원 보유식물, 분류, 포유류 등

18종류 386만 건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등록된 세계 239개 기관 중 27위, 아시아 1위 수준이다.

〈표 3-44〉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DB구축 현황(2010년까지)

(단위 : 만건)

| 합 계 | 식물자원 | 곤충자원 | 균류자원 | 조 류 | 포유류 |
|-----|------|------|------|-----|------|
| 386 | 219 | 166 | 0,6 | 0,4 | 0,05 |

▣ 향후계획

산림정보화 시행계획(2010~2014)에 의해 산림청 내 산림생물 관련 28개 대의 웹 사이트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전 세계 생물종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화 지침을 적용하여 국외 생물자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국제생물정보 관련 기구·기관 및 국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 구축된 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GIS) 기반의 분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산림생물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Green of IT)하는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으로 '녹색정보화'를 제시할 것이며 아이폰 등을 활용한 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고품질 화상정보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기술기반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4. 수산 정보화 촉진

|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 시행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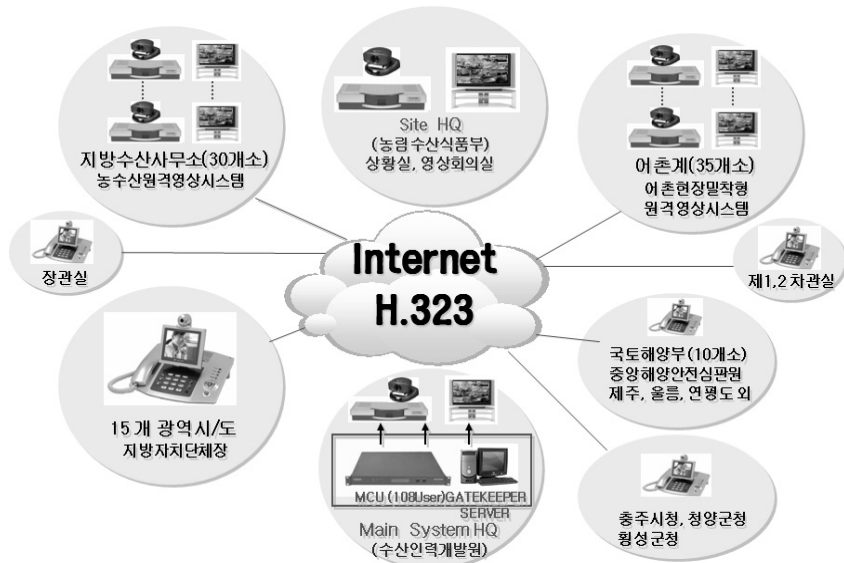
어업인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도시지역과 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업인 정보화교육을 수행해오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5,698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2004년부터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매년 어업인과 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어업인 정보화경진대회」를 매년(2011년은 제 8회 개최) 개최하는 등 어업인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였고, 어업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지역 493개소에 ‘어촌사랑방’을 설치(2003년 완료)하였으며, 원격으로 수산기술상담 및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31개소 지방수산사무소(2003년 완료)와 35개 어촌계에 「원격영상교육시스템」(2010년 완료)을 운영하였다.

또한, 어업인 복지포털(행복海)을 구축해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림 3-1〉 전체 시스템 구성도



▣ 향후계획

2009년 어촌지역정보화 현황을 보면 컴퓨터 보급률 58.7%, 인터넷이용률 36.2% 정보화수준 60.3%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어업인 정보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과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로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5절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1. 농식품 수출 확대

| 수출진흥팀 사무관 김상진

▣ 시행배경

농식품 수출은 DDA·FTA 등 글로벌 개방화 환경에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농정시책이다. 특히, 농식품 수출은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WTO 체제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 농식품의 국제수준으로의 품질 향상과 규격 표준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다.

최근의 농식품 수출 동향을 보면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및 가격 상승, 구제역 발생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고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여 2010년 농림축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4,082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돼지고기, 신선 과일 등 일부 수출이 감소한 것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세를 띄었다. 또한 일본 중심의 수출에서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아세안으로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목표로 수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는 그동안 수출 농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수출농업인의 마인드 향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의 성과로 평가되며, 중장기적 수출농업의 발전방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표 3-45〉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 구 분 \ 연 도 | 2001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A) | 2010(B) | 증감률 (B/A) |
|-----------|---------|---------|---------|---------|---------|---------|---------|---------|--------------|
| 농림축산물합계 | 1,579.9 | 2,085.0 | 2,221.5 | 2,304.4 | 2,531.8 | 2,954.5 | 3,298.1 | 4,081.8 | 23.8 |
| 신선농림축산물 | 521.0 | 549.7 | 608.2 | 535.5 | 597.1 | 675.0 | 739.0 | 873.8 | 18.2 |
| 가공농림축산물 | 1,058.9 | 1,535.3 | 1,613.3 | 1,768.9 | 1,934.7 | 2,279.5 | 2,558 | 3,208.0 | 25.4 |

〈표 3-46〉 최근년도의 세부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 구 분 \ 연 도 | 1997 | 2006 | 2007 | 2008 | 2009(A) | 2010(B) | 증감률 (B/A) |
|-----------|---------|---------|---------|---------|---------|---------|--------------|
| 전체 농림축산물 | 1,759.2 | 2,304.4 | 2,531.8 | 2,954.5 | 3,298.1 | 4,081.8 | 23.8 |
| 신선 농림축산물 | 615.7 | 535.5 | 597.1 | 675.0 | 739.3 | 873.8 | 18.2 |
| 김 치 | 39.7 | 70.3 | 75.3 | 85.3 | 89.4 | 98.4 | 10.1 |
| 돼 지 고 기 | 242.3 | 23.9 | 25.6 | 17.7 | 11.6 | 0.8 | △93.1 |
| 채 소 | 38.4 | 133.6 | 121.1 | 148.6 | 161.5 | 178.4 | 10.5 |
| 화 훼 | 5.3 | 40.4 | 58.1 | 76.2 | 77.2 | 103.1 | 33.5 |
| 가공 농림축산물 | 1,143.5 | 1,768.9 | 1,934.7 | 2,279.5 | 2,558.8 | 3208.0 | 25.4 |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은 2008년에 마련된 농식품 수출 증장기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며 선진국형 수출 기반 조성, 수출 성장 동력 확충 그리고 해외 마케팅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품목별 수출선도조직(19개)을 육성하여 생산·수출 전문경영체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수출 농산물의 규격화·표준화를 유도하고,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 특히, 안전 기준 위반에 따른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였다. 또한, WTO 협상결과 수출보조금 폐지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413억원)하고 수출인프라사업을 강화하여 특히, 해외 냉장·냉동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해외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물류기반구축 지원을 시범 운영하였다.

한편, 국내외 수출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6개국 10개 해외 aT센터 또는 사무소에서 입수되는 수출관련 정보를 인터넷 정보망인 KATI(Korea Agriculture Trade Information, <http://www.kati.net>)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 수출성장동력 확충

첫째, 해외시장에서의 동일 품목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수출협의회(16개) 육성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들 간의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을 통한 농가 소득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상품별 시장개척 진행단계에 따라 상품현지화, 시장개척, 시장정착 등 상품개발 및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상품을 발굴, 지원하여 미래 수출주도품목으로 육성을 추진하였다.

● 해외 마케팅

2010년 종합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30회, 개별 업체의 박람회 참가지원 102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대규모 관측행사 개최와 대형 전문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 개최(2회)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대량수출체계 구축과 해외시장다변화를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외공관 연계 홍보와 미디어 광고, 소비자체험 마케팅 등을 활용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추진하였다.

▣ 향후계획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은 정체 상태인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농어업의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 식문화와 결부되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커져가는 정책이다.

향후 정부는 농식품 수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기반 구축 및 해외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개별 수출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 수산물 수출 확대

| 수출진흥팀 사무관 김상진

▣ 시행배경

국제적으로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와 아시아권의 소비 증가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 어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수산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을 보면,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수산물 소비증가 등의 여건하에 놓여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도에는 수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물 해외 시장개척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580억원을 투·융자하여 수출확대방안을 수립·추진한 결과, 수산물 수출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5억불을 초과 달성하였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340억원을 저리로 145개 업체에 융자하여 833백만불의 우수수산물 수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박람회 8회, 로드쇼 3회, 판촉전 2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주요시장에 대한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등 시장조사 내용을 연중 수출업체에 홍보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와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홍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게 수출 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공고 등을 위하여 4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출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김 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등 67대의 기기 구입비 6억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생산·가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2012년까지 1,390억원을 투자목표로 2010년에는 토목공사비 등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IQ : Import Quota)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수요자 할당 김에 대한 쿼터 미소진분 재분배,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량 소진 등 통상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 향후계획

수산물 수출은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추진 및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반영 등을 적극 반영한 결과, 전년대비 19% 증가한 17.9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0년 농림수산물 총수출은 58.8억불이며 이중 수산물 수출은 농림수산물 전체 수출금액의 30.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 증가는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1년부터는 중화권·아세안 등 급증하는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3. 농림분야 수입관리 대책

|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배은정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 시행배경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 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 기관 배정방식(국영무역), 수입권 공매방식, 실수요자 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중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삼, 오렌지, 감귤, 밤, 대추 등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보리, 사료용근채류, 종자류 등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입 추천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무역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 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여건 변화로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하여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도 시장접근물량 증량품목은 농축산원자재인 종돈·종계, 보조사료 등과 가공용원료인 대두, 유당, 전분류(감자, 고구마, 밀, 매니옥 등) 및 수급조절을 위한 녹두·팥 등 17개 품목이다

▣ 향후계획

향후에도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수급을 관리하여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관련법상의 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 시행배경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관련 산업경쟁력 강화와 저가 수입 등에 따른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탄력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사료용 곡물, 농업용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밀, 근채류 등 사료용원료 10개 품목, 요소, 농약원제 등 농업 원자재 4개품목, 가공용 옥수수, 맥아, 원당 등 가공용 원료·식품 6개 품목, 배추·무 등 물가안정 품목 총 23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농업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 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010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고추장, 당면, 찌쌀, 메주 등 4개 품목이며, 관세율은 고추장(혼합조미료) 45%, 찌쌀 50%, 당면 32%, 메주는 14%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WTO에서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땅콩, 녹두, 메밀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물량을 초과할 경우, 수삼, 백삼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향후계획

향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상승,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여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생산 농가보호 및 관련산업 피해방지를 위한 품목을 선정하여 조정관세와 특별 긴급관세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4. 수산분야 수입관리 대책

| 원양정책과 사무관 윤자영

▣ 시행배경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10년 현재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활뱀장어, 활돔,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을 지정·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새우류, 갑오징어 등 5개 품목, 9,300톤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제도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 102억원(2010년도)을 징수 후 수산발전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경쟁력에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물수출입조합과 협력하여 TRQ 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의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수산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였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품목의 운영으로 국제교역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또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는 등 수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 구현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국내시장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도 수산물 수입은 3,458백만불로 전년도 2,895백만불 대비 19.4%(563백만불)가 증가되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금후에도 체계적인 수입관리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정관세 등 수산물 탄력관세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한 국내 생산자 보호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FTA 협정별 TRQ 물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TRQ 수입에 따른 부담금을 국내 어업인 등에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가격 및 해외 현지 가격 조사를 확대하여 저가신고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과세 정착, 실효성 있는 가격심사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1. 친환경농업 육성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이상준

▣ 시행배경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 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과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DDA, FTA 등 개방 확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법(1997.12)」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1차('01~'05)·제2차('06~'10)·제3차('11~'15)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유기 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관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우선,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 공급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대함으로써 토양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에는 유기질비료 250천톤(1,450억원)을 공급하여 토양비옥도를 증진하였으며, 토양개량제 811천톤(864억원)을 공급하여 토양의 산성도 등을 완화하였다. 또한, 유희농경지에 녹비작물(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등) 108천ha(150억원)를 조성하여 지력 증진과 농촌경관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465천톤(600억원)을 공급하여 양분의 과도한 투입을 방지함으로써 토양 환경을 유지 보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천적·미생물)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에는 시설원에 농가의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2,500ha(37억원)를 지원하고, 친환경인증 농가 등에 미생물농약 1,000ha(8억원)를 지원하였다.

셋째, 시·군단위의 친환경광역단지(600ha 이상)와 마을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를 지정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7개소(누계 27),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 29개소(누계 1,020)를 신규로 조성 지원(319억원)하였다.

넷째,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에는 친환경인증 116천농가의 93천ha에 대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376억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226농가에 대한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 27억원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학교급식 확산 등 대량 소비자 확보 및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 조성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기본설계 등 건축기반을 조성(63억원)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 단체에 매취자금과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연중, 400억원)하였다. 또한, 유치원 원장 및 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24회 933명, 220백만원)을 실시하고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표 3-47〉 2010년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 친환경비리지원 | | | 비료 계정 적자 보전 | 녹비 작물 증자대 | 생물학적병 해충방제 | | 친환경 인증 농업 활성화 | 친환경 농업 직불제 |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 류센터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 친환경 소비지 유통 활성화 | 친환경 직거래 매취 자금 | 친환경 농업 연구 센터 |
|-----|-----------|-----------|-----------|----------------------|-----------------|---------------|-----|------------------------|------------------|--------------------------|---------------|----------|-------------------------|------------------------|-----------------------|
| | 유기질 비료 | 토양 개량제 | 맞춤형 비료 | | | 천적 | 미생물 | | | | 광역 단지 | 지구 조성 | | | |
| 예산액 | 1,450 | 864 | 731 | 910 | 150 | 37 | 8 | 5 | 520 | 63 | 295 | 24 | 24 | 400 | 37 |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10년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 중 12.0%(01년도 0.2%보다 60배 증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36,506억원(01년도 1,500억원 보다 24배 증가), 화학비료 사용량 232kg/ha('99~'03 평균 375kg/ha 보다 38% 절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48〉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성과

| 구 분 | 연 도 | 2001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 | 친환경 면적(ha) | 4,554 | 49,807 | 74,995 | 122,882 | 174,107 | 201,688 |
| | 유 기 | 450 | 6,095 | 8,559 | 9,729 | 12,033 | 13,343 | 15,518 |
| | 무농약 | 1,293 | 13,803 | 18,066 | 27,288 | 42,938 | 70,139 | 94,533 |
| | 저농약 | 2,811 | 29,909 | 48,370 | 85,865 | 119,136 | 117,306 | 83,955 |
| 친환경 농가(호) | | 4,678 | 53,478 | 79,635 | 131,460 | 172,553 | 198,891 | 183,918 |
| | 유 기 | 442 | 5,403 | 3,235 | 7,507 | 8,460 | 9,403 | 10,790 |
| | 무농약 | 1,645 | 15,278 | 21,656 | 31,540 | 45,089 | 63,653 | 83,136 |
| | 저농약 | 2,591 | 32,797 | 50,812 | 92,413 | 119,004 | 125,835 | 89,992 |
| 친환경 생산량(천톤) | | 87 | 798 | 1,128 | 1,786 | 2,188 | 2,358 | 2,216 |
| | 유 기 | 11 | 68 | 96 | 107 | 115 | 109 | 122 |
| | 무농약 | 32 | 242 | 320 | 444 | 554 | 880 | 1,040 |
| | 저농약 | 44 | 488 | 712 | 1,235 | 1519 | 1,369 | 1,054 |
| 화학비료 사용량(kg/ha) | | 343 | 376 | 257 | 340 | 311 | 267 | 232 |
| 농약 사용량(kg/ha) | | 13.5 | 12.8 | 12.9 | 13.1 | 14.4 | 11.7 | 11.2 |

▣ 향후계획

농업과 환경의 조화 속에서 친환경 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11~'15)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자원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유기농 전문단지를 육성하고 토양 개량제·유기질비료·녹비작물 공급 확대 및 맞춤형 비료 공급지원으로 토양 지력 증진 및 비료사

용량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화·규모화 된 거점 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물류효율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학교 급식·공공기관 등 대량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조합 간 상생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업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정위반 시에는 퇴출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유기농식품의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공 및 농자재 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부하 문제를 해소하고 ‘흙·물·생명살리기’를 위해 ‘농업환경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을 통해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나. 친환경생산단지 확대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임기창

▣ 시행배경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도입해 지원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농업 대·소규모지구 사업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 10% 제고 및 농약·화학 비료사용량 40% 감축을 위해 광역친환

경농업단지 조성방안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04.2)하여 농업환경개선과 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단지별 최소 600ha 규모로 조성되며, '05년에는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업모형을 개발하였고, '06년에는 3개 지역(완주, 순천, 울진)을 선정하고, '07년도에는 6개 지역(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정책 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목적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기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단위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토양을 개선하며 축산분뇨와 기타 농산부산물을 자원화 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 2009년까지 991개소를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29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을 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 및 인증농가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확충을 지원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친환경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2%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6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반 영농구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 중이며, '10년에는 광역단지조성 신규 7개소와 2년차 사업 11개소에 620억을 지원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의 확대를 비롯하여 친환경농업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시·군 단위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600ha 이상)와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 이상)를 지정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10년 말까지 1,020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11년에는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28개의 지구를 추가 조성 중에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총 1,3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10년까지 27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원태

▣ 시행배경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 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증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

로 통보 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를 대상으로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29천ha를 대상으로 501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를 대상으로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를 대상으로 34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논 49천ha, 밭 44천ha 등 총 93천ha를 대상으로 116천 농가에게 37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49〉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 억원, ha, 천호)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지 급 액 | 141 | 208 | 287 | 345 | 376 |
| 면 적 | 34,896 | 53,682 | 76,352 | 90,132 | 93,318 |
| 농 가 수 | 46 | 69 | 97 | 112 | 116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1년 전체 경지 면적의 0.2%(4,554ha)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11.3%(194,006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2001년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0.2%에서 2010년에는 12.0%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2001년 대비 60여배 증가하였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09년까지는 1회 실시하였던 이행점검을 2회까지 실시하도록 시군구에서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도 중에 원활한 직불금 지급을 위해 이행점검 마감 및 소요예산 신청기한을 10.15일까지로 전년보다 15일 앞당겼다.

아울러 그동안 임야의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고 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엄격한 대상 관리를 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도 중 인증만료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통지 시 향후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여부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통해 친환경인증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환경조성 및 농업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 사용량이 2000년 382kg/ha에서 2010년 232kg/ha로 큰 폭의 감소를 이루는 등 농업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1년에는 85천ha에 3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급면적이 2010년 보다 8천ha 정도 감소한 이유는 '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대상이 1/3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직불금 지급단가는 2003년도에 설정된 것으로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편을 통하여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원태

▣ 시행배경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매취자금지원, 생산부터 유통단계 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유통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친환경농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

체, 소비자단체(생협 등),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건전한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억 원 신규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억원, 2008년 14억원, 2009년 20억원하였다. 2010년에는 15억 원을 조성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시장개척,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직거래매취자금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06년 200억원, 2007년 200억원, 2008년 36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에는 4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3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통하여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소비처 발굴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6~'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105㎡, 건축연

면적 25,927㎡(지하1층, 지상2층)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2009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40억원, 지방비 24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년 5월에 착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내 친환경 농수산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 향후계획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생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 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직거래매취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에 건립중인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2012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중앙시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대표가격 제시, 가격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대량수집과 분산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수취가격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농업환경오염 경감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안전위생과 서기관 김일환

▣ 시행배경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2006년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목적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GAP위생시설보완사업(보조 : 국비 30%, 지방비 20%)과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토양·용수·생산물에 대한 안전성분석 비용지원(국비보조 100%),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국비보조 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인증신청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인증기관은 신청 농가를 방문하여 50개 항목(필수 27, 권장 23)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의 준수 가능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와 민간의 성실한 노력으로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추진실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소비확대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TV, 라디오, 지하철 광고, 차량랩핑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3-50〉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인증기관(개소) | 21 | 31 | 38 | 43 | 45 |
| GAP관리시설(개소) | 190 | 316 | 417 | 484 | 565 |
| 인증 농가수(호) | 3,659 | 16,796 | 25,158 | 28,562 | 34,421 |
| 인증 면적(㎡) | 4,535 | 24,754 | 36,322 | 40,081 | 46,701 |
| 생산 계획량(톤) | 101,354 | 331,421 | 419,842 | 434,047 | 509,931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1년

▣ 향후계획

학교·군납·대량급식소 등의 안전·안심농산물 소비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2010년 저농약인증 제도의 폐지(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는 결과적으로 인증 농산물의 공급부족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농산물이력추적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GAP인증 농산물의 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GAP인증기관, GAP관리시설, GAP인증심사인력,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컨설팅, 표준화된 재배 방법의 보급,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그룹 조직 육성,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선진적인 보완, GLOBAL GAP와의 관계설정 등 안정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나. 친환경 비료 지원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윤식

▣ 시행배경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업에 투입하는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 마

런과 인센티브를 통한 소비량 절감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다행히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됨과 동시에 친환경재배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화학비료 가격이 점차 인상되어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경지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화학비료 소비량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중 많은 편이고 양분수지가 높아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소비량 감소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사후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6년도 120만톤 420억원, 2007년 135만톤 473억원, 2008년 200만톤 1,160억원, 2009년 210만톤 1,218억원, 2010년 250만톤 1,45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3-51〉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단위: 천톤, 억원)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물 량 | 1,200 | 1,350 | 2,000 | 2,100 | 2,500 |
| 금 액 | 420 | 473 | 1,160 | 1,218 | 1,450 |

2006년 화학비료에 대한 판매가격이 자율화되면서 화학비료 총사용량(실증량 기준)은 1,272천톤을 사용하여 전년에 비해 32.2%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7년은 1,621천톤을 사용하여 일시 사용량이 증가되었으나, 2008년 1,471천톤으로 9.3%가 감소되었으며, 2009년 1,292천톤으로 12.2% 감소하였고, 2010년 1,105천톤으로 14.5%가 감소하였다.

〈표 3-52〉 화학비료 소비 현황

(단위 : 천톤, %)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물 량 | 1,272 | 1,621 | 1,471 | 1,292 | 1,105 |
| 증(Δ)감 | Δ32.2 | 27.4 | Δ9.3 | Δ12.2 | Δ14.5 |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맞춤형화학비료, 가축분퇴비 등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2010년 465천톤, 600억원을 지원하였다.

▣ 향후계획

퇴비의 품질등급제 차등지원 등을 통한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강화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토양지력 증진, 농업환경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비료는 사용결과 효과분석 및 신규비종 설계, 완효성비료 공급 확대 등으로 고농도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3. 농업환경(토양)의 유지·개량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윤식

▣ 시행배경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질은 1957년부터 규산질은 1965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년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 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 규산, 석회 모두 4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농가단위 신청제로 전환하고 살포주기도 3년 1주기 공급으로 개선하였으며, 492천톤(규산 289, 석회 203)을 지원하였다.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알갱이형태의 입상제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9년도부터는 전량 입상으로 599천톤(규산 366, 석회 233)에 이어 2010년에는 826천톤(규산 634, 석회 183)으로 확대·공급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표 3-53〉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천톤)

| 구 분 \ 연 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금 액 | 40,073 | 40,354 | 65,139 | 88,113 | 77,823 |
| 물 량 | 549 | 492 | 599 | 826 | 823 |
| - 규 산 | 290 | 289 | 366 | 643 | 535 |
| - 석 회 | 259 | 203 | 233 | 183 | 288 |

▣ 향후계획

2011년에는 토양개량제를 823천톤(규산 535, 석회 288)으로 확대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토양검정결과 등에 따른 시비처방서 발급, 맞춤형 비료지원, 유기질비료지원 확대 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1.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도·농 교류 활성화

| 농어촌산업팀 서기관 조백희, 사무관 김춘기·이명남

▣ 시행배경

생활 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확대, 베이비부머(baby boomer) 시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 시행내용 및 평가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10년까지 516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516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 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교육생 역량수준에 부합하는 초·중·고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멘토(mentor)제도 도입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9개 교육과정에 3,525명을 교육하였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프로그램개발, 방문객관리, 도시민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2010년까지 350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에 79개 마을(2009년 5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농어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삼성동 코엑스)에서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 101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정주정보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10년에는 8,783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 615억원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

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향후계획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시대의 은퇴, 1산1촌운동 확산 등 농촌체험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가 소득증대 등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증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10년 74개(총 516), 2011년 55개(총 571)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11년 3,045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할 것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지원시스템을 개선한 종합컨설팅 자문 및 세무자문 신설·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농어촌생활·체험기 공모,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도농교류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어업·농어촌 및 자연환경을 배울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에 '1사1촌 운동' 수록을 추진 중이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도농교류 5개년계획」을 '10년부터 시행중이다.

나. 향토자원 발굴 등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 농어촌산업팀 사무관 이동홍

▣ 시행배경

정부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07~2008년에는 군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에는 군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는 회계개편에 따라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사업 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군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13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체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10년에 시·군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2010~2014)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포괄보조사업군내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편성·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당 3년 이내에 총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군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매년 30개소씩을 신규로 착수, 개소당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H/W 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54〉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 구 분 \ 연 도 | 계 | 2007 | 2008 | 2009 | 2010 | 비 고 |
|-----------|--------------|------------|------------|--------------|-------------|---------------------|
| 사 업 량(개소) | 109 | 19 | 30 | 30 | 30 | * 목표: 2013년까지 200개소 |
| 예 산(억원) | 763 (322) | 43 (43) | 90 (90) | 286 (136) | 344 (53) | |

주 : 1)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사무리사업비까지는 군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선정분부터는 군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2) ()는 전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및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도에는 2,356억원의 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향토식품·특산물 가공 등 농어촌형 제조업 육성,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H/W 분야와 S/W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55〉 2010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 분 야 별 | 계 | 농수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 | 농수산물제조· 가공지원 | 체험·전시지원 | 농어촌체험· 관광지원 | 농공단지조성 지원 |
|---------|-------|-------------------|-----------------|---------|----------------|--------------|
| 예 산(억원) | 2,356 | 1,035 | 396 | 10 | 392 | 523 |

▣ 향후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3년까지 200개의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매년 30개소 씩 신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수립 단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부터 종전의 13개 개별 사업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였으나, 아직 기존 사업의 물리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대상을 성격에 따라 ①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②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③체험·전시지원, ④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⑤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등 5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내용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단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내용과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단편적, 일회성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구조를 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

다. 농공단지 조성

▣ 농어촌산업팀 사무관 최국일

▣ 시행배경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재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3-56〉 농공단지 조성 부처별 지원 현황

| 부 처 명 | 지 원 내 용 | 관 련 법 |
|---------|-------------------------|-----------------------|
| 지식경제부 |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 | 농어촌정비법 |
|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환경부 |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 환경정책기본법 |

농식품부는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 지원 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 여부에 따라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4년까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10년에는 신규사업 16개소, 계속사업 36개소 등 52개소에 52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0년 말 현재 347개소를 조성(완공)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10년 말 현재 5,80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5,356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이며, 고용인원 130천여 명, 생산액 43조7.613억원(업체평균 87.3억원), 연간 수출액 115억87백만불(231만 불) 등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

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어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목표도 조만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가 신규 단지 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노후단지의 기능 향상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유치를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개발보다는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중점 지원해 나가고, 지역특화단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수산개발과 사무관 윤영호

▣ 시행배경

최근 들어 경제성장, 교통의 발달,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WTO-DDA, FTA 진전과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촌지원방안강구 및 어업 외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고, 또한 생산위주의 직접지원보다는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시와 소득 격차 등으로 침체된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업자원 등을 관광 자원화를 통해 어업 외 소득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표 3-57〉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 구 분 | 사업주체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형태 | 사 업 내 용 |
|--------------|-----------|---------------|---------|-------|---------------|--|
|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 지자체, 수협 등 | 1998년 ~ 2001년 | 60억원 | 2개소 | 용자조건 (연리 5%등) | 가족호텔, 휴양시설, 수산물판매장 등 |
|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 지자체 | 1998년 ~ 2005년 | 420억원 | 7개소 | 국비50%, 지방비50% | 실내·야외전시관, 시청각실, 주차장 등 |
| 고래해체장 복원사업 | 지자체 | 2007년 ~ 2008년 | 54억원 | 1개소 | 국비50%, 지방비50% | 고래 전시관, 수족관 등 |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자자체 | 2001년 ~ 2013년 | 731억원 | 112개소 | 국비50%, 지방비50% | 마을안내소, 샤워장, 진입로, 화장실 등 |
| 어촌관광모델 개발사업 | 자자체 | 2004년 ~ 2013년 | 1,040억원 | 18개소 | 국비50%, 지방비50% | 관광안내센터, 해안 공원 조성, 수산물판매장, 전망대, 해안산책로 등 |

▣ 시행내용 및 성과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 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 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 외 소득원 개발을 추진하였다.

●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전남 보성군, 신안군 등 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하였다.

●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제공과 지역 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교육의 산실을 마련하고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 삼척, 전남 완도, 경남 거제 등 7개소에 42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였다.

● 고래해체장 복원사업

소실 위기에 처한 전통 고래잡이 역사현장 보존 및 고래박물관과 연계한 고래문화 체험 특성화 마을 조성으로 지역문화 계승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 남구 고래박물관 일원에 54억원을 투자하여 고래해체장을 복원하였다.

● 어촌체험마을조성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촌체험마을을 선정,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조성(총사업비 731억원)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전북 고창 하전 등 전국 105개소에 702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주도의 참여식 관광으로 어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등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 어촌관광모델개발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

항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복합공간형, 어촌관광단지형 등 2종의 시범사업으로 어촌관광 모델개발 18개소 선정,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0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0년도까지 기본설계용역 17개소를 완료하고 737억원을 투자하여 16개소(9개소 완료, 9개소 진행 중)에 대한 시설투자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표 3-58〉 어촌관광 소득원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 사업별 | 연도 | 목표 | 연도 | | | | | |
|-----------|-----|---------|--------|--------|--------|--------|-------|---------|
| | | | 2007까지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이후 |
| 어촌휴양 단지조성 | 사업량 | 2 | 2 | | | | | |
| | 사업비 | 3,000 | 3,000 | | | | | |
| 어촌민속전시관 | 사업량 | 7 | 7 | | | | | |
| | 사업비 | 42,000 | 42,000 | | | | | |
| 고래해체장복원 | 사업비 | 5,400 | 2,180 | 3,220 | | | | |
| 어촌체험마을조성 | 사업량 | 112 | 87 | 8 | 7 | 3 | 2 | 5 |
| | 사업비 | 73,110 | 57,822 | 5,988 | 4,300 | 2,100 | 1,400 | 1,500 |
| 어촌관광모델개발 | 사업량 | 18 | 2(8) | 1(11) | 2(8) | 4(6) | 2(3) | 7 |
| | 사업비 | 104,025 | 33,319 | 15,964 | 14,268 | 10,088 | 5,668 | 24,718 |

※ ()은 계속사업

▣ 향후계획

어촌체험마을조성은 2013년까지 계획된 1단계 112개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조기 완료하고 2단계 추진대상마을을 선정하여 개발함과 더불어 4계절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관리중심으로 개선하며, 어촌관광모델개발도 2013년까지 18개소 시범사업을 완료함과 더불어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등 형태의 연안지역별 맞춤형 어촌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어업 외 소득증대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와 편안하고 정감 있는 관광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 실질적인 어업 외 소득증대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와 편안하고 정감 있는 관광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2. 농어업의 경영안정화

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재해보험팀 사무관 윤승우

▣ 시행배경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루사(2002)’, ‘매미(2003)’ 태풍으로 255명이 사망하고 약 9조 8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이자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파비·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 및 보험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의 거대재해 위험(손해율 180% 초과)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재보험제도를 '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그간 태풍 ‘루사(2002)’ 및 ‘매미(2003)’ 등으로 약 7만 4천여 농가에 3,87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밤·참다래·자두·고추·양파·콩·감자·시설수박·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20개 품목에다 품목개발추진단 등에서 연구·검토한 농작물 중 농업인의 보험수요 및 전업화 정도, 생산액 수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된 '시설딸기·시설토마토·시설참외·시설오이·대추' 5개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그동안 수차례 도상연습만 하였던 '벼'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로 재해보험 확대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벼 재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도 대상재해에 포함시켜 2009년도 가입실적(보험료 35억원)대비 7.1%p 증가한 37.5억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50%, 보험사업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료율을 2009년 대비 0.03%p 높은 5.57%로 인상하였으나 최근 태풍,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보험가입률은 오히려 2009년 대비 4.6%p 증가한 36.0%로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이에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농가가 가입 기준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한 49,102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면적도 2009년 48,381ha에서 2010년 51,618ha로 가입률 6.7%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으로는 2010년까지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통합운영, '10.1.1),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등이 있었으나, 이들 정책보험들은 각 소관부처별·과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였다.

<표 3-59> 농작물 재해보험 성장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연 도 | | | | | |
|-----------------------|----------|--------|---------------|---------------------|--------------------------|----------------------------|--------------------------------|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대 상 품 목 ¹⁾ | | 6 | 7 (뽕은감 추가) | 10 (밤·참다래·자두 추가) | 15 (콩,감자,고추,양파,수박 추가) | 20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추가) | 25 (대추,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추가) |
| 가입 실적 | 가입농가(호) | 26,335 | 27,419 | 29,174 | 32,538 | 45,884 | 49,102 |
| | 가입면적(ha) | 20,301 | 21,466 | 23,661 | 26,037 | 48,381 | 51,618 |
| | 가입률(%) | 23.4 | 24.5 | 26.5 | 28.5 | 31.4 | 36.0 |
| 지원 규모 | 순보험료(%) | 61.2 | 58.4 | 55.6 | 52.8 | 50 | 50 |
| | 운영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국고지원액 | 49,371 | 50,783 | 49,280 | 49,063 | 53,351 | 67,732 |
| 지급 보험금 | 지급농가(호) | 5,877 | 5,171 | 7,274 | 3,383 | 8,734 | 23,303 |
| | 보험금 | 23,871 | 21,112 | 61,464 | 24,932 | 66,176 | 90,330 |
| | 손해율(%) | 43.5 | 36.6 | 110.4 | 45.0 | 105.8 | 104.6 |

주 : 1) 본사업 시작연도 :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국

이에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확대 개편하여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시설 등 농어업 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인 만큼 좀 더 구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전면 개정('09.3.5)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통합된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간 2010년까지 74천 농가에 3,87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대상재해의 지속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보험가입률 및 보험규모 면에 있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3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12년 이후에도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약 3년간 주산지 위주로 소규모로 사업 운영하면서 보험 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과는 별도로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보험대상에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농업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정재해(태풍, 우박 등)만을 보상하는 과수 품목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보험 상품 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홍근형

▣ 시행배경

최근 농업이 규모화되면서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도 늘

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FTA진전,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부채구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였다. 2010년 중 이차보전대상 자금인 '01·'04년 정책자금 상환연기, '04·'06·'09년 상호금융자금 저리 대체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등에 대해 1,523억원을 이차보전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당 평균 약 129천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채 없는 농가(전체 농가 수의 31.8%)를 감안할 때 실제 지원받은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2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 3.1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부채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가의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농지제도 개선

| 농지과 사무관 안종락

▣ 시행배경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임차농의 안정적 영농 보장을 위한 농지임대차규정 보완 등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도입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2009년 농지법 개정 후속조치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고시를 완료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농업계 내·외의 전문가 토론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업무 담당자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마련되었는데, 2010년 11월 말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민단체, 국토연구원, 언론계 등 농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 12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토론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 폐지, 임대차계약 방법·기간, 임차료 상한 등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제도 보완 등이다.

또한, 2009년에 개정·시행된 농지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고시를 완료하였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읍·면 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 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가 완료된 총면적은 111천ha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이용규제를 완화하여 소유·임대차를 자유롭게 했고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을 허용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폐지, 임차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임대차규정 신설 등 2010년도에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2011년 상반기에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2011년 하반기에 법제처 심사, 국회 심의 등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철중

▣ 시행배경

1998년 이후 대형 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산림피해 규모가 대형화되어 임업인의 경영 불안의 주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해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정책보험으로서의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추진

2002년도에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학계·임업계 및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도 도입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를 및 입목 표준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산림재해공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추진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보험품목 확대 계획과 적극적인 의지로 2006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 중에서는 최초로 뽕은 감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주산단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8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보험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중 소득비중이 높고 보험 필요성이 높은 밤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표준수확량과 손해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동 연구는 밤 주산단지 중 3개 지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주산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임산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를 위하여 2008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대추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상품개발을 추진,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주산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60〉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임가, ha, 백만원)

| 구 분 \ 연 도 | 2008 | | | 2009 | | | 2010 | | |
|-----------|------|-----|-----|-------|-----|-----|-------|-----|-------|
| | 임가수 | 면 적 | 보험료 | 임가수 | 면 적 | 보험료 | 임가수 | 면 적 | 보험료 |
| 뽕은 감 | 830 | 481 | 589 | 1,313 | 614 | 622 | 1,753 | 854 | 1,062 |
| 밤 | 126 | 451 | 70 | 51 | 221 | 29 | - | - | - |
| 대추 | - | - | - | - | - | - | 268 | 108 | 196 |

▣ 향후계획

향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시 산림작물을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밤, 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에서 임목(林木)·죽(竹) 등 장기 소득 임산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복분자 등 임업분야의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제1절 쌀 산업

제2절 채소산업

제3절 과수·화훼산업

제4절 축산업

제5절 임업

제6절 수산업

제1절 쌀 산업

1. 제도 개선

| 식량정책과 사무관 노영호

▣ 시행배경

WTO 출범 이전에는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WTO 농업협정의 국내보조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DDA 농업협상 이후에도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DDA·쌀협상으로 식량정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2005.7.1시행)하여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제도를 전환하였다.

한편 기존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2005. 7. 1 시행)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 소득 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쌀값 하락시에도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고품질 쌀 판별능력이 부

족한 점과 MMA 밥쌀용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등을 감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강화 등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수입쌀의 경우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제 운용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우리쌀 소비문화를 정착하였다.

한편, 2005년도 양정개혁 이후 쌀 소득 보전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 설계와 목표가격의 장기간 고정('08~'12), 쌀 생산성 향상과 소비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대풍과 가격급락에 대비한 시스템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9월 쌀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 장관)를 구성하고, ①생산조정 제도화, ②쌀 가공산업 육성, ③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대책 추진을 통하여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악순환과 1차 산업중심의 저부가가치 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첨단가공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새롭게 마련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생산조정제 추진('11~'13, 연간 4만ha에 콩·옥수수 등 타작물 재배), 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공급 양곡에 대한 시장격리 근거마련, 쌀 가공산업 육성 근거법령 제정, 산지유통업체의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쌀 사이버거래소 거래소 설치, 민간부문의 쌀 자조금 설치 등 실질적인 수단들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2. 효율적인 수급조절

| 식량정책과 사무관 강동윤

▣ 시행배경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공공비축제와 함께 시장가격의 안정을 통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9년에 생산된 쌀 4,916천톤과 이월재고 993천톤, 수입 307천톤 등 총 6,216천톤이 시장에 공급되었다. 이 쌀이 2009년 11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기간에 4,710천톤이 소비되어 2010년 10월 말 총 재고량은 1,506천톤 수준이 되었다.

2008년에 태풍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아 풍년(4,844천톤)을 이룬 것과 같이 2009년에도 2008년 대비 8만톤이 증가된 4,916천톤이 생산되어 사상 최대의 풍년(단위생산량: 534kg/10a)을 맞았다. 그에 따라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 수확기에 생산자단체인 농협 등을 통해 과잉물량(340천톤)이 시장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2010년 5월과 9월에도 각각 2009년산 200천톤과 26천톤이 각각 시장에 방출되지 않도록 농협 등을 통하여 조치하였다.

또한, 2010년 수확기(10월)에도 공공비축물량 340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이외에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86천톤이 시장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태풍피해를 받은 지역의 쌀 11천톤을 추가로 매입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였다.

▣ 향후계획

쌀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은 생산과 수급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다. 식량으로 소비하는 쌀의 소비가 줄고 있고 MMA 수입쌀의 양도 매년 2만톤씩 늘고 있어 쌀이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쌀의 균형있는 수급 조정을 위해서 논 4만ha에

타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3. 민간유통기능 강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문석호

▣ 시행배경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처리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10년 말까지 총 7,101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 1,206개소를 설치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 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융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여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전환하고 사업량을 2005년에 50개소에서 2006년도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단가도 4.5억원에서 5.5억원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율도 30%에서 40%로 변경하는 등 지원조건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RPC 부실 경영이 지속될 경우, RPC의 벼 매입능력 저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 및 농가의 벼 판매 어려움 등 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 우수 RPC 및 통합 RPC(RPC 간 구조조정)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 RPC에는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조기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 향후계획

특히 2006~2007년 2년간 시범 추진 후 시행된 수탁판매사업을 통하여 수확기 쌀 농가의 판매 방식 다양화를 통한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34개소를 육성한 바 있으며, 2019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대표브랜드 쌀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4.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식량산업과 사무관 문석호

▣ 시행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율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은 점이나 수확 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7년도까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첫째, 화학비료 사용 억제 및 유기물 시용을 확대하고, 둘째,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 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개발하고, 셋째, 고품질 정부보급종 공급확대, 넷째로, 적기이양, 적정 포기 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지도·홍보하고, 다섯째, 농가와 RPC(미곡종합처리장) 간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여섯째,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단위 평균적 개념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들녘·품종별 차별화·정예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녹비작물 재배 확대,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 확대(100%) 등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최고 품질 품종(7개)을 육성하고, 셋째,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량을 50%까지 확대하고, 넷째, 적기이양,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대 고품질 쌀 생산·재배기술을 조기정착하며, 다섯째, RPC 수확 후 관리시스템을 개선 및 확충하고, 여섯째,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육성 추진 및 쌀 품질 표시방법 개선,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로 소비자 신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 기반 조성을 위해 100ha 내외의 면적으로 규모화·조직화하는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모델 육성사업을 신규사업(12개소)으로 추진하였고, 전문 컨설팅업체, 사업참여 경영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향후계획

그동안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의 신뢰확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 측면에서는 쌀 농가의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는 쌀농사 경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추진전략



5. 쌀 소비촉진

| 식량정책과 서기관 송광현

▣ 시행배경

벼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쌀 생산량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고 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쌀 수요기반 구축을 통해 쌀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주식인 건강식품으로서의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사업 초기 쌀 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등과 함께 아침밥먹기 캠페인,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밥 중심의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식문화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창출이 필요하여 「우수 쌀 가공제품 Top10」을 선정하고 생산자에게는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에는 쌀가공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을 대폭 증액하여 쌀가공업체의 시설비, 개보수비,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쌀가공제품 개발과 대기업의 쌀가공산업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군·학교급식 등 공공부문의 쌀가공제품 이용이 확대되고 소비자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소비촉진 캠페인이 필요하여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변화 및 소비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40대 이하 젊은 층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사이버 쌀 박물관을 통해 쌀 소비 촉진관련 콘텐츠 개발, 쌀 관련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 지속적인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CBS(기독교방송), 노컷뉴스, 교통문화선교회 등과 쌀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 업무협력 MOU를 체결(10.11)하여 우리 주식인 쌀의 중요성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쌀 교과서 제작, 쌀국수 시범급식, 식습관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교 선정 지원, 쌀 중심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등 차세대 소비 주축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향후계획

신세대 입맛에 맞는 쌀요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미래클 프로젝트’, ‘대한민국 쌀요리 경연대회’, 밀 떡볶이와 차별화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쌀 떡볶이 취급점 표시제’, 미래세대인 초등학생 대상 다양한 주식교육, 쌀 밀가루 직거래 공급 추진 등 ‘쌀 면류 대중화 사업’,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추진본부를 전국 14개 지방 조직으로 발족하여 쌀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채소산업

1. 노지채소

|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도범

▣ 시행배경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은 시행 초 배추·무 품목에서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였다.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협 등에 융자금(무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 확대를 위하여 계약재배 사업주체에 기존의 농협 이외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추가하고, 계약재배 사업대상도 사업농협 이외에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관측 결과 예상 가격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또한, 계약방식도 농가가 선호하는 포전매취 방식을 추가하고, 계약방식 개선 및 판매처 확보 등에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보장가격을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생산계획 단계부터 농가 스스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주요 농축산물 29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정보와 농작물 생육정보를 결합한

농업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기상 급변기(6월~9월)에 농업관측기동반을 배치하여 관측속보 발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조금 운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자조금사업을 이관,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다.

▣ 향후계획

채소수급안정사업은 농협의 사업 역량을 높이는 한편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유도, 기치제조업체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연차별로 사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축산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농산물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운용의 규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2. 시설채소

| 원예경영과 서기관 박희수

▣ 시행배경

1990년대 초반부터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의 기반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시설채소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향후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화에 따라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기 지원된 시설원에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전문가를 통한 시설원에 작물재배 및 관리 기술·경영 정보 제공과 더불어 현지순회 지도 등을 통해 시설원에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48종의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및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비닐하우스 36, 인삼재배시설 10, 버섯재배사 2)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난방을 하는 시설재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9년부터는 고효율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고, 2010년부터는 목재 펠릿난방기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유류 사용이 줄어들어 경영비 부담 완화와 함께 온실가스 절감 등 환경친화적 시설농업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과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수출 선도조직을 평가하여 수출물류비 및 인센티브, 조직 운영비 지원과 함께 수출 농식품 안전성 관리 종합대책(2008. 9)을 마련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향후계획

2011년부터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기 열 냉난방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바이오 메스 등 지속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의 활용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국내 시설원에 농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제3절 과수·화훼산업

1. 과수산업

| 원예경영과 사무관 김기주

▣ 시행배경

과실류는 1990년대 증반을 정점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03년 이후 소폭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과수농가 200천호 중 전업농 수준인 1.5ha이상 농가는 22.5천호인 11.2%이며, 대부분이 겸업농으로 호당 평균 0.7ha의 영세한 영농규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과실소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국산과실의 소비는 과채류 등과의 소비대체로 정체상태인 반면 과실수입은 증가하여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과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1994~19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 낮은 밀식사과원조성 등 생산시설 현대화와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유통 시설 기반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 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농

업 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2004년부터 한·칠레 FTA체결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과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8년간 FTA기금 1조3천억원을 조성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및 조직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주요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588억원(3,270ha)을 지원하였고, 과수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32억원(758ha)을 지원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과실생산의 근간이 되는 과수묘목에 대해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고품질과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과수 우량묘목생산지원 사업에 14억원(13개소)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을 높이고, 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2010년에는 거점산지유통센터 1개소(사업비 68억원)를 준공하는 등 지금까지 총 17개소가 지원되어 산지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과수 농가 경영안정 사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서 재배농가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을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5,812ha에 대해 폐업지원금 2,377억원을 지원하였고, 경쟁력이 낮은 과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나무제거비 등을 지원하는 과수원정비지원 사업비 193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하여 386ha를 정비하였다.

▣ 향후계획

2011년도에도 FTA·DDA 등 대외 개방에 대비하여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보완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경쟁력제고 대책과 유통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비 491억원을 지원하여 3,100ha 규모의 과원에 대해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실의 생산을 유도하고,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 171억원을 지원하여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묘목 공급을 통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과실브랜드 경영체 30개소를 육성해 나가고, 과실류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여 적정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화훼산업

|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명남

▣ 시행배경

화훼산업은 2005년까지 재배농가 수와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택지개발, 유가 상승 등 생산비 증가에 따른 작목전환 등에 따라 농가 수 및 생산액은 감소 추세인 반면, 수도권 농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재배면적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 4-1〉 화훼생산현황

| 구 분 \ 연 도 | 1990 | 1995 | 2000 | 2005 | 2008 | 2009 | 2010 |
|-----------|-------|--------|--------|--------|--------|--------|--------|
| 재배농가(호) | 8,945 | 12,509 | 13,080 | 12,859 | 11,588 | 10,685 | 10,347 |
| 재배면적(ha) | 3,503 | 5,156 | 5,891 | 7,950 | 7,073 | 6,639 | 6,829 |
| 생산액(억원) | 2,393 | 5,090 | 6,649 | 10,105 | 9,043 | 8,640 | 8,510 |

정부에서는 화훼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꽃의 가치를 패션과 기능성 측면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국가소득 및 경제규모에 걸맞게 화훼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개척, R&D, 홍보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녹색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홍보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신제품 개발·보급, 수출 증대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산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로열티부담이 2008년 120억원에서 2009년 94억원으로 21.7% 감소되었고, 2010년도 국산품종 보급률도 장미 18%, 국화 15%, 난 4%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장미, 백합, 국화 등 화훼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103백만불로 2009년 77백만불에 비해 33.8% 증가하였고 특히, 매직장미 등 신상품 수출액은 2009년 2.4백만불에서 2010년 8백만불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크게 생산, 유통, 소비, 수출로 구분하고 생산자단체, 학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왔다.

첫째, 고품질 화훼 안전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훼전문생산단지들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양액재배 및 에너지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비용절감을 이루었으며 전처리, 저온유통 및 병해충 방제 등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하였다. 또한, 생산자단체, 수출전문업체를 중심으로 화훼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관련 시설, 브랜드개발, 홍보 등을 강화토록 추진하였다. 아울러, 우수 신제품 농가 보급 촉진을 위해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 우량종묘, 구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둘째, 화훼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기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하여 전국 4대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 선진국 수준의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품질 화훼 유통을 위해 건식유통에서 습식유통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생활 속 꽃 소비문화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은 꽃 소비확대 여건을 조성하였다. 꽃 생활화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스타마케팅 등 홍보 활동으로 꽃꽂이 생활플라워디자인 경연대회, 미스코리아 홍보대사 위촉 등을 추진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꽃 가꾸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초등학교 5~6학년 10만명에게 화분 10만개를 보급하였다. 또한, 경조사에 사용되는 화환의 재사용 방지를 위해 분리형 개량화환 전시회 및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역·단체별 화훼축제·이벤트 활성화로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넷째, 화훼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중국과의 지리적 이점 등을 활용하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

여 수출화훼 선별장, 재배시설 건축 등을 통해 국산 화훼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주요 시장정보를 수집 및 전파를 강화하여 수출이 103백만불로 2009년 77백만불에 비해 33.8%나 크게 신장하였다.

▣ 향후계획

최근 국민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꽃을 가꾸고 즐기려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 화훼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꽃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화훼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화훼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녹색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분야에서는 고품질 화훼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 우수한 국내품종 개발 육성 및 농가보급 촉진, 집단화된 화훼전문생산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유통분야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선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유통 효율성 증진을 위한 현실에 맞는 화훼류 표준규격, 유통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꽃의 생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화원의 역할 확대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화훼 신상품 개발 및 판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분야에서는 절화중심의 수출에서 분화, 자생화 등으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일본 위주의 수출에서 러시아, 중국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시장개척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축산업

1. 한우산업

| 축산경영과 서기관 조병임

▣ 시행배경

한·미 FTA 등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추진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16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이 발효되어 가임암소 사육마리수 대비 84%가 사업에 참여하여 127천 농가, 1,068천마리가 가입하였다.

아울러, 2010년도에는 브랜드경영체 등 14개소의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시작하여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송아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였다.

●●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혈통등록,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 구축,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 유전자 보호 및 부정유통시비 방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는 한우관별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0년도에는 2009년보다 120% 증가한 936천마리를 관별하였다.

또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도 중점 추진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40개 한우 브랜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중 광역 브랜드는 12개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로 품질이 높고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우산업 조직화로 시군 지역별로 한우사업단 162개를 인증하였으며 시도 단위 광역사업단 9개소 및 대형축산물가공유통업체 육성 등 농가조직 중심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확대 대책은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 직거래 장터, 브랜드가맹점 등 직거래 확대, 소비자 판매가격 주기적 조사·공표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 소비홍보 및 산지 소값 안정대책

한우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지원 상한액인 9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촉진과 교육·홍보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TV 광고 제작·방영, 통화연결음 활용 광고,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실시, 유통감시단 설치, 한우농가 계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2009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08.7월) 및 쇠고기 이력제('09.6월)의 전면시행으로 쇠고기 소비가 늘어 산지 소값이 한·미 FTA 협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사육마리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 향후계획

한우의 번식기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은 2017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1년에는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과 한우농가 조직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농가 조직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계획이다.

2. 낙농산업

|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연섭

▣ 시행배경

전국적으로 생산조절제도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수급문제가 점차 해소됨에 따라 낙농산업의 핵심과제인 우유수급균형이 점차 실현되고 있어 전국적인 수급조절체계 구축 등을 위한 근원적 제도개편의 적기가 도래했다.

또한, 현행 원유 수급체계가 낙농진흥회, 협동조합, 유업체 직접집유 등 다중구조로 되어 있어 주체별 수급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업체의 경쟁력에 따라 제기되는 소속농가 형평성 문제의 해결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외적 환경으로는 FTA·DDA 등 수입개방에 따라 낙농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개방에 따른 가공유제품 수입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은 전국적으로 2,073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930천톤은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383, 가공시유 158, 유제품 389)하고 나머지 143천톤은 분유로 가공한 후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표 4-2〉 우유 수급상황

(단위: 만톤)

| 구 분 \ 연 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생 산 | 237 | 226 | 223 | 218 | 219 | 214 | 211 | 207 |
| 수 요 | 304 | 311 | 308 | 312 | 310 | 304 | 311 | 325 |
| · 시 유 (백색시유) | 163 (139) | 161 (135) | 154 (132) | 156 (136) | 158 (138) | 158 (138) | 157 (140) | 154 (138) |
| · 유 제 품 | 141 | 150 | 154 | 156 | 152 | 146 | 154 | 171 |

한편, 낙농가의 유질 개선을 지도하여 공장 도착 시까지 고품질 원유가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낙농자조금 사업으로 우유음용의 필요성을 소비자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반영했으며 전국적으로 유아, 주부, 노인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유 관련 교육체험 행사를 통해 우유의 가치 증진 등 국민들에게 우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08년부터 실시한 낙농체험관광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국에 체험목장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우유와 낙농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농체험목장을 학생들의 우유급식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 우유음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 양극화를 해소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우유급식 학교 수를 확대하여 청소년기의 우유음용 습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였다.

〈표 4-3〉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단위: 천명, 천톤)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학교우유급식 학생수 | 3,867 | 3,938 | 3,768 | 3,849 | 3,762 |
| 유 상 급 식 | 3,493 | 3,520 | 3,328 | 3,463 | 3,260 |
| 무 상 급 식 | 374 | 418 | 440 | 386 | 502 |
| 연간 원유 총생산량(A) | 2,176 | 2,188 | 2,139 | 2,110 | 2,073 |
| 연간 백색우유 소비량(B) | 1,363 | 1,381 | 1,385 | 1,397 | 1,362 |
| 우유급식 연간 소비량(C) | 149 | 152 | 146 | 148 | 147 |
| 대비율 (%) | | | | | |
| 백색우유 대비 (C/A) | 10.9 | 11.0 | 10.5 | 10.6 | 10.8 |
| 생산량 대비 (C/B) | 6.8 | 6.9 | 6.8 | 7.0 | 7.7 |

또한,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우유급식 담당공무원 연찬회,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 부대행사로 초·중고등학생 참여 경연대회,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유업체의 자율적인 학교우유급식발전사업비 거출(0.5원/팩)을 통해 지속적인 우유급식 확대 및 홍보 실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표 4-4〉 최근 3년간 우유급식률 변화

(단위 : 천명, %)

| 구 분 \ 연 도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
| | 급식학생 | 급식률 | 급식학생 | 급식률 | 급식학생 | 급식률 | 급식학생 | 급식률 |
| 초등학교 | 2,996 | 76.8 | 2,889 | 78.4 | 2,798 | 80.5 | 2,682 | 81.3 |
| 중학교 | 567 | 27.6 | 518 | 25.4 | 622 | 31.0 | 628 | 31.8 |
| 고등학교 | 353 | 19.5 | 339 | 20.6 | 416 | 21.2 | 432 | 22.0 |
| 특수학교 | 22 | 96.1 | 22 | 97.2 | 18 | 76.3 | 20 | 81.5 |
| 계 | 3,938 | 50.5 | 3,769 | 51.0 | 3,854 | 51.6 | 3,762 | 51.8 |

소비자 기호 변화, 미국·EU 등 낙농 선진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유 생산·공급체제 구축, 유통비용의 절감, 사료 자급기반 확충, 낙농경영의 체질 강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낙농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장기적 수급 안정을 위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FTA 등 시장 확대라는 대외 환경과, 다중구조로 되어 있는 원유수급체계의 불안요소 등 대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우유수급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낙농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09년 하반기부터 낙농가, 유업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농가 설명회 등을 거쳐 낙농산업발전대책의 큰 틀을 마련('10.3.5)하였으며, 종합대책의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생산자측 요구사항을 검토·보완하기 위해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10.3.12 ~) 중에 있다

낙농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장 수요에 맞는 계획생산으로 전국적인 우유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전국단위 수급 조절제 시행, 시장개방에 따른 낙농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국민 기초식량자원으로서의 낙농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증가로 국내생산이 감소하더라도 최소한 연간 200만톤 이상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 낙농산업종합대책 주요 내용

첫째,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단위 수급 조절제를 시행하는 한편,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연간 20만톤 규모의 가공원료유를 국제경쟁가격에 공급함으로써 FTA에 따른 생산감소 피해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학교 우유급식을 확대하여 시유 소비를 늘리고 미래의 소비층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신규 유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계층을 다양화하고, 낙농체험목장, 목장형 유가공사업, 낙농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확대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 젖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로 젖소개량 추진 등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계획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유업체 등 각 이해주체가 서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무T/F 회의 등을 통해 쟁점을 최소화하여 최종 합의를 통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1년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 처분된 젖소 마리 수가 많아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원유수급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낙농진흥회 소속된 농가별 기준원유량을 5% 증량하여 '11.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상가격을 지급할 계획이며, 낙농가 폐업 시 기준원유량의 20% 회수제도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원유 증산을 위하여 농가별 기준원유량에 의한 유대 산정기간을 현행 15일 단위에서 연간총량제로 전환·운영하여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수급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양돈산업

|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홍식

▣ 시행배경

FTA 등 대외개방 확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유류비 상승, 분뇨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돈의무자조금 정착,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 돼지고기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양돈산업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돼지 사육마리수는 2010년 12월 현재 988만마리로 작년 동기 959만마리에 비해 3.1% 증가 하였으며, 양돈농가 수는 7.3천호로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산지가격은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3~9월)와 비수기(10~12월)로 구분되어 가격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국내산 선호도 증가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월별 산지가격은 큰 폭의 등락 없이 생산비 이상을 유지하였다. 수입개방(1997) 이전에는 수매를 통한 수급조절이 가능하였으나, 수입개방 이후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매 추진이 어려워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양돈자조금과 자율수급조절 사업을 통하여 돼지고기 소비홍보 확대,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돼지고기 수출 추진

2000년 이후 구제역(2000년, 2002년) 및 콜레라(2003년, 2004년) 발생으로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중단되고 돼지고기 수급불안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8월에 제주지역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고 내륙지역 열처리공장 2개소가 일본정부로부터 승인받아 2009년 9월에 9년만에 일본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리핀, 홍콩, 대만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값이 저렴하고 동남아국가에서 선호하는

부산물(스킨, 지방, 간 등) 등을 수출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주요 수출대상국 검역관 및 수입업체 초청 시찰, 돼지고기 열처리가공품 수출을 위한 시설자금을 수출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서도 해외시장 수출다변화를 위해 수출국 현지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비 등을 지원하고, 러시아, 대만, 몽골 등에 대한 해외시장개척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향후계획

정부에서는 생산에서 가공·판매단계까지의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비용절감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 농가를 선발하여 일반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연구과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돈농가별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통일화작업과 중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돈농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열처리가공장 22개소를 육성하여 일본을 비롯한 홍콩, 필리핀, 대만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양계산업

| 축산경영과 사무관 전익성

▣ 시행배경

2010년 6월 양계 전업규모(3만마리 이상) 농가는 2,275호로 전체 사육농가 4,145호 대비 55% 수준이며, 사육마리수 점유율은 83%로 규모화 및 전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2010년 닭고기 소비량은 약 52만톤이며, 이중 수입량이 10만톤으로 자급률은 80% 수준으로 2000년 80%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 수입국가는 미국(5만5천톤)과 브라질(3만4천톤)

로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0년 닭고기 수출량은 15,991톤으로 베트남으로의 수출증가 등으로 2000년 1,710톤보다 9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FTA/DD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는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형닭 생산, 축사시설현대화, LED 보급 지원사업 추진 등과 더불어 양계산물에 대한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을 강화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최근 다이어트 열풍에 따른 가슴살 등 부분 육 수요급증과 소형 닭 위주 출하로 인한 생산비 가중에 따라 대형 닭 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2010년도에는 대형 닭 생산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사육지침서 발간 및 보급 등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국내 양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농가의 사육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이에 열악한 기존 사육시설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46개소(17,907백만원)에 대해 지원하였다.

2010년 8월부터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시장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와 협조하여 2014년 백열전구 퇴출에 대비한 고효율 LED 조명 보급사업을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301개 농가에 30억원을 지원하였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기업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9.6월부터 양계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2010년도에도 농가교육,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종계 D/B 구축을 강화하여 수급 예측 및 가격안정 도모 등에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2011년도에는 계사에 지열이용 냉난방 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2011년 4월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용란수입판매업 신설 및 계란의 포장

의무화와 표시(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등)의 의무화로 계란에 대한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양계산업은 과학이 바탕이 되어 종계 품종개량, 사양관리 등의 연구·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나, 육계 계열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상생협력 문제, 생산비용 절감, 계란의 위생문제 등 양계산업의 현안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숙제가 산재되어 있다.

특히,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간에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11년에는 '(가칭)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축산경영과 사무관 우만수

▣ 시행배경

국제 사료가격 상승 및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국내 부존사료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조사료 공급을 위하여 논을 이용한 하계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소 사육마리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사료 수요가 늘어 공급량도 함께 증가함으로써 '10년도에는 조사료 공급량이 503만톤 수준이다. 이중 목초, 사료작물, 볏짚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은 4,127천톤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수입산은 906천톤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은 확대되었으나 폭설·잦은 강우·저온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해 '10년도 조사료 자급률은 82%로서 전년도(84%)보다 2.4% 감소하였다.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지원 강화 등으로 유희농경지 이용이 증대되어 조사료 재배면적은 '09년 대비 1.2% 증가한 244천ha이다. 다만, 초지면적은 경지의 전용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도에는 '09년보다 800ha 줄어든 39.4천ha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8년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장거리 유통비, 기계·장비 구입비, 종자구입비, 볏짚 처리비, 조사료 가공시설 등 예산지원을 '08년 819억원에서 '10년도에는 1,00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겨울철 유향(논·밭)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의 일환으로 국내산 사일리지 품질 균일화 및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종·축산농가의 상호신뢰 회복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사업비 지원단가를 유가(油價) 및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일리지 제조비는 '11년 60천원/톤(기금 40%, 지방비 50%, 자담 10%), 경영체에 지원하는 기계·장비는 150백만원/30ha(기금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담 20%), 장거리 운송비는 60천원/톤(기금 50%, 자담 50%)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계 사료작물 재배시에도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30천원/ha)하여 조사료의 연중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를 위하여 수입조사료 할당 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 향후계획

기후변화, 개방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급여비율 개선,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10년에 244천ha, '15년에는 320천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량종자 보급 및 연중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종자선택, 작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사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계·장비 중 트랙터 장비 지원 시 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등 기본적인 곤포장비를 갖춘 경영체에 보조지원 하도록 하며, 정부 보조 대상 사료작물 종자는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종자에 한하여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의 계통 구매분에 한함) 및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을 지원하고 쌀 수급조절과 조사료 연중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논 및 간척지를 이용한 하계 사료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질의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한 생산주체 육성 및 TMR 가공장등 대량 사용처에 지원을 강화하여 국산 조사료 보급확산,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조사료생산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방역관리과 사무관 하옥원

▣ 시행배경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축산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 등에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등 자원화 시설과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2009년에 754억원에서 2010년 791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 사업비 : ('07) 424억원 → ('08) 664 → ('09) 754 → ('10) 79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개정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으나, 가축분뇨를 오수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9)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2007.11)을 제정하였다.

동 법령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축분뇨로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액비부숙기간(6개월 → 4개월), 액비살포 의무면적(돼지:640㎡ → 260㎡) 및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100m)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10.11.8)하였으며, 앞으로 액비의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액비살포

가능지역에 골프장·임야를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하여 4억원 이내에서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 조직체에 대하여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1991년부터 2010년까지 13,288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액비저장조 878기를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33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가축밀집 사육지역, 중규모(1~3천마리) 농가가 많은 지역, 도시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이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조직체에 대하여 1일 100톤 처리 기준으로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70개소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07) 5개소 → (08) 19 → (09) 39 → (10) 56 → (11P) 70

●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및 기술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악취제어·관리기술,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작물별·계절별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IT를 이용한 개별농가 및 국가단위 가축분뇨 통합관리기술 개발 등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향후계획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및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비료성분, 부숙도 및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액비살포비 등 사업비를 차등지원 하는 등 자원화 조직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안전위생과 사무관 강대진

▣ 시행배경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는 축산물 생산·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축사육단계에서는 농가가 동물용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 안전사용규칙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오리 농장에서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로써 주요 축종에 대하여는 농장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 명실상부한 일관적 HACCP 시스템(Farm-to-Table HACCP system)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성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가들과 몽골의 축산물 위생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하여 HACCP 제도 운용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도입한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HACCP기준원의 심사 전문인력을 91명으로 보강하는 등의 노력도 계속하였다.

도축·가공단계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경우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에는 총 126천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193마리에서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검출율 0.15%)되었다. 이는 2009년도의 잔류물질 검출율 0.16%에 비해 더욱 개선된 것으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축장별로 매주 1회씩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 및 일반세균 등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오염의 지표가 되는 살모넬라 균의 오염여부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단계에서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어, 총 309개소의 판매점 및 보관장에서 HACCP을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닭·오리고기의 유통과정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포장유통 의무화 조치를 모든 닭·오리 도축장과 판매점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싸고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제기된 소비자의 우려와 관련하여, 이를 해소하고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기립불능소 도축금지 및 보상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부산, 난산, 산육마비, 급성고창증을 제외한 원인으로 발생한 기립불능소에 대해서는 모두 도축을 금지하고, BSE 검사를 거친 후 폐기하고 폐기한 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향후 국내에 BSE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제기구(국제수역사무국, OIE)으로부터 인정받아 BSE 통제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 향후계획

2011년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감축하여 2011년 7월부터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고, 이와 함께 가축사육 농가들이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축산물 HACCP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전문인력 확충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며,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농장 및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8. 가축질병 방역 강화

| 방역총괄과 서기관 조옥현·오순민, 사무관 이기중

▣ 시행배경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일본 등에 BSE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별 질병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 내용 및 성과

국가 방역대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국경검역은 수입진초는 소독 및 검사 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 소독은 공·항만 입국장의 발판 소독조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 등을 통해 검색하고 있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 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국가 위기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되어 발령되면서 단계별로 방역조치가 추진된다. '10년도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연중 상시 방역체제를 유지하였다.

예찰요원을 동원한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축 신고를 위한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 운영 및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 관련 산업연수생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소독 강화와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국내 방역을 추진하였다.

특히, 구제역 발생농장 및 인근 방역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매몰조치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04년 3월 20일(102일간)까지 19건, 2006년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되어 2007년 3월 6일(104일간)까지 7건, 2008년 4월 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5월 12일(42일간)까지 33건이 발생하여 3차례에 걸쳐 총 59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야생조류의 이동시기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가금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11월~2월 기간 동안 운영해 오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08년 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여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철새 → 텃새 → 닭·오리) 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가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2월 13일까지 야생조류에서 유례없는 총 20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도 일부 농가의 축사 소독 미실시, 폐사축 발생 시 신고 지연 등 방역의식 결여, 살처분 대상 농장주들이 보상 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가금농장에서 발생 및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10년 12월 29일에 전북 익산 및 충남 천안지역의 닭·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었다. 이번 AI 발생은 상시방역을 통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출을 사전 경고하여도 농가, 운반차량, 분뇨처리·사료·동물용 의약품 등 관련 업체, 도축장 및 지자체에서 일관성 있게 철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AI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시방역을 통한 사전 조기검색 강화로 조기검색 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가 및 관련 업체의 자율적 소독 실시 등 방역사항을 철저

히 준수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돼지열병은 2001년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 이후 5개월만인 2002년 4월 16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 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 열병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돼지 열병 조기차단을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하였으나, 2010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돼지 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을 수립('09.1.9)하여 근절기반 구축을 위한 예방접종 100% 실시, 검사물량 확대(연간 540만마리)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BSE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반추동물유래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BSE 검사체계를 단순 검사마리수에서 2007년부터 OIE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개선하여 2008. 5월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부터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하였고 BSE의 국내 발생에 대비 머리·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하였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브루셀라, 광우병 등을 중점관리하고 입국자 소독,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등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국경검역, 국내방역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부족해진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인력을 확충,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복무를 대체해주는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2006년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446명('09년 151명, '10년 149명, '11년 146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시·군,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50명의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최대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해외 유입질병 및 국내 상시발생 질병 등 가축질병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등 록제 확대 및 농장 출입차량(관계자)에 대한 소독의무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 주도의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9.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축산정책과 사무관 김재민

▣ 시행배경

1987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그룹 설치로 시작된 UR다자간 농산물협상은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DDA, FTA, 쇠고기협상 등의 진행에 따라 축산물 수입 개방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산물 수입확대 추세와 국민 식생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축산물유통의 표준화·규격화 및 가축개량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축산법에 근거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을 도입하였다.

사업도입 이후 현재까지 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등급화 거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000년)하여 도축되는 전량에 대해 등급판정을 시행하고, 계란(2001년)과 닭고기(2004년)에 대해서는 업체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인 등급판정을 시행함으로써 주요 국내산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유통거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편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현재 주요 4대 축산물(소, 돼지, 계란, 닭)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축농가가 사육한 소와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되어 도축된 후 도체상태로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위생검사에 합격된 도체만을 대상으로 등급관정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도체별로 시행된 등급관정결과에 따라 도체에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관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유통되게 함으로써 도체의 품질가치가 유통단계 및 소매단계까지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의 도소매 가격이 품질에 따라 적절하게 차등 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 등급별 가격 차등화는 한우의 경우 최고등급인 1++등급과 최하등급인 3등급 간 3,095천원/마리로 2009년 대비 194천원이 상승되었으며 돼지는 1+등급과 3등급 간 134천원/마리로 전년 동기간 보다 11천원이 상승되었다.

이러한 축산물의 품질 간 가격 차등화의 정착은 양축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표인 거세율은 한우의 경우 2009년 71.1%에서 2010년 88.2%로 17.1%p, 1등급 이상 출현율은 56.7%에서 63.1%로 6.4%p 증가하였다. 또한, 돼지의 경우도 거세율은 2009년 97.9%에서 2010년 98.1%로 0.2%p,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2.3%에서 73.6%로 1.3%p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란과 닭고기의 등급관정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행되며 엄격한 공정과정 심사결과에 의해 지정된 등급관정시행 작업장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학교급식법에 납품기준으로 축산물의 등급이 설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정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계란의 경우 2010년, 31개 시행집하장에서 521백만개의 계란이 등급관정되었으며 이는 2009년 관정물량인 419백만개 대비 24.5%가 확대된 것이다. 닭고기는 2010년 27개 시행 작업장에서 46백만마리가 등급 관정되었으며 2009년 37백만마리 대비 24.1%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계산물에 대한 등급관정사업은 학교급식에 이어 대형할인점 및 프랜차이즈업체 등에도 등급의 활용도가 확대되어 등급관정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축산물등급관정사업은 등급 관정결과 및 가격정보 등을 신속하게 양축농가와 유통업체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축산물의 품질에 따른 적절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품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시스템은 축산물등급관정사업 시행주체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된 IT 인프라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며 등급통계, 출하지원, 확인서 조회, 경락가격 조회, 돈육대표가격, 축산물검수시스템, 부위별 요리 방법, 축산물브랜드 등 다양한 축산물생산과 유통·소비 정보를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축산물등급관정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내산 축산물이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

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정보제공시스템(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을 활용하는 이용자수가 월평균 2009년 180만명에서 2010년 220만명으로 22% 증가하였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안강화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2010년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로 선정되고 안전마크 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축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물등급판정 대상 품목인 소, 돼지, 계란, 닭 및 말 등에 대하여 등급판정과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조사는 축산여건 및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에 맞는 등급제도의 개선, 영농활용 등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실용적 해결과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등급판정사업 현장과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컨설팅 등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다. 2010년에는 소,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 시험사업 등을 통한 말 도체 등급판정기준 제정, 액란용 계란 등급판정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 육질등급 우수 농가 사양방법 연구 등 총 12건의 축산물등급판정 현장 연구조사가 진행되어 활용되었으며 축산법 개정에 따른 연구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축산물등급판정제도에 대한 대국민인지도 제고를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직접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대국민 홍보교육은 소비자 대상 전시·문화행사 45회 참여, 소비자 단체 회원,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 생산농가 및 대학생 대상 교육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97회 등 총 58천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월간 등급정보지 3,500부 발간,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26회, 광고 67회, 원고기고 40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도 실시되었다.

▣ 향후계획

국제적 경제 위기,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국내 축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소비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사양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고급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고기의 소매단계 등급표시를 점진적으로 유도하여 증가되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며, 축산물등급판정 정보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등급판정정보 내에 양축농가 및 유통업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정보제공이 단절되지 않게 전산 장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등급관정과 관련된 연구조사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뒷받침하게 할 계획이다.

10. 쇠고기 이력제 추진

| 방역관리과 사무관 손경자

▣ 시행배경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고 종축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의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부착, 이력정보의 전산 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와 도축·가공·판매단계에서의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 제도정비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에는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고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소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부착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을 지역축협 등 137개소를 지정·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 등록소의 도축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2010년에는 위생·방역상 문제발생 시 신속한 추적을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생 등 신고기한 및 포장처리실적 전산 의무신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 등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사업의 조기정착 추진

2009년도에는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 됨에 따라 유통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식육유통업체 등의 개체식별번호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 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도에는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소 사육현황을 조사하는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사육·유통단계 이력관리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DNA 동일성 검사 장비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이력정보 조회 방법 개발, 이력제 예산 및 마사회 적립금을 활용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였다.

▣ 향후계획

쇠고기 이력제도는 조기에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육농가와 영세 유통업체의 제도

이해 및 이행수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이력관리에 한계가 있고, 이력제 전산시스템 성능이 낮아 다양한 정보제공, 전산 접속 속도 향상 등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 등록정보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식육유통업체,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력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성능개선, 스마트폰, RFID 등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축질병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할 계획이며,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의무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를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 귀표 개발을 지원·개발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며, 묶음번호에 대한 이력조회 기능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11.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

|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홍식

▣ 시행 배경

축산구조를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하에 「축산물브랜드육성대책」이 2004년 2월에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 육성 방향 등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브랜드 사육비중이 2004년에 한우가 24.8%, 돼지가 45.0%이던 것이 2009년에는 각각 42.4%, 62.7%로 크게 높아졌다.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는 1단계 브랜드 대책 추진을 통해 기반형성기를 지나 성장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브랜드 인증,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 육성으로 브랜드 경영체의 가축 사육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비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브랜드 활성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FTA·DDA 등으로 대외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브랜드 육성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 비중을 소 60%, 돼지 8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이 2007년 11월에 마련되었다.

2008년은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시행 원년으로서 ①소규모 브랜드 통합으로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하고, ②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③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기본전략 하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도는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32개소, 1,140억원)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대규모·우수 브랜드에 중점지원 하되, 출하마리수 한우 800마리, 돼지 80천마리 이하 브랜드는 지원에서 제외하여 통합·규모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찾아 판매토록 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쇠고기 이력제 사업을 통한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도축마리수의 1% 수준의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단계까지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표시제를 쇠고기를 소비하는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8년 7월 8일부터(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에 대해 식육점 등 모든 유통단계는 물론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집중 단속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 향후계획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국내산 수요 증대를 위한 직거래 기반을 위해 브랜드별 직영 판매시설 지원(8개소, 95억원)으로 브랜드육 판로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전시관 등 복합시설인 브랜드육타운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합리적 가격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안정적인 공급능력확보, 마케팅시스템을 갖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명품 브랜드 육성, 소규모 브랜드 통합, 차별화된 컨설팅·교육과 동시에 브랜드간 협력을 주요 전략 축으로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절 임업

1.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가.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양민석

▣ 시행배경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종자의 개발과 이를 건전하고 우량한 묘목으로 육성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임목은 농작물과 달리 생장기간이 길어 유전적 우수성이 증명되지 않은 종자와 묘목을 사용할 경우 임목의 성장감소가 수확기까지 누적될 뿐 아니라, 불량한 형질의 임목이 생산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경영손실을 초래하므로 우수종자를 사용하고, 우량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기반정비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2008년부터는 산림분야에 신품종 개발 촉진을 위한 품종보호제도 도입과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분야의 유전자원 관리(이하 '산림유전자원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산림용 번식자원 인증규범(CFRM, Control of Forest Reproductive Material, Moving in International Trade)」에 따른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 종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정착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에 따른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산림분야는 2008년 3월 1일부터 밤나무, 표고버섯, 쑥 등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는 Rubus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림식물이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이 주관하게 될 품종(임산물)은 현재 약 7,462종으로 육종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품종 보호제도의 취지로 미루어 향후 산림분야 종자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조기정착을 위해 신품종 출원 유도 및 개인 육종가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강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신품종 요건 심사수행 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2008년 8월 출범시켰다. 그 결과, 2008년 18건, 2009년 45건, 2010년 38건 등 총 101건의 신품종 출원을 유도하였고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358건을 처리하였으며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중별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s)’ 79종을 개발하는 한편, 신속한 품종심사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강원 춘천과 충북 충주 등 2개소에 약 1.8ha의 재배시험 포지를 조성·완료하였다.

〈표 4-5〉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종

| 구 분 | 산 립 분 야 |
|-----------------------|--|
| 2008. 3. 1 (15종) | 뽕은 감, 산수유, 천마, 표고버섯, 밤나무, 느티나무, 벗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백운플,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
| 2009. 5. 1 (약 7,462종) | 모든 산림식물(Rubus屬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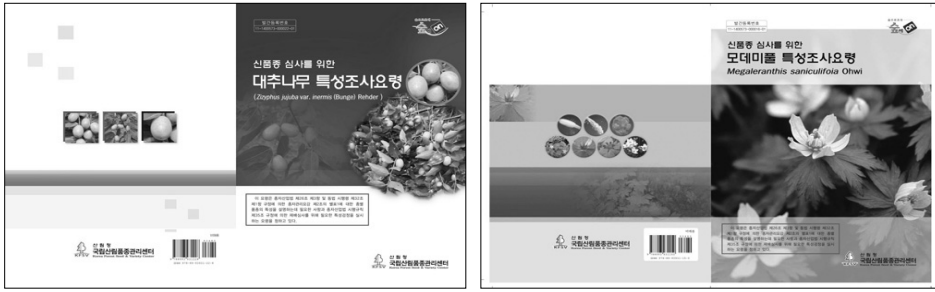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10(08. 2. 21), 2009-28(09. 5. 1).

〈표 4-6〉 산림분야 신품종보호 출원현황

| 연도 (출원수) | 산 립 분 야 |
|-----------|--|
| 2008 (18) | 밤나무(5), 표고버섯(3), 쑥(3), 감나무(2), 기린초(2), 벌개미취(2), 백운플(1) |
| 2009 (45) | 표고버섯(10), 감나무(5), 밤나무(5), 곰솔(4), 음나무(3), 잔디류(3), 구절초(2), 대추나무(1), 등골나물(1), 먼나무(1), 부처꽃(1), 산양삼(1), 소나무(1), 억새(1), 인동덩굴(1), 주름임(1), 주목(1), 쯤개미취(1), 지리대사초(1), 털부처꽃(1) |
| 2010 (38) | 표고버섯(7), 아까시나무(4), 헛개나무(3), 감나무(2), 곰솔(2), 구절초(2), 밤나무(2), 현사시나무(2), 개미취(1), 금평의다리(1), 대추나무(1), 돌나물류(1), 사스레피나무(1), 산사나무(1), 상수리나무(1), 소나무(2), 소사나무(1), 우목사스레피나무(1), 장수버섯(1), 쯤개미취(1), 해국(1) |

자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출원등록원부

〈그림 4-2〉 제정된 종별 특성조사요령



〈그림 4-3〉 자생식물 재배시험 포지 조성전경



● 산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2008. 8. 5일부터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와 이를 위한 책임기관의 지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준비,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지침 마련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유전자원 기본계획’을, 2010년에는 ‘유전자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수집·특성평가 및 보존 등을 수행, 2010년 말 현재 20,527종 855,947건(4,249ha 별도)의 유전자원 실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표 4-7〉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단위 : 종, 점, ha)

| 구 분 | 종 수 | 보 존 점 수 |
|---------------|--------|-----------------|
| 종 자 | 3,745 | 29,062 |
| 영 양 체 | 2,230 | 298,770 |
| 미 생 물 | 148 | 3,996 |
| 집단(현지내보존, ha) | 75 | 4,249ha |
| 식물·곤충·미생물 표본 | 14,329 | 524,119 |
| 합 계 | 20,527 | 855,947/4,249ha |

자료 : 2011년 농업유전자원 시행계획 - 기관별 유전자원 보유현황(10)

● **우량 산림종자 공급을 위한 채종원, 채종림 확충·관리**

검증된 우량한 산림용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채종원 조성·관리 발전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채종원산 종자로의 공급이 어려운 수종에 대해서는 채종림(채종임분 포함)을 확대 지정하여, 채종원과 채종림의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품질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등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8〉 우량 산림종자 공급원 조성실적(2010년 기준)

| 구 분 | 면 적(ha) | 대상 종 | 비고 |
|-------|---------|------|------------------|
| 채 종 원 | 727.3 | 60 | |
| 채 종 림 | 278.9 | 14 | 지정·변경(1994~2010) |

●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영세한 묘목생산업을 지역기반 종자산업으로서 발전시키고자 2002년도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건전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간이온실, 관정시설, 토양개량, 종자저장고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표 4-9〉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 구 분 | 연 도 | | | | | | | | | |
|-----------|-----|------|------|------|------|------|------|------|------|------|
| | 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관 정(공) | 113 | 20 | 20 | 22 | 10 | 10 | 11 | 5 | 6 | 9 |
| 간이온실(동) | 110 | 16 | 14 | 17 | 9 | 9 | 10 | 8 | 12 | 15 |
| 토양개량(ha) | 406 | - | 96 | 98 | 62 | 51 | 12 | 35 | 42 | 10 |
| 종자저장시설(동) | 3 | - | - | 1 | 1 | - | 1 | - | - | - |

자료 : 산림청, 2010년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 **향후계획**

● **품종보호제도 활성화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품종보호제도와 산림유전자원관리, 산림용 종묘 국가관리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고자 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설립하여 2010년까지 신품종 출원(101품종) 및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358건) 유도, 79종의 ‘종별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s)’ 제정 및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종자 및 묘목시장에서 불법종자 근절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에 대한 계도 등 종자유통단속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1년도에는 품종보호 누적출원 건수를 130품종으로 설정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30종의 '종별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s)'을 제정하여 총 109종의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에 확보된 산림유전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신규예산을 활용하여 약 90만점의 유전자원과 50여톤의 산지조림용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Gene Bank(유전자원 보존·저장 기능 포함)를 201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DNA 분석을 통한 원산지 추적기술의 개발, 불법종자 유통단속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ABS, 일명 나고야의정서)」이 채택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보존목록 작성과 조사·수집·보존·증식 및 Gene Bank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량 산림종자 공급원 확충·관리 및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우량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그 공급원이라 할 수 있는 채종원 등을 1,006ha(74종)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품질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우량한 종자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반조성 시설(간이온실, 관정시설, 토양개량, 종자저장고 시설 등)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한 종묘생산업이 지역기반의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녹색성장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립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조준규

▣ 시행배경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급속히 황폐화된 산림을 녹화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1, 2차 치산녹화('73~'87), 3차 산지자원화계획('88~'97), 제4차 산림기본계획('98~'07)에 따라 조림사업을 역점 추진하였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자원육성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10년까지 429만ha에 110억 그루의 나무를 조림하여 세계적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대통령 '08.8.15. 광복절 경축사)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한 나무심기를 통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과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에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하여, 2010년에는 경제림조성을 위한 조림 16천ha(37백만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2천ha(3백만본), 유휴토지 조림 2천ha(2백만본) 등 총 22천ha(43백만본)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백합나무 등 속성수 조림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거 산림녹화시기에 식재하여 벌기령에 도달한 리기다소나무림을 경제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고 있다. 또한,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공익조림을 실시하고, 산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금강소나무 및 안면소나무를 고품격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그림 4-4〉 한국의 치산녹화



▶ '60년대 황폐한 산림('60년대 서울)



▶ 녹화된 산림(강원 횡성)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확충을 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유휴토지 조림 등 산림의 기능과 산주의 경영목표에 따라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조림 수종은 목재생산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편백, 백합나무 등 용재수종을 기본수종으로 하여 산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옻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특용수종을 식재하였으며, 생활권 주변에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등과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였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백합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 리기테다소나무 등 생장이 빠른 속성수를 바이오순환림으로 식재하고, 조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60~70년대 치산녹화기에 심어진 리기테다소나무는 벌채 시기가 지나 점차 노쇠하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만연되어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이를 벌채하여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백합나무 등 경제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대체하고 있다. 리기테다소나무림을 벌채할 때에는 산림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잔존목을 남겨두는 택벌식 벌채 또는 대상벌채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친화적인 벌채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11천ha의 리기테다소나무 등 불량림 수종갱신(樹種更新)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종갱신을 통해 바이오순환림 등 경제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4-5〉 바이오순환림 조성



▶ 백합나무 조림지(경기 양평)



▶ 백합나무 성림지(전남 강진)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 유휴지에 나무를 심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탄소흡수원 확보와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7년부터 5년간 2,500ha를 계획하였으나 수요가 많아 2007년에 절반에 가까운 1,051ha를 조성하고, 2010년까지 6,028ha를 조성하였다.

〈표 4-10〉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백만본)

| 구 분 \ 연 도 | 계 | 2008 | 2009 | 2010 |
|-----------|--------|--------|--------|--------|
| 면 적 | 65,426 | 21,992 | 21,919 | 21,515 |
| 본 수 | 127 | 44 | 40 | 43 |

▣ 향후계획

산림자원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자원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바이오순환림,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목재자원 공급 및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08~'17) 동안 253천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백합나무 등 속성수를 이용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20년까지 10만ha)

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주요원

▣ 시행배경

우리는 일제시대와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헐벗고 황폐된 산림을 범국민적 노력으로 불과 3~40년 만에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다. 짧은 기간에 녹화에 성공한 만큼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산림면적의 59%('10년 말)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자원으로서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70~80년대 국토녹화 이후 산지 자원화를 위한 조림 수종을 다양화하는 등 경제림 조성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녹화된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육성할 대상지가 구분되지 않아 집약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인공조림지 등을 대상으로 3년간('99~'02) 경제림 대상지에 대한 산

림실태를 조사하여 '02. 7월 경제림 육성대책을 수립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8월 경제림 육성 대상지를 조사하여 2003.12월 전국 1,221개단지, 245만ha의 경제림 육성단지를 선정하고 수치지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경제림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경제림 육성단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림 단지를 최종 정비하여 전국 450개 단지 292ha(국유림 105개단지 58만ha, 민유림 345개단지 234만ha)를 확정(2005.9월)하여 경제림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11〉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 구 분 | 계 | 국 유 림 | 민 유 림 |
|------------|-----|-------|-------|
| 단 지 수 (개소) | 450 | 105 | 345 |
| 면 적 (만ha) | 292 | 58 | 234 |

경제림 육성 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제림 육성 단지별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여건과 임상, 산림기본계획 등 기존 산림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현가능한 중장기 산림 관리계획인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민유림 128개 시·군 345개 단지에 대하여 수립하였으며, 경제림 육성 단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인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그림 4-6〉 경제림육성단지



▶ 대관령경제림육성단지(금강소나무, 강원 강릉)



▶ 방장산경제림육성단지(편백나무, 전남 장성)

▣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10년 말 현재 13.5%로 약 86.5%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을 경제적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292만ha의 경제림 육성단지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집중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림 육성 단지 내 산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경제림 육성 단지에 대한 일제 준비를 통하여 통계 자료를 재구축하고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숲 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임하수

▣ 시행배경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天然林保育), 천연림개량(天然林改良), 산물수집 등으로 구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투자수익률이 낮고 국토자원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주에게 사업비의 90%를 보조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교토의정서 발효(05.2)로 온실가스 감축이행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숲가꾸기 산물의 바이오매스 활용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기간내에 추진한 숲가꾸기 사업은 총 3,010천ha로 계획

(1,560천ha) 대비 193%를 실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숲가꾸기 사업은 기능인영림단,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 숲가꾸기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으로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연인원 1,554만명(상시 연평균 13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실업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2009년까지 총 3,911천ha의 숲을 가꾸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청 훈령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제정(2004.12)하여 시행함으로써 숲의 기능별로 차등화된 숲가꾸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숲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해 숲가꾸기 설계·감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각종 제도적·법적 개선이 추진되었다.

〈표 4-12〉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2009년)

(단위: 천ha)

| 연 도 | 구 분 | 실 적 | | |
|-----|------|-------|-------|--------|
| | | 계 | 정책사업 | 공공근로사업 |
| | 계 | 3,911 | 3,475 | 436 |
| | 1998 | 257 | 214 | 43 |
| | 1999 | 283 | 154 | 129 |
| | 2000 | 276 | 159 | 117 |
| | 2001 | 229 | 134 | 95 |
| | 2002 | 296 | 244 | 52 |
| | 2003 | 346 | 346 | - |
| | 2004 | 337 | 337 | - |
| | 2005 | 348 | 348 | - |
| | 2006 | 334 | 334 | - |
| | 2007 | 304 | 304 | - |
| | 2008 | 378 | 378 | - |
| | 2009 | 523 | 523 | - |
| | 2010 | 470 | 470 | - |

주 : 숲가꾸기 실적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사업을 포함함.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09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일자리 창출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2009~2013)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125만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202천개 일자리 창출 및 산물 650만^m을 수집·활용할 계획이다. 200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림의 다양

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맞는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를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표 4-13〉 1단계 숲가꾸기 5개년(2004~2008년)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천명, 천ha, 천㎡)

| 구 분 | | 연 도 | | | | | |
|----------|------|--------|-------|-------|-------|-------|-------|
| | | 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예 산 | | 8,341 | 1,200 | 1,475 | 1,584 | 1,981 | 2,478 |
| 고용 인원 | 연인원 | 12,500 | - | 2,500 | 3,000 | 2,750 | 4,250 |
| | 상시인원 | 13 | - | 10 | 12 | 11 | 17 |
| 사업면적 | | 934 | 179 | 184 | 179 | 176 | 216 |
| 산물수집량 | | 1,723 | 179 | 240 | 274 | 380 | 653 |

주 : 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실적은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사업의 큰나무가꾸기 추진 실적임.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권 산림내 숲가꾸기를 완결 추진하는 등 집약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였다. 이 기간에 가시권 산림의 경관 개선을 위한 현장 대응조직인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여 도로변 칩, 가시막 등 덩굴류를 집중 제거하였으며, 비닐랩 밀봉처리, 기계장비(CANDA) 등 친환경 덩굴제거 방법 개발·보급하였다.

아울러,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능별·경영목적별로 숲가꾸기 방법을 차별화하여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나무·참나무를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육성해 나가며 간벌재 등의 수집비 지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더욱 촉진하였다. 인공림을 우선하여 숲가꾸기 실행으로 경제적 가치제고에 주력하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하여 숲가꾸기 이후 발생된 산물을 수집 시장에 공급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숲가꾸기를 통해 수집된 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에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그룹 등의 참여가 확대되어 숲가꾸기 모니터링, 시범림 조성사업, 현장 토론회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뿐만 아니라 현장 컨설팅을 통한 임업기술 습득으로 사업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숲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숲가꾸기 대상지를 실제로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꾸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과 사업 실행자의 기술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 4-14〉 2010년 숲가꾸기 추진실적

(단위 : 천ha, 억원, 천m)

| 사 업 명 | 2010년 | | |
|---------|-------|-------|-------|
| | 사업면적 | 사업비 | 산물수집 |
| 계 | 271 | 3,132 | 1,132 |
| 정책숲가꾸기 | 251 | 2,213 | 847 |
| 공공산림가꾸기 | 20 | 919 | 285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숲가꾸기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도에는 일일 22천명을 상시고용산림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산림,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댐·호수 및 주요 강유역 등 수원함양을 위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주변 산림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림을 대상으로 공공산림가꾸기를 추진하였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일일 고용형태로 주 40시간 근무제이며 주차, 월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일일 임금 외에 부대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기술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2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희망자에 한해 최대 6주까지의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숲가꾸기 분야의 기능인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표 4-15〉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일자리 제공 실적

(단위 : 명, 억원)

| 사업명 | 연 도 | 2008 | | 2009 | | 2010 | |
|---------|-----|--------|-------|--------|-------|--------|-------|
|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계 | | 14,608 | 2,478 | 32,858 | 4,212 | 22,506 | 3,132 |
| 정책숲가꾸기 | | 8,958 | 1,936 | 12,392 | 2,267 | 12,310 | 2,213 |
| 공공산림가꾸기 | | 5,650 | 542 | 20,466 | 1,945 | 10,196 | 919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향후계획

2단계 숲가꾸기 5개년(2009~2013년) 추진계획과 200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맞는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1년은 2,938억원(국고)의 예산으로 266천ha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19천

명의 상시 녹색일자리 창출과 130만㎡의 산물을 수집·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4-16〉 2011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천ha, 천명, 천㎡)

| 구 분 | 계 획 | 비 고 |
|---------|-------|----------------------|
| 사 업 예 산 | 2,938 | •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
| 사 업 면 적 | 266 | • 인공림 속아베기 위주로 추진 |
| 일자리 창출 | 19 | • 상시고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 산물수집·활용 | 1,300 | • 숲가꾸기 부산물의 산림자원화 활용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첫째, 2011년에는 경제림단지 중심으로 정책숲가꾸기를 내실화하고, 숲가꾸기 작업시 베어진 산물의 수집에 주력하여 펠릿 등 산림바이오에너지 자원과 산업용재로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약도의 속아베기를 실시한 임지에 대한 추가 작업을 실시하고 인공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 비중을 확대하며 숲가꾸기 설계 감리제도 확대로 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숲을 가꾸고 산물을 수집하여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숲가꾸기 일관시스템을 확대한다. 숲가꾸기 대상지역을 보다 집단화·단지화하여 산물수집과 연계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산물수집 및 활용계획을 반영한 통합작업시스템을 정착하여 임업기계화를 통한 적극적인 산물수집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원료공급 등 산림자원의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그림 4-7〉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구축 및 산물수집

| | |
|------|--|
| 숲가꾸기 | • 10ha 이상 단위로 집단화 |
| 간벌률 | • 20%내외 → 35%내외 |
| 수집률 | • 20%내외 → 50%내외 |
| 수집방법 | • 인력위주 → 기계화 수집 (0.8㎡/1인) (4.0㎡/1인)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셋째, 주요 도로변, 강변 등 가시권 산림의 집약적 숲가꾸기로 산림경관을 개선해 국토의 품격을 제고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전국단위로 확대된 ‘숲가꾸기 패트롤’ 현장 대응 조직을 활용하여 주요 거점별 숲가꾸기를 우선 실행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창출하고자 한다.

넷째, 숲가꾸기 현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정례화하고 숲가꾸기 담당자 실무교육 및 근로자 기술교육을 확대하며, 현장 소통을 위한 워크숍과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정부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시장공급 확대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중심으로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5,300명을 상시 고용하여 추진한다.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주요 강 유역 등 수원함양을 위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 주변 생활권산림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 및 숲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꾸는 정책의 기초, 즉 심어서 녹화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기간(2009~2013) 중 125만ha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202천명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650만m³의 산물을 수집·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4-17〉 2단계 숲가꾸기 5개년(2009~2013) 추진계획

(단위: 천ha, 천명, 만m³)

| 구 분 \ 연 도 | 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사업면적 | 1,250 | 235 | 240 | 256 | 258 | 261 |
| 일자리창출 | 202 | 22 | 33 | 45 | 49 | 53 |
| 산물수집량 | 650 | 80 | 110 | 130 | 150 | 180 |

주: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은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사업의 큰나무가꾸기 추진 계획임.

자료: 산림청 산림자원국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림청 산불방지와 사무관 김기현

▣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478건의 산불로 1,161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규모는 미국(9만건, 282만ha), 캐나다(7천건, 169만ha)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불이 특정시기(2~5월)에 사람의 활동(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64%가 산림이라는 점에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4-18〉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단위 : 건, ha, 억원)

| 구분 \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평균 |
|---------|------|-------|------|-------|-------|------|------|------|-------|------|-------|
| 건 수 | 785 | 599 | 271 | 544 | 516 | 405 | 418 | 389 | 570 | 282 | 478 |
| 면 적 | 963 | 4,467 | 133 | 1,588 | 2,067 | 254 | 230 | 227 | 1,381 | 297 | 1,161 |
| 건당피해 | 1.2 | 7.5 | 0.5 | 2.9 | 4.0 | 0.6 | 0.6 | 0.6 | 2.4 | 1.1 | 2.4 |
| 피 해 액 | 27 | 90 | 3 | 41 | 75 | 4 | 4 | 4 | 39 | 45 | 33 |

자료 : 산림청, 2010년 산불통계연보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 봄철에는 잦은 눈·비 등 기상여건이 대체로 유리하였으나, 가을철에는 가뭄 지속 등 최근 10년간 기상여건이 가장 불리하였고, 천안함·연평도 피격 및 구제역 확산 등 사회적 여건도 산불방지 전념에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위험 시기 및 주요시기에 산불방지특별대책,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력 보강대책 등 각종 특별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불감시원 위치관계 시스템 도입 및 산림지리공간정보(FGIS)활용으로 산불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초동진화 등을 구축하는 등 산불상황 관리의 체계화를 이루었다.

● 산불위험 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6.2 지방선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25일부터 봄철 산불 조심기간 종료시(5.15)까지 연장하여 운영하였고 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가을철에도 처음으로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시스템 개선,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또한, 설연휴, 정월대보름, 청명·한식 및 산나물채취 기간 등 산불발생 위험시기에는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제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겨울철 및 봄철 가뭄대비책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있거나 주변 취수원이 없는 지역에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는 씨 스노클(Sea-Snorkel)을 장착한 초대형 헬기를 배치함으로써 산불진화 헬기의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하고 갈수기를 대비하여 하천·소류지 등에 취수장 등 비상 급수원을 확보하였다.

●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 및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강화

국가정책조정회의(2.12)에서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산불대응력 보강을 위해 소관 부처별로 중앙 및 지자체의 산불방지 대비 태세의 확인·점검, 논밭두렁 및 농산쓰레기 소각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불방지에 대한 관심 촉구 및 산불담당 인력·조직 유지 및 확충,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병력 및 헬기 지원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국무총리실의 주관으로 산림내 목조·문화재 합동점검(4.26~4.30)을 실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Green Post 2020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집배원 13,000명을 산불방지활동에 활용하였고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강릉)에는 지자체, 군·경찰·소방,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공동 근무하는 산불관리센터를 운영하였다.

● 산불예방 강화 및 산불상황 관리의 체계화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인력 배치 확대(3만명), 무인감시카메라(578대) 설치 등 지상감시 활동을 강화하였고 감시원에게 GPS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 지급(9,064대)을 통한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헬기 조기 출동으로 평균진화시간을 단축하였고 이와 더불어 산림지리공간정보(FGIS)를 활용하여 진화여건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진화대책 수립 등 산불상황 대처 능력을 키웠다.

● 헬기 진화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합동 진화체계 구축

산불특별대책기간 중에 헬기 가동 가능율을 90%이상 유지하고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위험 지역에 이동 배치하여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헬기 취수시간 단축을 위해 담수지가 없는 산간지역(반경 5km 이내)에 취수용 사방댐을 시설(15개소)하고 골프장 물웅덩이 및 바닷물을 임시 취수원으로 사용하였고 산불규모에 따라 지자체 임차헬기 및 유관기관 헬기 144대(산림 47, 임차 50, 소방 26, 군21))를 산불진화에 공조 투입하는 등 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였다.

2010년 가을철의 가뭄 지속 등 최근 10년간 기상여건이 가장 불리하였고 천안함·연평도 피격 및 구제역 확산 등 사회적 여건도 산불방지 전념에 불리하였음에도 10년 평균(478건, 1,161ha) 대비 산불발생 건수는 59%, 피해면적은 391%로 감소하였고 인명, 가옥, 문화재,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수반한 재난성 산불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시기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과 정부부처, 지자체 등 산불관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향후계획

향후 산불방지 정책은 GPS 신고단말기를 통한 감시활동 강화 및 실시간 신고체계 구축, 산불 원인 과학적 분석 및 산불방지대책 현장적용 강화, 주민 밀착형 감시 등 현장중심의 감시체계 구축 및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강화, 헬기 진화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한 선제적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사무관 안진수

▣ 시행배경

지구상의 약 150만여 곤충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4,000여 종이며, 산림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주요 산림병해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 20여 종이다.

이러한 병해충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375천ha의 약 3.6%에 달하는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림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신종 병해충의 발생 및 기존 병해충의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화와 교통의 발달로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산림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해충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지속적으로 예찰·방제를 실행하여야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 말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2009년도보다 22% 감소한 225천ha이며, 주요 4대 병해충⁴⁾은 29% 감소한 140천ha이다. 매년 10% 이상 감소 목표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19〉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단위 : ha)

| 병해충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 체 | | 389,955 | 371,539 | 353,125 | 290,404 | 225,345 |
| 소나무재선충병 | | 7,871 | 6,855 | 6,015 | 5,633 | 3,547 |
| 참나무시들음병 | | 1,944 | 3,591 | 4,087 | 2,489 | 1,812 |
| 솔잎혹파리 | | 195,759 | 179,585 | 183,229 | 155,897 | 113,123 |
| 솔껍질깍지벌레 | | 45,146 | 47,207 | 41,210 | 32,497 | 21,855 |
| 흰불나방 | | 23,308 | 22,107 | 19,687 | 15,478 | 13,325 |
| 잣나무넓적잎벌 | | 4,250 | 3,397 | 3,941 | 4,576 | 4,865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 | 4,808 | 9,519 | 3,161 | 1,432 | 361 |
| 밤나무해충 | | 59,215 | 53,707 | 51,411 | 41,464 | 31,629 |
| 기타병해충 | | 47,654 | 45,571 | 40,384 | 30,938 | 34,828 |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997년까지는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2004년 경남·경북지역 및 중부지방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어 2006년 말에는 전국 62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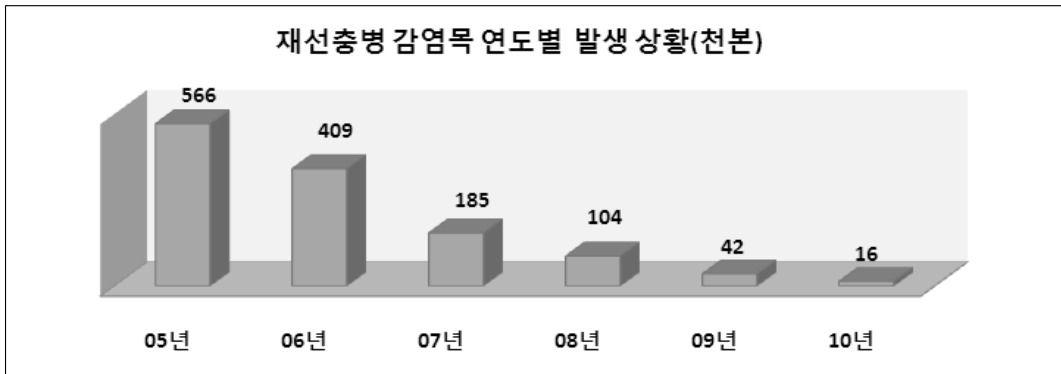
4) 4대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2005. 5월) 이후 집중방제 체계가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방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6년 말에는 피해면적이 감소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어 2010년 말 현재 40개 시군구, 피해면적은 3,547ha에 이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제방법도 매우 어려우나 적극적인 방제노력으로 2010년도에는 감염목 발생 본수가 16천 본으로 대폭 축소되어 2005년 최고 발생대비 97% 이상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완전방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선제적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 4-20〉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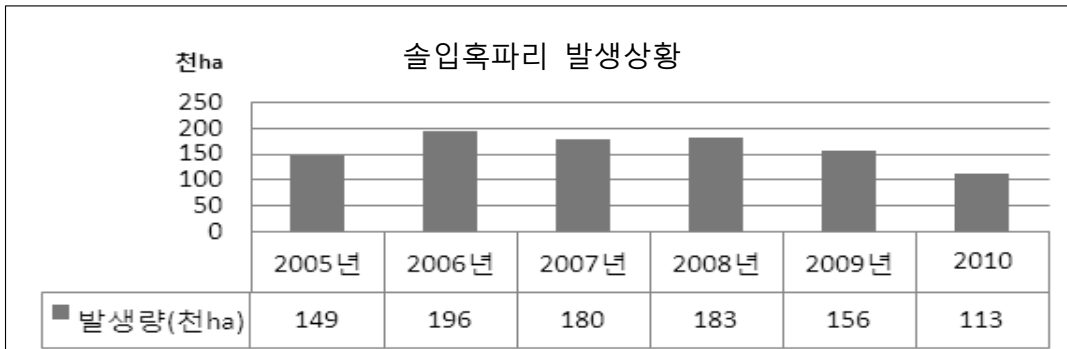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솔잎혹파리 방제

솔잎혹파리는 1988년 327천ha 발생면적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도에는 73천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여 2006년 196천ha에 발생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예찰·방제정책 추진으로 2010년도에는 113천ha로 전년보다 28%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4-21〉 최근 10년간 솔잎혹파리 발생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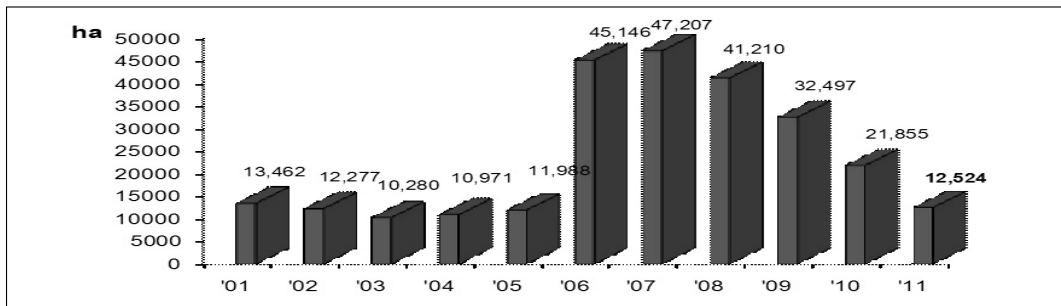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 **솔껍질각지벌레 방제**

솔껍질각지벌레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의 우량한 해송림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써 1983년 솔껍질각지벌레로 판명된 이래 완만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년도에는 발생량이 45천ha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2009년도에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원면 모항리에서 신규로 발생되어 확산 우려가 있었으나 항공방제, 나무주사, 임업적방제 등의 노력으로 32천ha로 약 21%가 감소하였다. 2010년도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제방법으로 고도화하고 적기 예찰과 방제를 통하여 2006년 대비 51%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표 4-22〉 최근 10년간 솔껍질각지벌레 발생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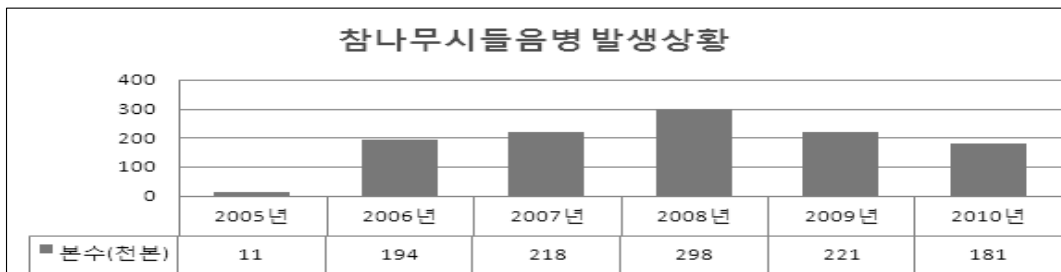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도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계속 확산되어 2008년에는 298천본이 발생되어 최고 정점을 이루었으나 소구역모두베기 방제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2010년에 40%로 확대 추진하여 매개충의 서식지가 대폭 감소되었다. 또한, 매개충의 생활사에 따른 끈끈이롤트랩, 전기충격 도입, 유인목 설치 등 복합방제도 함께 실행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2010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39% 감소한 181천본이 발생하였다.

〈표 4-23〉 참나무시들음병 발생현황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향후계획

2011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전략은 5년 내 총 발생면적의 50%를 감소시킨다는 목표이다. 산림 병해충 방제정책을 '사후 방제방식'에서 '선제적 사전예방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선제적 방제를 위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확대와 예찰방제단을 통한 신속·정확한 예찰·방제체제를 정착시킬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 집중관리 체계로 매년 절반이상의 감염목 발생을 줄여 갈 예정으로 2013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목표로 재선충이 발생된 모든 지역을 청정지역화 하여 세계 최초로 재선충병 완전방제 성공국이라는 신화와 방제기술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솔잎혹과리·솔껍질깍지벌레는 매년 10%씩 감소 목표로 소나무림 위생간벌 등 임업적 방제사업 확대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나무주사 내실화와 적기방제 추진, 각지벌레 확산 축선인 동·서해안 선단지 정밀조사 및 집중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5년 내 50% 감소 목표로 확산 저지를 위하여 근원적 방제방법인 소구역모두베기를 40%로 확대 시행하고, 발생지역 리·동별 특별관리체계 구축 및 끈끈이롤트랩, 전기충격법, 유인목 설치 등 다양한 방제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타병해충 및 외래·돌발해충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확산 저지를 위해 조기발견 및 공동방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 사후방제에서 선제적 사전예방사업으로 전환

산림병해충 총 발생규모의 10% 감소를 목표로 가뭄·병해충에 취약한 소나무림에 대한 재해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예찰방제단을 통한 신속한 예찰·방제체계를 구축·시행하고 있다.

● 돌발·외래병해충 적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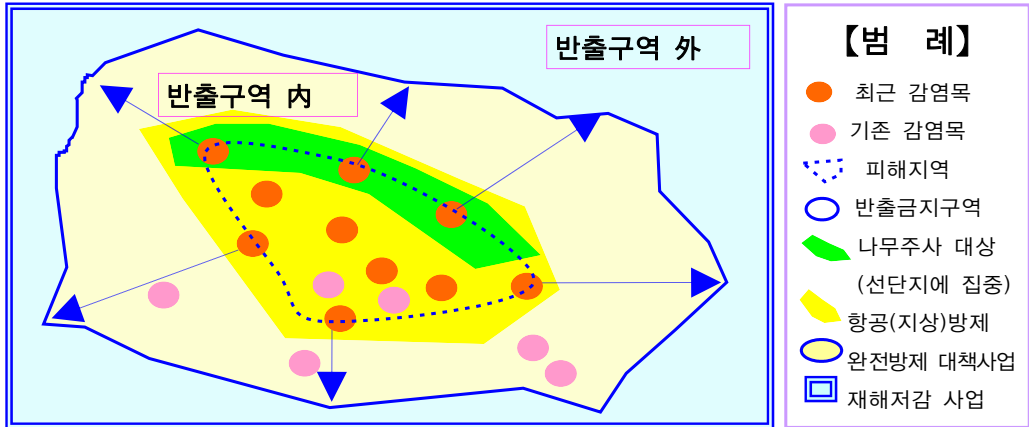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과 활발한 국제교류로 꽃매미, 아시아매미나방 등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빈발하고, 기존의 일반 병해충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타 지역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방제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 산림병해충별 맞춤형 방제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및 일반병해충 발생 10%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해

층별 생활사를 적용한 맞춤형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고, 임업적 방제를 통한 피해지의 환경을 병해충 발생 및 증식에 불리하게 조성함은 물론 피해 확산의 근원을 제거하는 등 복합적이고 과학적인 방제방법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4-8〉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전략 개념도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방제 작업시 천공기 등 기계장비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상존함을 감안하여, 방제작업 착수 전 필히 안전교육과 작업요령 시연 등을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작업에 대한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산림청 치산복원과 서기관 이명수

▣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산림 모암의 대부분이 풍화침식이 쉬운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의 경사도가 급하며, 약 1,300~1,500mm가 되는 연평균 강수량의 60%가 여름철인 6~9월에 내리는 자연 조건으로 인한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과거 전쟁에 의한 피해와 남벌, 화전 등으로 인해 195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10%인 68만ha가 황폐화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를 복구하여

치산녹화가 성공하게 된 이면에 '사방사업'이 있었으며 1907년 구한국시대 근대적 개념의 사방사업이 서울 창의문(현 청운동)에서 적묘공(積苗工) 약 5ha를 처음 실시하였고 1962년 「사방사업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사방사업 실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최근에는 엘니뇨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많은 비구름을 동반한 태풍도 빈발하고 있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산사태가 하류의 농경지와 주택, 도로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근래의 사방사업은 재해방지에 중점을 두고 주요계곡과 경사면 등에 사방댐 및 계류보전 등 예방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735개소, 산지보전 70ha, 산사태예방 37ha, 계류보전 100km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림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재해예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2004년 3개소 시범실시 이후 2010년까지 총 84개소를 시공하였다.

〈표 4-24〉 산사태 피해방지 사업시행 실적(2010년)

| 구 분 | 산지보전 | 산사태예방 | 해안방재림조성 | 계류보전 | 사방댐 | 사방댐준설 |
|-----|------|-------|---------|------|-------|-------|
| 실 적 | 79ha | 37ha | 12ha | 65km | 756개소 | 557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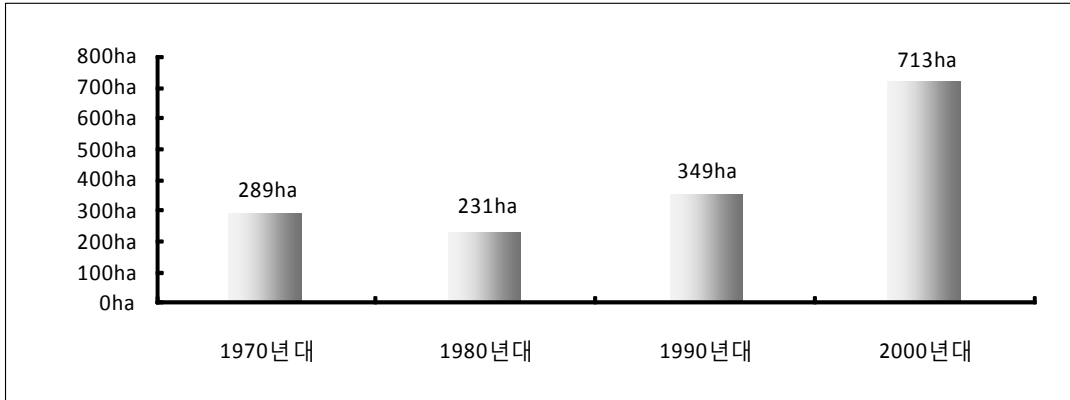
주 : 산림유역관리사업(2010)15개소는 별도임

▣ 향후계획

10년 단위 연평균 산사태 발생은 2000년대부터 급격히 산사태 발생이 증가·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수해피해 유형을 보면, 계곡부에 발생된 토양 붕괴가 갑자기 불어난 계류수와 같이 유입, 확대 재생산되면서 하류의 농경지와 가옥을 매몰시키는 대형 토석피해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방댐의 주요기능은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밀려 내려오는 토석을 차단함으로써 하류의 범람을 방지하는 토석차단,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뿌리째 뽑혀 내려오는 유목을 차단함으로써 교량과 배수관이 막혀 대형피해가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목차단, 가뭄 등에 대비하여 상류의 물을 저장함으로써 산불 취수원·농업용수·산림휴양 등에 활용하는 물 저장 효과가 있다

〈표 4-25〉 산사태 발생 추이



주: '09년은 7.7-16일 집중호우로 부산, 전남 등 지역에 산사태 250ha 등 피해발생

〈표 4-26〉 사방댐의 효과성 입증사례

| 시설연도 | 개 소 별 | 재 해 방 지 효 과 |
|------|----------------|---------------------------------------|
| 2002 | 평창, 봉평, 흥정 | 가옥 93호, 인원 190명, 밭 1ha, 마을도로 3km 보호 |
| 2004 | 평창, 봉평, 흥정, 덕거 | 가옥 116호, 인원 305명, 밭 20ha, 마을도로 4km 보호 |
| 2005 | 인제 | 가옥 12호, 인원 40명, 밭 10ha, 마을도로 1.5km 보호 |

따라서, 황폐지 복구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대형화·빈발화됨에 따라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사방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표 4-27〉 사방댐 시설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개소)

| 구 분 | 목 표 | 실 적 | 잔 량 | 연도별 추진계획 | | | |
|----------|--------|-------|--------|----------|------|-----------|-----------|
| | | | | 2012 | 2013 | 2014~2017 | 2018~2025 |
| 일반사방댐 | 16,000 | 5,018 | 10,982 | 800 | 800 | 3,200 | 6,182 |
| 물가두기 사방댐 | 160 | 15 | 145 | 20 | 20 | 85 | |

주: '실적'은 '11년도 계획물량 포함

아울러, 2004~2005년 동안 추진한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산사태위험지를 과학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산사태위험예보 발령 및 사방댐 등 사방사업 시행 예정지 선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상청의

기상예보와 연계시킨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재해예방업무를 한층 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사무관 김명중

▣ 시행계획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의 보전·확보·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1992. 6월 브라질 리오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강화하고 자생식물자원의 보존과 상업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생식물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우리나라도 최근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식물이 곧 자원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청은 21세기 생물자원확보 경쟁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수목원 조성 및 육성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21세기는 생물유전자원의 양적 및 질적인 확보가 국부의 척도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생물 유전자원의 보전·확보·이용 등을 둘러싼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집·보전·이용 및 자원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목원을 적극 진

홍 및 조성·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에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가 확립되는 등 수목원 조성과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보전 및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감소하고 있는 고산식물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경북 봉화군에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을, 2010년에는 보령, 당진, 순천 등에 국립수목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2010년 말 현재 국·공립수목원 36개소, 사립수목원 14개소, 학교수목원 3개소를 비롯하여 총 53개소를 조성·운영 중에 있다.

〈표 4-28〉 수목원 조성·운영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연 도 | 합 계 | 2005까지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계 | 53 | 34 | 2 | 3 | 2 | 7 | 5 |
| 국립수목원 | 2 | 1 | | | | 1 | |
| 공립수목원 | 34 | 19 | 2 | 1 | 2 | 6 | 4 |
| 사립수목원 | 14 | 11 | | 2 | | | 1 |
| 학교수목원 | 3 | 3 | | | | | |

●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사료를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국 국·공립수목원 내에 산림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박물관에는 산림분야 역사서적 및 전통 산림문화 등과 관련된 각종 산림사료에 대한 전시시설과 식물·곤충·수석·화석·석엽 등의 표본을 보존하는 표본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관, 각종 산림 관련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영상자료실, 산림사료의 보전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실은 물론 관람객들을 위한 방문자 안내센터 등이 있다.

1987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산림박물관은 2010년에는 영광산림박물관, 여주산림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2010년 말까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재 국립산림박물관을 비롯하여 춘천, 공주, 순창, 동, 진주, 대구, 청원, 오산, 완도, 아산, 여주 등 총 13개소에 산림박물관을 건립·개관 중에 있다.

〈표 4-29〉 산림박물관건립 현황

(단위 : 개소)

| 연 도 | 합 계 | 2005까지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산림박물관 건립 | 13 | 10 | | 1 | | | 2 |

●● 생태숲 조성

지구온난화, 사막화, 산림파괴 등으로 매년 열대우림 생물의 0.5% 상당이 멸종되고 있으며, 세계자연연구소(WRI)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전체 생물의 약 33%가 멸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종 감소로 자국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유출방지 및 배타적 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자생식물자원 보존은 단순히 소극적인 보호 측면을 벗어나 자생지조사 및 보존·증식·복원 등 보다 능동적인 보전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희귀·특산 식물을 포함한 자생식물 위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경쟁력있는 숲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인위적·자연적 위협으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나아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 복원 기법을 개발하는 등 산림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함평, 김천, 고령, 진주 등 4개 시·군에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 식물을 현지 내 보존·복원하는 특성화된 생태숲을 신규 조성하는 등 2010년 말 현재 한라생태숲 등 총 42개소의 생태숲을 조성·운영 중에 있다.

〈표 4-30〉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단위: 개소)

| 연 도 | 합 계 | 2005까지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생태숲 조성 | 42 | 16 | 5 | 5 | 7 | 5 | 4 |

▣ 향후계획

●● 수목원 조성 및 육성

국내 수목원은 식물종 보유 수량 및 특성화 면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기조성된 수목원을 특성화, 내실화한 보완사업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의 자생식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식물유전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증식·보존·관리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자연체험 및 식물학습과 정서문화함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목원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민 여가·휴양·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녹색시설

조성을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박물관을 국·공립수목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료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자연학습과 산림역사에 관한 볼거리 제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기조성된 산림박물관을 특성화, 내실화할 계획이다.

● 생태숲 조성

생태숲 조성사업은 수목원 조성사업과 같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희귀·특산 및 멸종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전략 수립과 멸종위기 식물을 환경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멸종방지 및 감소속도를 완화하여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에 대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 식물을 현지 내 보존·복원하는 특성화된 생태숲으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마.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임하수

▣ 시행배경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4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강수 총량은 세계평균의 약 1/8수준이며,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산악지형으로 인한 하천 유량 변동이 매우 커 물 관리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강수 총량의 65%가 최상류 수원인 산림지역에 내리지만 산림내 저장량은 14%에 불과하여 홍수, 가뭄,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수자원 저장량 확대를 위한 녹색댐 기능제고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및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에 따라 용수개발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성 및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의 댐 유역과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함양림 조성은 넓은 면적의 모두베기(개벌)를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수하식재, 천연갱신 등으로 복층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 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깊게 들어가는 상수리, 굴참 등 참나무류, 자작나무 등 심근성 수종을 조림하고 초본류, 관목류 등 하층식생의 생육을 촉진함으로써 녹색댐 기능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사업 추진과 5대강 및 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이 양호한 활엽수 중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조림은 ha당 5,000본을 식재하고, 상수리 파종조림은 ha당 5,000상을 파종하는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매년 추진하였다.

녹색댐 기능 제고를 위한 수원함양림의 숲가꾸기 사업은 임지여건에 따라 침엽수 인공림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적기에 실행하여 복층림, 혼효림으로 유도하였고 불량한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과 개량사업을 실행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천연림으로 유도하여 수원함양기능과 산사태 방지 기능을 높였다.

또한, 산림청은 2002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38개 댐유역 산림을 대상으로 간벌 및 천연림보육사업 등을 통해 녹색댐으로 조성하는 「녹색댐 조성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27개댐 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녹색댐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표 4-31〉 녹색댐 조성사업 추진실적




| 구 분 | 시행연도 및 댐 이름 | | | |
|------|---|-----------|-----------|-----------------------|
| 기본설계 | 2003~2008 | 2009 | 2010 | 2011 이후 |
| 숲가꾸기 | 2006~2009 | 2010 | 2011 | 2012 이후 |
| 38개댐 | 26개 | 1개 | (1개) | 11개 |
| | 안동, 임하, 황성, 소양강, 달방, 광동, 부안, 보령댐, 영천, 안계, 사연, 대암, 구천, 선암, 대청, 용담, 밀양, 섬진강, 평림, 연초, 수어댐, 운문, 합천, 주암, 주암조절지, 남강 | 충주댐(강원북부) | 충주댐(강원남부) | 충주댐(충북, 경북), 신규댐(11개)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향후계획

2011년에는 충주댐 충북·경북유역 49천ha의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가 완료된 전국 27개 댐 유역 35천ha의 숲을 가꾸어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유역 가시권 산림의 경관 개선을 위한 덩굴류 제거와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4-9〉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 | | |
|----------|---|------------------------------|
| ① 홍수조절기능 |  | 나지 대비 홍수기에 28.4톤/일·ha 더 머금음 |
| ② 갈수완화기능 |  | 불량림 대비 갈수기에 2.5톤/일·ha 더 흘려보냄 |
| ③ 수질정화기능 |  | 질소 14.3ppm의 물을 1.7ppm으로 정화 |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사무관 김동일

▣ 시행배경

국유림을 대부(貸付)하는 행위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빌려 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국가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행정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국유림의 대부행위와는 구분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대부·사용허가 실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설정 현황은 2010년 말 현재 8,577건, 56,409ha로, 이는 2009년 대비 건수는 15건이 증가되고, 면적은 2,596ha가 감소된 것이다. 전체 건수는 전년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으나 면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국가 직영 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림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 지역 내 입목을 매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데 따른 것이다.

〈표 4-32〉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

(단위 : ha)

| 구분 연도 | 합계 | | 대부 | | 사용허가 | | 분수림(조림대부지 포함) | |
|----------|-------|--------|-------|-------|-------|--------|---------------|--------|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2008 | 8,506 | 61,937 | 3,680 | 7,424 | 4,326 | 23,854 | 500 | 30,819 |
| 2009 | 8,562 | 59,005 | 3,524 | 7,129 | 4,605 | 24,257 | 433 | 27,619 |
| 2010 | 8,577 | 56,409 | 3,469 | 6,989 | 4,761 | 23,794 | 347 | 25,626 |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기존의 대부지 등은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중단, 타 용도 사용 등으로 대부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등을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지를 관리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는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2,717건 중 91.3%에 해당하는 2,481건이 '양호', 105건(3.9%)은 '경고', 131건(4.8%)은

‘불량’ 판정을 한 후 ‘경고’와 ‘불량’ 판정을 받은 대부지 등은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대부지 등은 청문 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11건)한 바 있다.

〈표 4-33〉 국유림 대부지 관리 현황

(단위 : ha)

| 구 분 연 도 | 합 계 | | 양 호 | | 경 고 | | 불 량 | | 비 고 |
|------------|-------|--------|-------|--------|-----|-------|-----|-------|---------|
| | 건 수 | 면 적 | 건 수 | 면 적 | 건 수 | 면 적 | 건 수 | 면 적 | |
| 2008 | 2,280 | 12,213 | 1,958 | 8,201 | 120 | 975 | 202 | 3,307 | 취소 : 10 |
| 2009 | 2,833 | 32,640 | 2,425 | 26,702 | 250 | 4,448 | 158 | 1,490 | 취소 : 5 |
| 2010 | 2,717 | 24,495 | 2,481 | 21,059 | 105 | 684 | 131 | 2,752 | 취소 : 11 |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 향후계획

과도한 산지 전용을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광업·스키장 등의 용도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지 전용을 전제로 한 대부·사용 허가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유림을 자연 친화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용도의 대부·사용 허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2010년 7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유림을 활용한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요존국유림에서 입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약용수종류 또는 가축조 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 산림청 치산복원과 사무관 류정기

▣ 시행배경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1,400km(남한 684km)에 이르는 국토의 등줄기이다. 또한,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대륙의 야생 동·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이자 서식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두대간 지역의 생태계의 건강성, 생물다양성 등 자연 생태적 가치를 제고하여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12월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의 토지 263,427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34〉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 구 분 | 계 | | 핵심구역 | | 완충구역 | |
|-----|---------|-----|---------|----|--------|----|
| | 면적(ha) | % | 면적(ha) | % | 면적(ha) | % |
| | 263,427 | 100 | 169,950 | 65 | 93,477 | 35 |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산림자원, 자연환경, 문화자원의 계획적인 보호·관리·이용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자 2005년도에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요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에 대한 기존자료 분석과 현장분석을 통해 자연생태계 및 인문사회 자원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들 조사자료를 토대로 백두대간 자원실태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국토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백두대간종합정보시스템 수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백두대간보호지역 263천ha로서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 684km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백두대간 자원의 변화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물리적 환경, 동·식물상, 식생 등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 환경,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이다.

〈표 4-35〉 백두대간 보호지역 자원실태조사 현황

| 연 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권역별 | 설악산 권역 (향로봉~양양) | 태백산 권역 (강릉~태백) | 속리산 권역 (봉화~문경) | 덕유산 권역 (보은~무주) | 지리산 권역 (거창~지리산) |
| 조사거리(km) | 100 | 157 | 172 | 154 | 101 |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0년 자원실태조사는 1단계 5년차 조사로서 지리산 권역 101km 구간에 대해 실시하였다. 조사구간은 전라북도 남원시·장수군,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산청·함양군·하동군 등 3개 도 6개 시·군에 걸쳐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하여 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차에 걸쳐 인문·사회, 역사 문화자원, 산림자원, 자연환경, 정책제언 등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남한지역 정맥 자원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백두대간 중심의 보전·관리정책을 확대하여 백두대간의 핵심 생태축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과 생태적·지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남한 지역 정맥의 실태조사는 정맥의 보전·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가지 친 큰 산줄기로서 백두대간과의 연계 생태축이고 백두대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녹색 휴양공간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맥에 대한 명확한 실체나 가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산림훼손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국토의 주요 생태축으로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남한지역 정맥 6개에 대해 5년간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각 정맥에 대한 생태적 가치 분석과 생태적, 인문적, 휴양적 가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정맥 보전의 기본방향 및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남한지역 전체 정맥에 대한 통합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료의 분석과 식생, 동·식물상, 훼손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우선 타 지역보다 산림훼손지역이 적은 호남은 국토의 중요생태 축이자 지역적으로 전라남북도를 대표하는 중요한 산줄기와 물줄기를 차지하는 중요 요충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자원실태조사 분석과 공간적 범위의 규명을 통해 이용과 보전을 위한 현명한 관리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라북도 장수 영취산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망덕산 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서 2개 시·도, 17개 시·군·구에 걸친 525km 구간에서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금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36〉 남한지역 6대 정맥 자원실태조사 현황

| 연 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권 역 별 | 낙동정맥 매봉산(태백)~ 봉화산(부산) | 호남정맥 영취봉(장수)~ 장계산(광양) | 호서정맥 속리산(보은)~ 중대산(서천) | 낙남정맥 옥산(하동)~ 봉화산(김해) | 한남·금강정맥 ·칠장산(안성)~문수산(김포) ·조약봉(진안)~장계산(군산) |
| 조사거리(km) | 367 | 525 | 379 | 193 | 311 |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추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와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생태교육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인문지리·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시설로 구성되며, 국민 홍보·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6개 도 중 보호지역 전체가 국립공원지역인 전남을 제외한 5개 도에 각 1개소씩 백두대간 보호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모두 5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을 시작하여 충청북도 괴산군에 2009년 10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개관하였고, 2009년은 경상북도 상주시의 폐교부지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 2011년 초에 개관하였으며 2011년에는 강원도 양양, 전라북도 남원에 기본설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경상남도에 조성·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복구사업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07년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이미 훼손되어 경작하고 있는 고랭지밭에 대한 장기적인 생태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풍력발전기 추가 설치에 따른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의 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부분 백두대간 마루금지역에 위치한 고랭지 밭은 자연경관 훼손과 유기질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및 농약 살포로 백두대간 지역의 토양과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시 토사 유실 및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고랭지밭의 생태적 관리방안’으로 백두대간 경작지 중 매도희망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의 사유토지 등을 매수하여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설치 관리방안은 신규 훼손이 수반되는 곳은 개발행위 사전 협의시 관련부처와 협

의하여 설치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신청시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개발 행위 사전협의 세부기준에 따라 엄격한 사전검토 및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이 아닌 해안지역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백두대간지역은 자연생태계의 핵심축과 산림자원의 보고로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단절되고 훼손된 백두대간을 일시에 복원·복구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복원공사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 훼손지의 유형을 지형, 식생, 인공구조물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복원모델 개발이 완료되었다. 복원모델 주요내용은 훼손지 복원방향 수립, 생태적 특성평가, 복원모델 개발 방안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이다. 복원사업은 2006년도 3ha, 2007년도 3ha, 2008년도 10ha, 2009년도 5ha, 2010년도 22ha 등 총 43ha를 복원·복구사업을 추진하였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 추진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2005년 지정 당시 지역 특성과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내 사유지는 2010년 말 현재 32,176ha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와 개발목적이 완료된 사유지, 보호지역과 연결된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보호지역 안의 사유토지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너무 높고, 현지토지소유자의 매도불응과 토지소유자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인 경우가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격차가 크지 않은 토지나 현지인 소유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7〉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현황

(단위 : ha, 백만원)

| 연 도 | 계 | | | 보호지역 내 | | | 보호지역 밖 | | |
|------|-------|--------|--------|--------|-------|--------|--------|-------|--------|
| | 필 지 | 면 적 | 금 액 | 필 지 | 면 적 | 금 액 | 필 지 | 면 적 | 금 액 |
| 계 | 1,857 | 11,348 | 76,399 | 267 | 2,362 | 12,014 | 1,590 | 8,986 | 64,385 |
| 2005 | 248 | 2,393 | 10,660 | 55 | 364 | 1,350 | 193 | 2,029 | 9,310 |
| 2006 | 468 | 3,397 | 14,189 | 108 | 566 | 2,459 | 360 | 2,831 | 11,730 |
| 2007 | 276 | 1,292 | 7,742 | 31 | 164 | 1,439 | 245 | 1,128 | 6,303 |
| 2008 | 157 | 1,296 | 6,862 | 20 | 106 | 666 | 137 | 1,190 | 6,196 |
| 2009 | 190 | 1,316 | 9,521 | 18 | 467 | 2,420 | 172 | 849 | 7,101 |
| 2010 | 518 | 1,654 | 27,425 | 35 | 695 | 3,680 | 483 | 959 | 23,745 |

주 : 보호지역 밖은 보호지역 연결지+보호지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 매수실적임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사유토지의 적극적인 매수를 위해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2008.9.19)하였다. 또한, 토지위의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9.3.5)하여 보호지역 내 사유토지 매수실적이 2008년도 보다 440%가 증가하였으나 보호지역 밖은 2008년도 보다 29%가 감소하였다.

매수한 사유토지 중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은 폐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주변 생태계를 고려한 생태복원사업을 2009년도에 8개소 5.3ha을 실행함으로써 백두대간 생태계의 조기회복과 생물종다양성의 유지·증진을 도모하였다.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

백두대간의 지역 주민은 백두대간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백두대간 보호의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 정책추진에 백두대간 주민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주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백두대간의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백두대간 주민을 백두대간을 지키고 백두대간과 함께 살아가는 백두대간 보호의 주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백두대간 주민이 백두대간의 보호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의 농림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해 온 결과 주민의 임산물 생산 기반이 조성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 실시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주민 만족도가 82.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주민의 대부분이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55,98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필수적인 저온저장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4-38〉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유형 \ 연 도 | 합 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합 계 | 47,601 | 7,200 | 11,473 | 10,697 | 9,600 | 8,631 | 8,620 |
| 저온저장고 | 13,317 | 1,530 | 2,654 | 2,821 | 3,359 | 2,953 | 2,200 |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11,153 | 3,430 | 3,220 | 2,123 | 844 | 1,536 | 969 |
| 생산기반 조성(가공) | 6,832 | 1,110 | 2,097 | 1,797 | 1,105 | 723 | 1,751 |
| 산채재배시설 | 7,036 | 718 | 1,535 | 1,194 | 2,482 | 1,107 | 969 |
| 농림소득장비(관수) | 2,356 | - | 437 | 123 | 524 | 1,272 | 99 |
| 표고재배시설 | 3,307 | 412 | 959 | 1,205 | 403 | 328 | 240 |
| 임산물직판장·집하장 | 3,600 | - | 571 | 1,434 | 883 | 712 | 2,393 |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또한, 2007년부터 백두대간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육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 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감소분은 입목 벌채 예상수익금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약 3 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해 6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벌채를 유보 한 소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표 4-39〉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총 계 \ 연 도 | 2007 | 2008 | 2009 | 2010 |
|-----------|------|------|------|------|
| 228 | 53 | 63 | 49 | 63 |

자료 : 산림 산보호국

▣ 향후계획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는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야와 대상 지역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산림자원의 변화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조사된 자료의 DB화를 통한 백두대간 보호·관리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과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은 자원실태조사 1단계 5년차 조사로서 지리산 권역 101km 구간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 등 3개 도, 6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백 두대간 보호지역 35,285ha(핵심구역 23,912, 완충구역 11,373)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제1단계 조사가 완료한 인문·사회, 역사문화자원, 산림자원, 자연환경, 정책제언 등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제2단계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남한지역 정맥조사는 백두대간 상 남한지역 정맥들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원 실태, 생태적 가치 및 훼손실태 등에 대한 조사로서 남한지역 8개 정맥에 대해 5년간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각 정맥에 대한 생태적 가치 분석과 인문적, 휴양적 가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정맥 보전의 기본방향 및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남한지역 전체 정맥에 대한 통합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료의 분석과 식생, 동·식물상, 훼손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호남정맥(금남호남정맥 포함) 525km에 이어 2011년 호서정맥(379km), 2012년 낙남정맥(193km), 2013년 한남·금강정맥(311km)에 대한 자원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지역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의 홍보 및 체험을 통한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청소년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6개 도 중 보호지역 전체가 국립공원지역인 전남을 제외한 5개 도에 각 1개소씩 백두대간보호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모두 5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 백두대간내 훼손지 조사결과 식생훼손만 이루어진 곳이 전체 훼손지 173개소 중 129개소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형훼손이 이루어진 곳은 26개소로 15.0%, 인공구조물에 의한 훼손이 발생한 곳은 18개소로 10%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중 백두대간 생태계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폐군사시설, 폐광산, 고령지 경작지 등에 대하여 주변식생 및 경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복원·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을 연결하여 한반도의 남북을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복원,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복하여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재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 생태계의 고유기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당시 지역특성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와 개발목적이 완료된 사유지, 보호지역과

연접된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5년까지 보호지역 내와 보호지역 연접지 등의 사유지 60,000ha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백두대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나 사유림 매수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어 이들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며,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사유림)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으로 산림소유자의 불만해소와 백두대간의 생태적·자연경관 등의 보호로 자연환경·경관의 자원화 도모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격차해소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진재식

▣ 시행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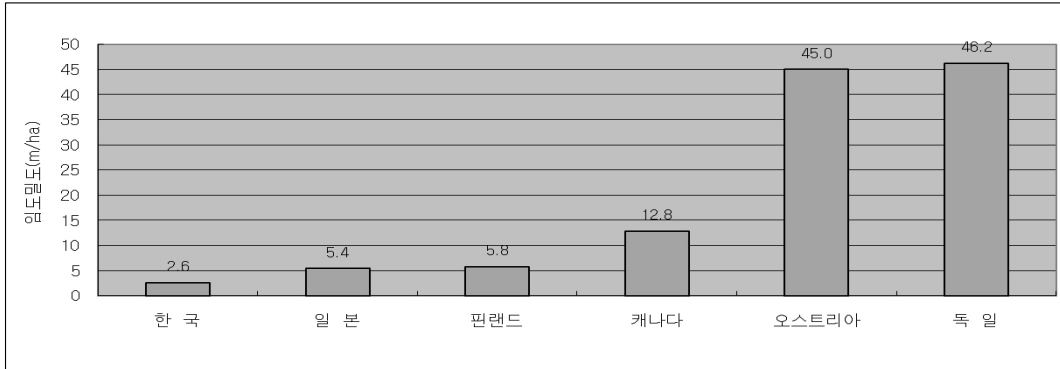
임도는 임산물 운반·조립·숲가꾸기·임목생산 등 산림경영·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임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산책·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 등 국민보건휴양과 산악 스포츠를 위한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내 임목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효

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0년 말 현재 총 시설임도의 거리는 16,573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임도밀도는 2.60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서 임도시설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4-40〉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산림사업 물량의 확대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등 목재생산량 증가로 임도 시설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8.5m/ha 달성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시설물량의 확대와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41〉 임도시설 기본계획

| 구분 | 연도 | | | | | 누계 |
|----------|--------|--------|-----------|-----------|--------|--------|
| | 2010까지 | 2011계획 | 2012~2015 | 2016~2020 | | |
| 사업량 (km) | 계 | 16,572 | 684 | 5,095 | 9,190 | 31,541 |
| | 국유임도 | 4,842 | 328 | 1,150 | 2,130 | 8,450 |
| | 민유임도 | 11,730 | 356 | 3,945 | 7,060 | 23,091 |
| 사업비 (억원) | 계 | 10,608 | 1,057 | 7,615 | 13,934 | 33,214 |
| | 국유임도 | 2,444 | 342 | 1,664 | 3,082 | 7,532 |
| | 민유임도 | 8,164 | 715 | 5,951 | 10,852 | 26,132 |
| ha당밀도(m) | | 2.60 | 2.70 | 3.50 | 5.00 |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향후계획

임도망 구축은 제3차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따른 간선임도와 목재생산 등 산림사업 실행을 위

해 필요한 작업임도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기존에 시설된 임도 중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으로 이용이 불편한 노선은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자연적인 임도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풍수해에 의한 임도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를 이용한 휴양·여가·레포츠 등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도를 시설·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임도설치 계획은 <표 4-2>과 같다.

<표 4-2> 2011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 구 분 | 계 획 | 사 업 비 | | | | 비 고 |
|----------|-----|---------|---------|--------|--------|-------------------------|
| | | 계 | 국 고 | 지방비 | 자부담 | |
| 계 | 684 | 144,446 | 114,112 | 20,223 | 10,111 | |
| 국 유 임 도 | 328 | 43,332 | 43,332 | - | - | 간선임도 50km 작업임도 278km |
| 민유임도(보조) | 356 | 101,114 | 70,780 | 20,223 | 10,111 | 간선임도 350km 작업임도 6km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간선임도는 지형과 당해 산림의 기능 및 장기적 시업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산림 경영상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유림간 및 지자체 간의 연계성 등 지역개발 효과가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따라 임도망을 구축하고, 작업임도는 일정한 유역을 경계로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에 최소 규격의 임도를 개설하여 저비용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도모하여 산림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공조림지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에 낮은 단비(73백만원/km)로 설치한 임도의 경우 일부는 재해발생위험과 경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같은 기존 임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구조개량을 하여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로 만드는 등 유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표 4-43>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km)

| 구 분 | 임도시설 현황 | 총대상 물량 | 구조개량사업 실적 | | | | | 계 획 | |
|------|------------|-----------|-----------|--------|------|------|------|------|-------|
| | | | 소 계 | 2007까지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계 | 16,573 | 11,855 | 9,592 | 7,979 | 583 | 490 | 540 | 403 | 1,860 |
| 국유임도 | 4,843 | 2,758 | 1,889 | 1,565 | 102 | 90 | 132 | 100 | 769 |
| 민유임도 | 11,730 | 9,097 | 7,703 | 6,414 | 481 | 400 | 408 | 303 | 1,091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나. 임업 기계화 촉진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조용철

▣ 시행배경

산업화로 인한 농산촌 인력난 해소와 임업생산성 향상, 벌채작업 시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수적이지만 임업기계가 고가이고 험준한 지형조건, 영세한 경영규모, 낮은 임도밀도, 전문 기계 운전원의 부족, 기계화 사업의 경험부족 및 기술 수준의 낙후 등으로 임업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능력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점차 늘어나는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기계화는 중요한 산림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임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 증대에 대비하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8개 시·군)을 통한 기계화 영림단 양성 및 기계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등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를 조작하는 기계수(Operator)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와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 말 현재 임업기계 보유대수는 총 26,689대로서 지방산림청이 3,965대(15%), 지방자치단체가 14,263대(53%), 산림조합이 8,461대(32%)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업기계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계화 산물수집의 사유림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도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트랙터집재기 등 산물수집 기계장비의 세트화 보급 및 기계화 영림단을 1개단씩 양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계화 산물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하여

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협업체 등 산림경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4-44〉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

(단위: 대)

| 장비 구분 | 계 | 지방청 | 시·도 | 산림조합 |
|-------|--------|-------|--------|-------|
| 계 | 26,689 | 3,965 | 14,263 | 8,461 |
| 임 도 | 459 | 96 | 97 | 266 |
| 임목생산 | 9,544 | 1,592 | 5,091 | 2,861 |
| 조림·육림 | 5,702 | 829 | 2,913 | 1,960 |
| 목재가공 | 840 | 105 | 501 | 234 |
| 산림보호 | 7,357 | 823 | 4,437 | 2,097 |
| 양 묘 | 923 | 174 | 482 | 267 |
| 행 정 | 1,864 | 346 | 742 | 776 |

자료: 산림청 산림자원국

〈표 4-45〉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 설치연도 | 기관명 | 소재지 | 보유장비 |
|------|----------|----------------|----------------|
| 계 | 9개소 | | 216대 |
| 소계 | 7개소 | | 188대 |
| 2001 | 임업기능인훈련원 |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 타워야더외 8종 13대 |
| 2002 | 임업기술훈련원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 타워야더외 7종 11대 |
| 2003 | 임업기계훈련원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 타워야더외 9종 11대 |
| 2003 | 순천시 산림조합 | 전남 순천시 연향동 | 타워야더외 8종 32대 |
| 2004 | 평창군 산림조합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 HAM200외 6종 18대 |
| 2005 | 청주청원산림조합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북부집재기의 7종 29대 |
| 2006 | 산청군 산림조합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 타워야더외 11종 74대 |
| 소계 | 2개소 | | 28대 |
| 2009 | 남부지방산림청 | | 타워야더외 8종 20대 |
| 2010 | 북부지방산림청 | | 타워야더외 7종 8대 |

자료: 산림청 산림자원국

〈표 4-46〉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 센터별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
| | 가동률 | 수수료 | 가동률 | 수수료 | 가동률 | 수수료 | 가동률 | 수수료 | 가동률 | 수수료 |
| 합 계 | 16.3 | 381 | 24.6 | 538 | 42.1 | 526 | 45.2 | 748 | 48.3 | 637 |
| 기능인 | 23.7 | 91 | 20.2 | 55 | 44.3 | 92 | 30.6 | 154 | 42.4 | 116 |
| 기술 | 23.9 | 62 | 25.3 | 91 | 30.7 | 52 | 43.9 | 86 | 45.5 | 54 |
| 기계 | 20.3 | 124 | 57.7 | 161 | 65.4 | 91 | 75.9 | 122 | 65.7 | 113 |
| 순천 | 17.8 | 55 | 21.7 | 87 | 44.1 | 59 | 62.9 | 150 | 60.3 | 119 |
| 평창 | 3.8 | 14 | 13.3 | 17 | 19.9 | 53 | 50.9 | 96 | 39.4 | 66 |
| 청주청원 | 11.2 | 35 | 16.6 | 55 | 40.0 | 89 | 18.6 | 51 | 30.8 | 84 |
| 산청 | - | - | 27.5 | 72 | 53.4 | 90 | 55.3 | 89 | 45.2 | 85 |

자료: 산림청 산림자원국

그동안의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2008년에 비하여 가동률이 향상되고 있으나, 기계훈련원과 순천, 평창, 산청산림조합은 가동률이 감소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업기계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 운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007.10월부터 임업기계 대여수수료를 평균 18% 인하하여 산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굴삭기(0.3m³)는 2006년보다 20%(210→168천원)를 인하하였고, 트랙터집재기(85HP)는 24%(224→170천원)를 인하하였다. 또한, 산주가 임업기계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지, 임업신문 등의 전문지 및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임업기자재 구입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종을 2001년도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임업용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기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표 4-47〉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①임업용 동력천공기, ②임업용 약제주입기, ③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포함한다), ④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⑤임업용원치, ⑥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⑦트랙터부착형 집재기, ⑧굴삭기부착형 집재기, ⑨타워야더, ⑩포워더, ⑪목재파쇄기, ⑫톱밥제조기, ⑬동력임내차, ⑭밤수집기, ⑮자동지타기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또한, 2003년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업용기계장비 10종에 대한 면세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면세 석유류 공급량을 전년 공급량 대비 7% 이상 확대 공급(3,762kl)하였다.

〈표 4-48〉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단위 : kl)

| 구 분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계 | 2,823 | 2,790 | 2,812 | 2,524 | 3,522 | 3,762 |
| 휘발유 | 2,515 | 2,477 | 2,532 | 2,264 | 3,240 | 3,271 |
| 경유 | 308 | 313 | 280 | 260 | 282 | 491 |
| 윤활유 | - | - | - | - | - | -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향후계획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기능인영림단 교육훈련과정에 기계장비 교육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 양산, 진안 등 3개 훈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립 경영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소별로 기계화영림단을 육성하여 산림사업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43단 536명의 기계화영림단을 구성하여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산림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계·장비를 조작할 기계수(Operator)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임업기계화를 앞당기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노동부담과 생산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임업기계화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또한 노동의 안전성, 효율성, 수급성을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계화 산물수집의 도입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임업기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기능인영림단에서는 기계가 없으면 임목생산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장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계장비 업체에서도 각종 기계장비 개발·보급에 나서고 있어 임업기계화의 발전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숲을 잘 가꾸고 자연친화적인 임목생산을 위해서 임업기계화의 가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자 한다.

〈표 4-49〉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개발 현황

(단위: 종)

| 구분 | 기종수 | 기 계 장 비 명 |
|---------------|-----|---|
| 계 | 35 | |
| 산림과학원 | 19 | 2드럼원치, 자동수간주사기, 밤수집기, 동력식 가지치기톱, 원목자동천공기, 표고재배기, 다목적 집재차, 소형원치, 농용운반차 탑재용 원치, 미니포워더, 원목조재기, 제초장비, 시비장치, 방제장치, 궤도식 소형임내차, 호두과피탈피기, 수실류채취기, 휴대형식형기, 진동식 호두수확기 |
| 민 간 | 7 | 톱밥제조기, 목재파쇄기, 원목집게, 썰매형원치, 산불진화차, 농림방제차, 2드럼케이블원치 |
| 공 무 원 | 5 | 굴삭기소형원치, 세레스원치, 버켓교체형 굴삭기원치, 복부집재기, 춘천집재기, |
| 임업기계 훈 련 원 | 1 | HAM200 |
| 산·학·연 | 3 | 밤박피기, 타워·원목 집재기, 타워야더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조용철

▣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약 53%가 II~III 영급에 속해 있다. 또한, I 영급까지 포함하면 약 59% 정도가 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면적에 대해 숲가꾸기 작업을 해 주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숲가꾸기 사업량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산림사업은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업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임업기능인 양성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영림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영림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기능인력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2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911개단 8,226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39단 1,686명, 산림조합 396단 4,284명, 산림사업법인 376단 2,256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4-50〉 임업기능인 영림단 조직 현황

| 구 분 | 연 도 | 2008 | | 2009 | | 2010 | |
|------------|-----|------|-------|------|-------|------|-------|
| | | 단 수 | 인원(명) | 단 수 | 인원(명) | 단 수 | 인원(명) |
| 계 | | 800 | 7,595 | 837 | 7,941 | 911 | 8,226 |
| 국유림 영림단 | | 142 | 1,681 | 143 | 1,854 | 139 | 1,686 |
| 산림조합 영림단 | | 393 | 4,324 | 392 | 4,275 | 396 | 4,284 |
|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 | 265 | 1,590 | 302 | 1,812 | 376 | 2,256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임업노동력 확보 및 후생복지

임업노동력은 주로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 영림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개단 240명의 영림단이 신규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신설 영림단에 대하여는 직업인으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을 통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기계톱 등 산림사업 장비 1,730점(170백만원)을 신규 영림단에게 지원하였다.

신규로 양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는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중심 및 현장위주의 체험식 적응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업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업기능인 기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2001년부터 매년 개최·임업기능인 축제의 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산림작업 기술능력 향상은 물론 전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능인영림단에게 충분한 작업물량을 확보하고 시기별로 적정 배분토록 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임업기능인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기능인교육에 참여하는 영림단원 1,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육훈련 보조비를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 향후계획

산림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도시화율이 2020년에는 9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산촌 인력 감소가 심화될 전망으로, 전문노동인력의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산림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의 확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며,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험식 교육 훈련, 기술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라.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철중

▣ 시행배경

임업의 장기성(40~60년)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산림에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산림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임산물 총생산액 4조 8,314억원 중 단기임산물 생산액이 2조 6,576억원으로서 임산물 총 생산액의 55%에 달하는 등 단기소득원개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표 4-51〉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 연 도 | (단위 : 억원) | | | | | | | | |
|-----------|-----------|--------|--------|--------|--------|--------|--------|--------|--------|
| | 1999 | 2001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단기임산물 생산액 | 10,471 | 15,467 | 17,081 | 18,328 | 19,267 | 19,849 | 20,090 | 21,464 | 26,576 |

▣ 시행내용 및 성과

●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및 고소득 품목인 밤,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한·미 FTA 및 중국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실류의 경쟁력 강화 및 수실류의 재배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실류 작업로 지원, 노령목 갱신, 밤나무대체작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한 시장개방을 대비한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밤나무 토양개량, 조정수·분재토양개량, 산양삼이력제지원, 친환경 밤생산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또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밤, 표고, 산채류 등 60개의 지역특화품목 단지를 주생산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생산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규모

화 유도 및 저장·가공·유통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 시설하여 주생산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4-52〉 산물 품목별 주생산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밤 | 대추 | 호도 | 잣 | 표고 | 송이 | 머루 | 산채 | 장뇌 | 수액 |
|------|----|---|----|----|---|----|----|----|----|----|----|
| 주생산지 | 60 | 7 | 4 | 1 | 1 | 22 | 10 | 3 | 10 | 1 | 1 |

한편,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지 326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4-53〉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 | 2007까지 | | 2008 | | 2009 | | 2010 | |
|--------|-----|--------|--------|--------|------|-------|------|-----|------|-----|
| | 개 소 | 금 액 | 개 소 | 금 액 | 개 소 | 금 액 | 개 소 | 금 액 | 개 소 | 금 액 |
| 산림복합경영 | 326 | 15,353 | 218 | 12,026 | 30 | 1,635 | 40 | 872 | 38 | 820 |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호도, 산채류, 송이 등의 주산지를 집단화·규모화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10개 단지에 대하여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산약초 등 10개 단지에 대하여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소득 전략품목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가공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최근 청정임산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 및 산약초·약용수종,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액 등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재·야생화·자생란 등 우리 자생식물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식물자원 수요·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박람회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임산물 품질관리 강화대책 추진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하여 임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및 임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도록 임산물표준재배 지침서를 발간(2010, 34품목)하였으며, 2014년까지 꽃송이버섯, 산마늘, 목이버섯 등 61 품목에 대해 임산물표준재배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뇌 등 다양하게 불리는 명칭을 '산양삼'으로 일원화하고 청정 산양삼의 생산·유통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청정 먹거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신뢰확보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0.2.4)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밤, 표고, 산채류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임가를 중심으로 친환경생산 이력제 도입, 친환경토양개량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 임산물의 지역특산물 유도를 위한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를 추진하여, 양양송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2개 품목이 등록되었다. 또한, 임산물 명품화를 위해 2010년 8품목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향후계획

단기임산물 소득원화 정책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임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임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며, 앞으로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생산·유통 시설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 국산재 이용 촉진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최태환·김태호

▣ 시행배경

그동안 지속적인 국산재를 공급 확대 노력으로 국내 목재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0년 목재 자

급률은 13.5%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국내 목재 소요량의 90% 정도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재는 원목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원유 및 운임비 상승, 자국 원자재 보호 등으로 수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원목보다 목재 제품의 형태로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별기령에 도달한 주벌 임지의 부족, 대부분의 벌채가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시기적 집중화 문제, 목재 신수요 증대(목재펠릿, 에너지용 등)로 목재 산업체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목재는 대부분 간벌 소경재로서 섬유관, 펄프·칩 등 산업용재, 표고자목, 톱밥 등 농·임업용 자재, 루바·몰당재 등 건축 내장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생산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수입산 목재에 비하여 떨어짐에 따라, 국산 목재 고부가 가치화 및 임도 시설 확충, 임업기계화 등 산림 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산 목재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비하고 웰빙, 국민건강 증진, 임분 구조 개선과 목재산업 육성, 목재문화 확산, 다변화하는 용도별 목재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 말 현재 수입 목재를 포함한 총목재 수급량은 27,612천 m^3 으로서, 이 중 국내재는 2009년 대비 17.0% 증가한 3,715천 m^3 를 공급하여 국산재 자급률은 13.5%로 전년보다 1.6% 증가하였다. 특히 당초 산업용재 공급 목표량의 109%인 3,928천 m^3 를 공급하여 국내 산업용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4-54〉 2010년 목재 수급 실적

(단위: 천 m^3)

| 수요 | 공급 | | | 국내재 (원목) | 수입재 | | | 자급율(%) | |
|-------|--------|-------|--------|-------------|--------|-------|--------|--------|-------|
| | 합계 | 원목 | 제품 | | 소계 | 원목 | 제품 | 원목 | 총목재 |
| 계 | 27,612 | 7,942 | 19,670 | 3,715 | 23,897 | 4,227 | 19,670 | 46.8 | 13.5 |
| 제재용 | 5,426 | 4,217 | 1,209 | 429 | 4,997 | 3,788 | 1,209 | 10.2 | 7.9 |
| 합·단판용 | 2,953 | 393 | 2,560 | - | 2,953 | 393 | 2,560 | 0.0 | 0.0 |
| 펄프·칩용 | 12,466 | 892 | 11,574 | 892 | 11,574 | - | 11,574 | 100.0 | 7.2 |
| 보드용 | 3,310 | 1,657 | 1,653 | 1,611 | 1,699 | 46 | 1,653 | 97.2 | 48.7 |
| 갱목용 | 29 | 29 | - | 29 | - | - | - | 100.0 | 100.0 |
| 기타 | 3,428 | 754 | 2,674 | 754 | 2,674 | - | 2,674 | 100.0 | 22.0 |

자료: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0년도 목재수급실적

또한, 국산재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목재유통·저장센터 4개소(중앙회 2, 국유림 2) 및 목재집하장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동해에 설치된 목재유통센터는 각각 낙엽송과 소나무를 주원료로 원주재, 내장재, 판재 및 각재 등 건축 자재를 생산하여 직거래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목조주택, 건조·방부목 등 목제품 개발·보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목재틀 옹벽, 목재 가드레일, 데크로드 등 친환경 국산재를 활용한 토목사업과 한옥 시범사업(3개소)으로 9억원을 들여 지방청 국유림에 설치하였고,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가공시설 보안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였다, 목가공시설 지원에 4억원, 보드류시설 현대화 지원 40억원, 유통센터 원료 구입 30억원,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으로 5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에서 국산 목재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재체험 프로그램(목재체험교실 11개, Wood ‘樂’ Festival 1회, 지도자 양성 과정 1개) 등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목재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목재문화 체험장을 5개소 신규 조성하였다.

▣ 향후계획

앞으로 국산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산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 목재 산업과 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2011년은 2010년보다 국산목재 공급량을 113% 늘여 420만^m 공급하여 자급률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산업용재 적기 공급을 위해 용도별 목재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낙엽송 및 리기다소나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예산으로 9억원을 확보하여 국산재이용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에 이어 국산 원자재 및 원료 구입을 위해 80억원, 목재이용·가공 시설 현대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열풍기, 펠릿 포장기 등 장비 구입비 4억원 등 전체 84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지속적인 목재 공급이 가능토록 벌채 규정을 정비하여 친환경 벌채 제도를 마련하여 국내 목재 생산이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최태환·김태호

▣ 시행 배경

지속적인 국산목재 공급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임목 벌채 감소, 자국 원재료 보호 등으로 인한 수입 여건이 악화되어 원목 및 제재 부산물이 감소하였다. 임목 부산물, 사업장 또는 건설 폐목재는 파티클 보드의 원료, 열병합발전소 등의 목질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며 양질의 폐목재는 톱밥으로 가공하여 목재 펠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로 활용하여 목질 자원의 순환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폐목재 감소와 수입 목재 감소 등에 따른 제재 부산물 감소로 인한 보드업계와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간의 원자재 경합으로 산업용 원료의 부족난이 심각하여 목재 재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섬유관, 파티클 보드 원료인 폐목재 구입을 위한 정책 자금을 40억원,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 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자금을 40억원 규모로 지원하여 목재의 재활용 촉진을 추진하였다. 목재 이용 연장을 위한 보존처리 목재 품질 인증 및 친환경 보존처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목재 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였다.

▣ 향후계획

2011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을 위한 정책 자금으로 40억원, 임목·목재 부산물 및 폐목재를 이용하는 보드류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지내에 버려지는 임목 부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임목 부산물 자원화 사업을 임업 기계를 통해 수집하여 공정 및 경제성 분

석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의 원리로 방치해 둔 임목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목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석 연료 대체를 통한 녹색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인해 저급재의 원료 경합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별채지에 버려지던 임목 부산물(가지, 후동목, 지엽)등도 자원화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법규 정비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림휴양문화과 서기관 염종호

▣ 시행배경

국토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지역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생산기반의 미비, 생활환경의 열악, 인구의 과소화 등 도시 및 농촌에 비해 낙후지역으로 전락됨에 따라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농산어촌현대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산촌생태마을 조성(구 산촌종합개발사업)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3개 산촌마을에 사전설계비를 지원하였다. 지암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1996년 3개 마을, 1997년 5개 마을이 설계되어 1997년까지 도별 1개 마을씩(전남 2개소) 9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까지 총 2,943억원을 투자(지방비, 용자포함)하여 204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산촌소득수준 향상, 인구감소의 둔화,

생활의 편리 등 직·간접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촌생태마을에 각종 운영·관리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2008년도에 60명, 2009년도 80명, 2010년도에 116명을 각 마을에 배치·지원하고 있다.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2010년부터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예산편성권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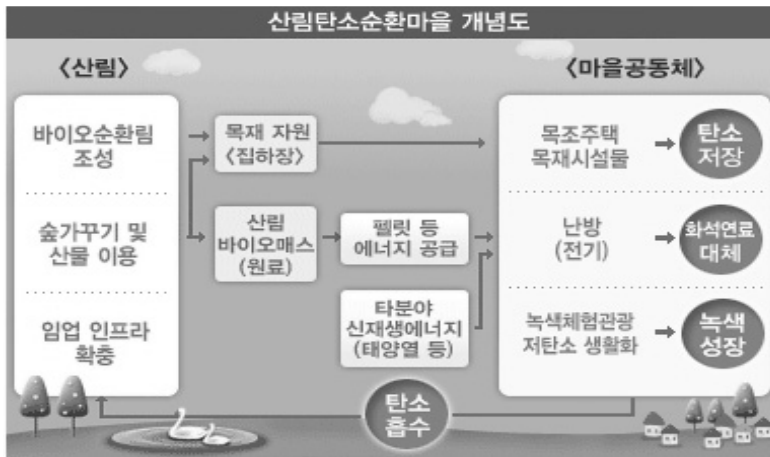
〈표 4-55〉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계 | 2001까지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사전설계 | 295 | 93 | 15 | 10 | 20 | 15 | 18 | 33 | 36 | 30 | 25 |
| 마을조성 | 240 | 47 | 12 | 34 | 15 | 10 | 20 | 15 | 18 | 33 | 36 |
| 투자비 | 339,562 | 85,059 | 24,327 | 26,852 | 16,225 | 20,364 | 25,683 | 29,391 | 31,392 | 35,059 | 45,210 |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그림 4-10〉 산림탄소순환마을 개념도



▣ 향후계획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컨설팅, 마을리더 및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산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와 목재이용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시범조성 중인 산림탄소순환마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사무관 송준호

▣ 시행배경

산업화·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등으로 급증하는 야외휴양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산림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을, 도심에서 가깝고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자연휴양림은 2010년에 12개소(공유)를 신규로 개장, 전국적으로 총 145개소를 운영하여 이용자 수가 94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에는 4개소(공유 3, 사유 1)를 추가로 조성하여 개장할 예정이다.

〈표 4-56〉 2010년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지 정 현 황 | | 조 성 현 황 | |
|----------|---------|---------|---------|---------|
| | 개소 수 | 면적(ha) | 개소 수 | 면적(ha) |
| 계 | 248 | 213,434 | 145 | 128,907 |
| 국유 자연휴양림 | 85 | 209,653 | 39 | 107,221 |
| 공유 자연휴양림 | 110 | 22,209 | 89 | 20,098 |
| 사유 자연휴양림 | 63 | 7,322 | 17 | 1,588 |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표 4-57〉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 연 도 | 계 | 2004까지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계 | 81,823 | 44,029 | 5,775 | 6,264 | 7,627 | 8,691 | 9,437 |
| 국유 자연휴양림 | 22,004 | 9,764 | 1,814 | 2,048 | 2,361 | 2,759 | 3,258 |
| 공유 자연휴양림 | 52,086 | 29,751 | 3,321 | 3,718 | 4,749 | 5,191 | 5,356 |
| 개인 자연휴양림 | 7,733 | 4,514 | 640 | 498 | 517 | 741 | 823 |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욕장은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 안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탐방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과 체력단련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0년에 8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154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1년에도 9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2010년 말까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과 2011년도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4-58〉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2010년까지 조성실적 | 2011년 조성계획 |
|---------|-----|--------------|------------|
| 계 | 430 | 299 | 13 |
| 자연휴양림 | 180 | 145 | 4 |
| 산 림 욕 장 | 250 | 154 | 9 |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또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친환경적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기본계획은 중앙단위 10년 계획으로서 외부 전문가에 의해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조사, 휴양패턴 및 수요예측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수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은 첫째, 산림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확립, 둘째, 자연휴양림 운영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농·산촌 등과 연계 강화, 셋째, 다양한 투자주체를 통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넷째, 공·사유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활성화 도모, 다섯째,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품격 있는 맞춤형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ISO 9001/14001 시행 등 자연휴양림 운영절차를 표준화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 충족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림휴양포털시스템 '숲에On'과 자연휴양림 예약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휴양정보, 마일지리, 웹회원 마이페이지 구현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모두가 보다 질 높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 향후계획

앞으로는 산림청에서는 증가하는 국민의 산림휴양수요에 맞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자연휴양림내 경관상으로 표현되는 Hardwer와 숲체험 등 운영프로그램 등 Softwere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통하여 산림휴양정책이 산림청의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으로서 국민의 포지셔닝을 제고시키고, 한국형 산림휴양시설의 모델을 구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사무관 권태원

▣ 시행배경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및 여가문화의 발달에 따른 산림에 대한 교육 및 문화적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격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단체별로 유지하고 있는 산림관련 문화 행사는 국민이 보다 쉽게 산림 교육·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과거에 운영하였던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은 획일적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면, 현재는 가족, 학생, 소외계층, 장애인 등으로 그 이용 대상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는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산악스키·오리엔티어링 등의 산악 레포츠 대회,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녹색교실 및 산림학교 운영, 숲속음악회, 숲과 문학의 만남 행사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림문화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산의 날’ 행사는 제9회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와의 연대 강화는 물론 산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 밖에도

국민이 직접 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산림박람회, 숲 올림피아드, 우드락 페스티벌, 단풍 문화축제 등을 통해 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는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후원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 포털시스템(www.foreston.go.kr)을 산림청의 대표브랜드로 선정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산림문화휴양 포털시스템 '숲에On'은 국민들이 산림휴양 정보와 백두대간·100대명산 등의 산악정보, 산촌생태마을 및 수목장림, 유·무형 산림문화자산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즐기는 숲해설서비스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숲에On」, 외국인을 위한 숲에On 영문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보 그리고 각 지역 및 테마별 각종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산림문화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방문자수가 3년만에 평균 3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푸른숲선도원 육성 및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등 산림교육·문화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산림내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고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림을 단순한 휴양공간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과 소외계층 및 장애우 등에게 올바른 산림관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녹색교육센터인 '숲체원'을 운영하여 월평균 8,200명에게 다양한 숲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실행으로 산림교육·문화 전문가의 자질 향상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교 시절부터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산림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07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전문가 등에게 의뢰해 현행 교과서 및 새롭게 개발되는 교과서를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한편, 앞으로 개편될 교과서에 산림에 관한 내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집필 참고자료를 마련하여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사, 청소년 단체와 일선 학교 교사 등에게도 제공하였다.

▣ 향후계획

청소년 산림체험 공간확대를 위해서 숲체원과 같은 산림교육시설과 학교숲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산림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2012년도부터는 학교 교사들이 산림에 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의 산림시설을 활용하여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을 통하여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산림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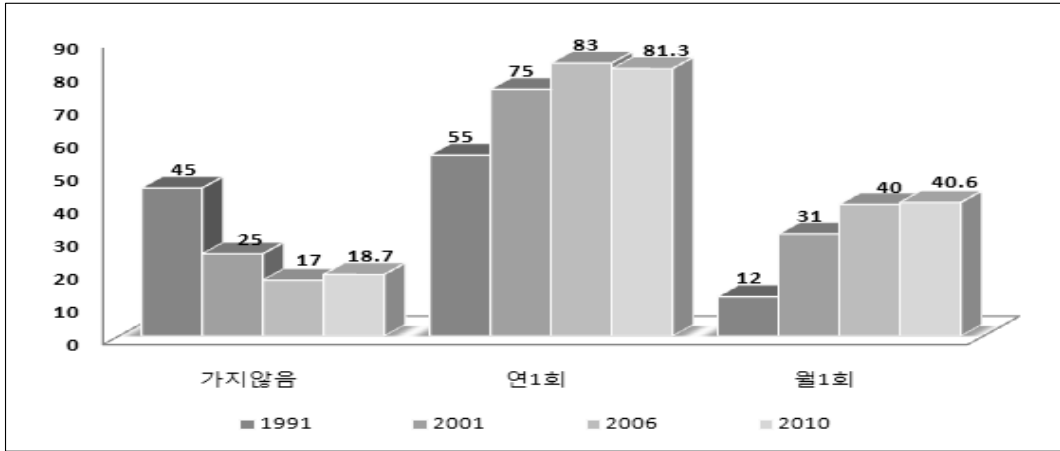
| 산림청 숲길정책팀 사무관 이상인, 김영기

▣ 시행배경

산행인구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건강과 체험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등산·트레킹 활동을 즐기는 대중적 붐이 일어나 생활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한국갤럽, 2006)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성인의 40% 정도가 한달에 1회 이상 등산을 하고 있으며, 연인원 462백만명이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중에서 45.1%가 트레킹을 선호하는데 여론선도층은 이보다 높은 52.7%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숲길 조성·관리를 해야한다는 비중이 32.1%나 되고 있다.(2010년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한국갤럽))

이처럼 등산과 트레킹 활동은 우리 국민이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산·트레킹에 대한 국민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산행습관과 관련 정보 부재와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다이용으로 인한 셋길 발생 및 등산로·트레킹길 주변의 훼손증가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59〉 등산인구 증가 추이



자료 :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한국갤럽, 1991·2001·2006·2010년)

〈표 4-60〉 최근 5년간 산악사고 증가 추이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구 조 건 수 | 4,590 | 5,096 | 6,492 | 7,096 | 7,718 |
| 구 조 인 원 | 5,019 | 5,421 | 6,870 | 7,598 | 7,505 |

자료 : 소방방재청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등산로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다. 현재 등산로의 훼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산림청이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국 4,440개의 산에 총 17,598km의 등산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등산로 가운데 훼손이 심하여 시급히 정비해야 할 대상이 전체 등산로의 약 3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등산·트레킹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산행수요를 충족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등산로 정비, 등산학교 운영, 새로운 산행형태인 수평적 체험형 트레킹길 조성, 등산로 DB구축을 통한 등산로 정보 서비스 등 등산·트레킹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트레킹길 네트워크 구축계획 추진

산행인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기존의 정산등정이나 마루금 종주 위주의 등산 유형이 마을과 마을 잇는 작은 능선을 넘나들거나 수평적 개념의 산자락을 따라 산림의 생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형태의 걷는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트레킹숲길 네트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숲길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체계화 하고 생태적·문화적 지역특성이 우수한 국유림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구간 5개소 78km를 조성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였다.

시범조성 지역을 살펴보면, DMZ트레일 구간 중 양구 편치 볼 들레길(25km), 둔·가리 약수숲길(26km), 금강소나무림 집단지역인 울진 금강소나무숲길(12km), 불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산·예산지역의 내포 문화숲길(6km), 명산 중의 하나인 제주도 한라산둘레길(9km)를 조성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0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지리산둘레길'은 총 300km 중 211km를 조성하고, 71km를 부분 개통함에 따라 방문객이 급증하여 연간 464천명이 찾았으며, 가족단위의 방문객 등이 마을에 체류하면서 지역농산물 판매, 민박 등의 부수적인 농가 수입으로 이어져 농산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효율적인 숲길 조성·관리 및 숲길거점 산촌지역 활성화 연구」(10, 국립산림과학원·경북대)에 의하면 '지리산둘레길에 5만명 방문시 인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2,653백만원, 소득 480백만원, 부가가치 1,367백만원, 고용효과 53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등산객의 증가와 이로 인한 과다 이용은 등산로의 침식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 보행에 불편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은 그 주변에 새로운 샛길을 만들게 되고 그에 따라 산림훼손이 주변 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결국 자연적인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생태계 훼손완화를 위해 2003년부터 백두대간의 국유림지역 등산로를 시작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사업범위를 이

용 빈도가 높고 훼손도 심한 도시 근교 생활권 등산로까지 확대하여 2010년까지 총 3,255km의 등산로를 정비하였다.

또한, 등산로의 안내표지판, 유도표지판(이정표), 위치표지판 등 등산관련 시설물들이 관리주체별로 디자인, 재질, 규격이 다를 뿐 아니라 정보의 내용도 제각기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산관련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를 위해 등산로 정비 매뉴얼을 보급하여 가급적 인공시설물 설치 최소화하고 지형지물을 충분히 활용하며, 경관보전과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건설 등으로 단절된 등산로로 인한 등산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등산객의 왕래가 많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10년 등산로 연결사업(부산)을 시범 추진하였다.

이러한 등산기반 시설 확충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시 현장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용자, 지역주민, 산악단체나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등산로 실태조사의 지속 추진

정확한 등산로 정보의 조사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숲길조사관리원 287명을 선발하여 전국 주요 산의 각종 등산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였다. 숲길조사관리원들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를 이용하여 등산로 전체 노선을 현지 측량하고 편의시설·훼손지 등 중요한 지점의 위치 데이터를 취득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등산로 분포현황 및 이용 빈도를 비롯하여 등산로 주변의 생태·역사·향토문화 등 관광 자원 조사도 병행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국민에게 등산로 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로 개발되어 국민들이 쉽게 찾고 알기 쉬운 사이트인 「숲에On」(www.foreston.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등산학교 운영

자연 친화적이고 건전한 등산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등산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3,79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10개 구간으로 나

뉘어 실시된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은 각 구간별로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산악회 등산 전문가,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원 등의 인솔로 325명의 남·여 중·고등학생이 5박6일간 백두대간을 답사하며,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하였다.

● 등산안내인 배치·운용

최근에 지역산악회 등 모집산악회가 주관하는 단체산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등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은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적극적인 등산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늘어나는 등산인구 만큼이나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등산객이 안전한 등산을 지원하는 등산안내 서비스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등산안내인을 주요 명산에 배치하여 등산로 안내와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69명을 선발·운영하는 등 대국민 등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한국등산지원센터 운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 설립한 한국등산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장애인·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등산교육과 등산로 모니터링, 샛길등산로 실태조사, 등산시설의 표준화, 건전한 등산문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등산지원사업을 펼쳐, 국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등산 활동을 돕고, 안전한 등산 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

산림청 산하 산림항공본부 및 지역 산림항공관리소에 산림항공구조대(9개대 50명)를 편성하여 등산객의 조난·추락 등의 산악사고 발생시 헬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산악구조대와와의 합동훈련, 구조기술 및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여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등산문화캠페인 전개

등산인구의 급증에 따른 산림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산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국 각 지역의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민·관, 교육계까지 합동으로 실시하여 범국민 확산에 주력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향후계획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보전적 활용'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산행을 즐기는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반구축과 산림생태계 훼손완화를 위해 훼손 등산로 정비사업에서부터 등산교육 등 등산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등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자연체험형의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을 오르내리는 수직적 개념의 등산이 아닌, 자연의 생태·향토문화 등을 체험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걷기 문화로 발전하는 수평적 개념의 숲길(트레킹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트레킹길에 대한 조성 확대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조속히 정립하여 국민의 다양한 산행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

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사무관 이광호

▣ 시행배경

수목장은 장묘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인공시설물이 필요 없는 장묘방식으로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장사방법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고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고려대학교 연습림에서 치러지면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국민의 관심과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묘지는 2천여만기로 국토의 1%에 해당하는 998km²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주택부지 면적(2,177km²)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및 국토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로서 수목장립을 조성·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목장립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그 수목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방법이다. 수목장림이란 이러한 수목장을 하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나 실제로 수목장을 한 산림을 말한다. 이러한 수목장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수목장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25)으로 수목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수목장의 종류별 세부면적,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수목장림의 조성·운영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산지관리법」 개정('07.7)을 통해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산지를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목장림의 허가면적 범위를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물 설치 구역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하는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0.5)하여 보다 쉽게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유 수목장림(하늘숲 추모원) 조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림 모델 개발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 일원 국유림 55ha 중 10ha에 2,009그루의 추모목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 수목장림을 조성하였다. 국유 수목장림의 주요시설은 안내센터, 추모로, 추모광장, 수목장림 등이며, 추모목의 주요수종은 소나무, 참나무, 산벚나무 등이다.

국유 수목장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정 사용료 및 관리비 등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을 제정 공포('09.2.26)하고, 국민공모를 통해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을 「하늘숲 추모원」으로 정하였는데 「하늘숲 추모원」은 ‘사후세계를 뜻하는 하늘나라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늘숲 추모원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위탁계약 체결 후 '09.5.20일 개장하였다.

● 하늘숲 추모원 이용 만족도 조사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하늘숲 추모원에 수목장으로 고인을 모신 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0.5.7~5.11)를 실시한 결과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81%가 사후에 본인도 수목장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사망시 수목장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82.3%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게 수목장을 권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83.4%로 나타났다.

하늘숲 추모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7.7%이며 불만족하는 경우는 2.7%로 나타났는데, 자연환경이나 운영관리의 공신력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숲추모원에 수목장을 하게 된 동기는 가족이나 친지의 권유가 22.8%로 가장 많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22%, 언론보도 등을 통해 좋은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7%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수목장을 하게 되면 좋은 점으로는 사후에 자연과 완벽하게 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가 44.3%로 가장 많았고 자연 및 국토의 훼손이 없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가 40.8%로 그다음을 이었다.

● 하늘숲 추모원 운영 성과분석

2011. 5월 현재 전체 추모목 2009그루 중 1,236그루가 계약되어 62%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목 기준으로는 1,435그루 중 1,213그루가 계약되어 85%의 계약률을, 공동목 기준으로는 574그루 중 23그루가 계약되어 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견학한 사람은 모두 6만 8천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수목장립의 경우 공동목보다는 가족목이 월등히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목의 경우 사용계약 완료시까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앞선 것으로 수목장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숲 추모원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수목장립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동목의 경우 분양율 제고를 위해 일부 가족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수목장 관련 자료 발간

수목장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수목장 제도 도입의 배경과 과정을 사진,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보는 수목장」이라 행정 간행물을 발간(10.1)하였다.

▣ 향후계획

산림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쉽게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수목장실천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수목장 실천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수목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수목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바.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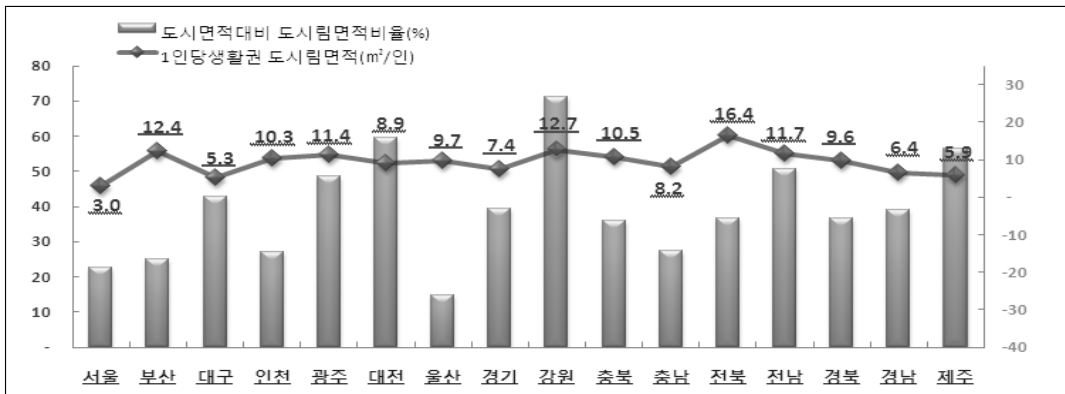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조백수

▣ 시행배경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생활권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광역시외의 경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평균 6.78㎡로 런던(27㎡), 뉴욕(23㎡), 파리(13㎡) 등 선진도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웰빙문화 확산과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등을 위한 도시녹지 요구도는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숲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심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녹색쉼터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 내 녹색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61〉 생활권 도시숲 현황(2009년 기준)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그러나 도시지역은 높은 지가(地價) 등으로 도시 내 숲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도심 자투리땅,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새로운 숲 조성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도시숲의 관리·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참여 도시숲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도시지역의 숲은 생육환경악화, 대기오염, 무분별한 사용·관리 등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크게 저하되고, 대다수 도시숲은 각종 개발로 인해 콘크리트 건물들 속에서 고립·단절된 채 섬처럼 존재하여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숲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내·외곽의 산림을 선적 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야 한다.

〈표 4-62〉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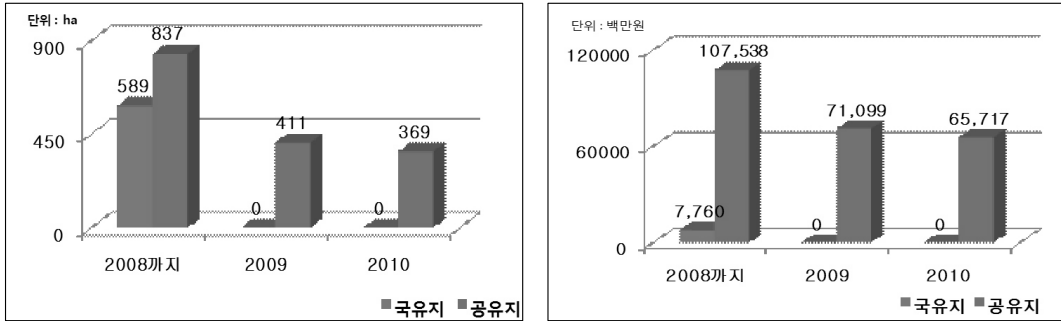
| 요 소 | 형 태 | 종 류 | 기 능 |
|------|-----------------|---------------|--|
| 핵 | 대규모 숲 | 산림, 공원 등 | ·광역권 도시 경관·환경 개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 ·시민들의 당일 체재형 휴식공간 |
| 중거점 | 중·소규모 숲 | 학교숲, 녹지, 비오톱 | ·근린권 도시 환경 개선 ·소형생물종의 서식처 또는 휴식처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
| 소거점 | 독립된 수목 또는 소규모 숲 | 정원수, 자투리 숲 | ·직접적인 거주 환경 개선 ·생물종 휴식처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
| 선 통로 | 선형의 폭과 넓이 | 가로수, 하천변녹지대 등 | ·각 요소의 연결 요소 ·경관의 개선, 미기후의 조절 등 ·생물종의 이동통로, 생물 서식처 |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이처럼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숲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시내부와 도시외곽의 산림을 선적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를 통해 연결하고, 도심지 내부에는 도시숲, 산림공원, 학교숲 등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과 유기적 상호연결성을 가지게 하여 순환형 녹색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국유지 도시숲은 2008년도까지 39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매년 사업을 지원하여 2010년까지 1,645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다.

〈표 4-63〉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현황(2010년 기준)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향후계획

도시숲 조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 녹지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 중이다. 특히, 도시숲조성 확대를 위해 산림서비스를 매수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부지마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 조성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정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모델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사. 가로수 조성·관리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박영환

▣ 시행배경

가로수는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도시 내 녹색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선형녹지이다. 가로수는 도시숲과 하천·공원 등 흩어진 녹지공간을 수림대로 연결하여 동물이동통로 및 생물서식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녹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녹음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로환

경을 만들며 소음 방지 및 유해한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등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가로수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로수 관리업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부속물로 관리하였으나 2001년 가로수에 대한 제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2002.1.2. 산림청 예규 499호)'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 왔다. 또한,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적 충돌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제정·고시(2006.8.8, 산림청 고시 제2006-58)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수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고,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도시의 선형녹지축으로써의 녹지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표 4-64〉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 구 분 \ 연 도 | 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연장거리(km) | 4,930 | 1,002 | 1,150 | 1,478 | 1,300 | 1,008 |
| 그루수(천그루) | 1,030 | 253 | 206 | 292 | 279 | 2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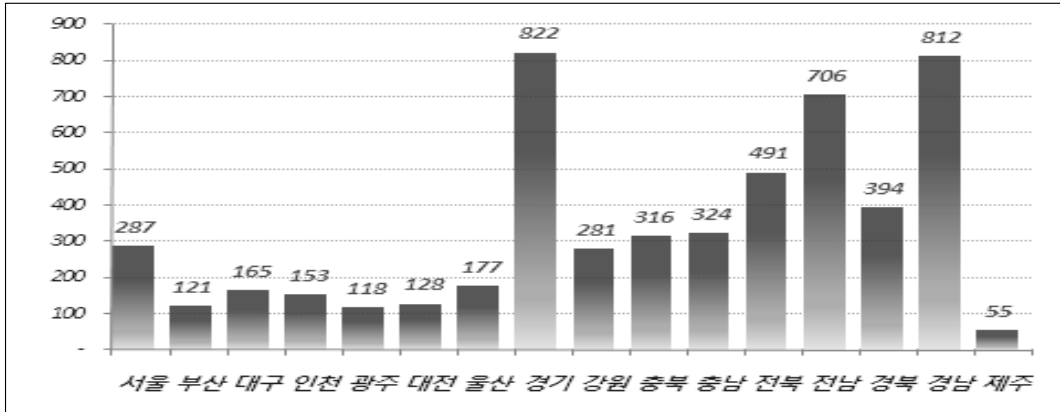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가로수 조성

전국의 가로수는 2010년말 현재 5,349천그루(34,817km)로서 2009년 대비 251천그루(1,008km)가 증가하였으며, 수종별로는 벚나무 22%, 은행나무 19%, 느티나무 6%, 양버즘나무 6% 등이다. 시·도별 가로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경남, 전남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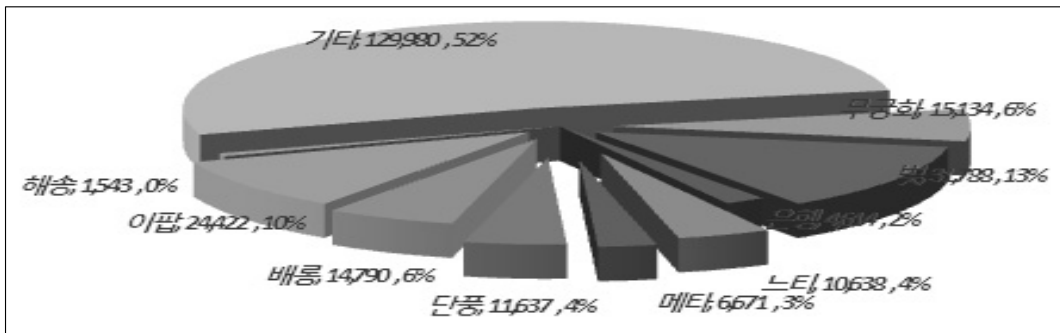
신규조성은 2003년 이후 매년 약 1,000km씩 증가하고 있으며 조성시 가장 많이 식재하는 수종은 벚나무 13.0%, 이팝나무 10.0%, 무궁화와 배롱나무가 각각 6.0% 순이었다. 은행, 양버즘, 느티 등 기존의 주요 수종의 식재가 감소하는 반면, 이팝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등의 식재가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는 추세이다.

〈표 4-65〉 가로수 시도별 현황(2010년 기준)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표 4-66〉 수종별 신규조성(2010년 기준)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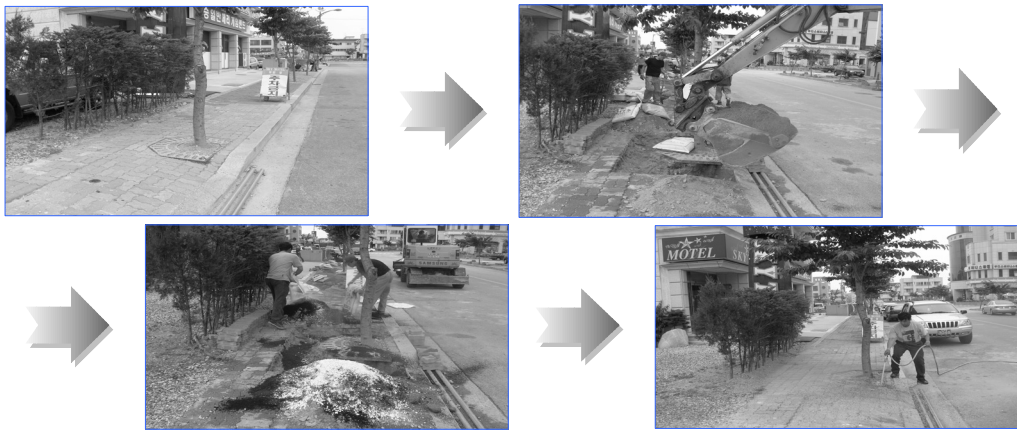
● ● 생육환경 개선 등 사후관리

가로수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조성된 가로수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협소한 생육공간 및 부적절한 토양으로 뿌리발달 및 생장이 극히 저조하여 가로수로서의 정상적인 기능발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수목생장을 도모하고 투수층의 확대 및 관목식재를 통한 녹색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2007년부터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대상지에 대하여는 2009년 9월 공모를 통하여 10개 시·군·구의 지원대상지를 확정하였다.

그동안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표지판과 간판 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의 가지치기를 실시해 몸통만 앙상한 가로수가 만들어지는 등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도심상가 간판가림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09년 가로경관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지역 랜드마크화 방안이 행안부 주관 국민생활공감 정책과제로 채택('09.7)되어 가로수가 도시환경의 하나의 요소를 넘어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미관과 경관을 살리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도시랜드마크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토록 '수형관리 매뉴얼'제작 보급 등 경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11〉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현장 모습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 가로수 수형관리 등 가로경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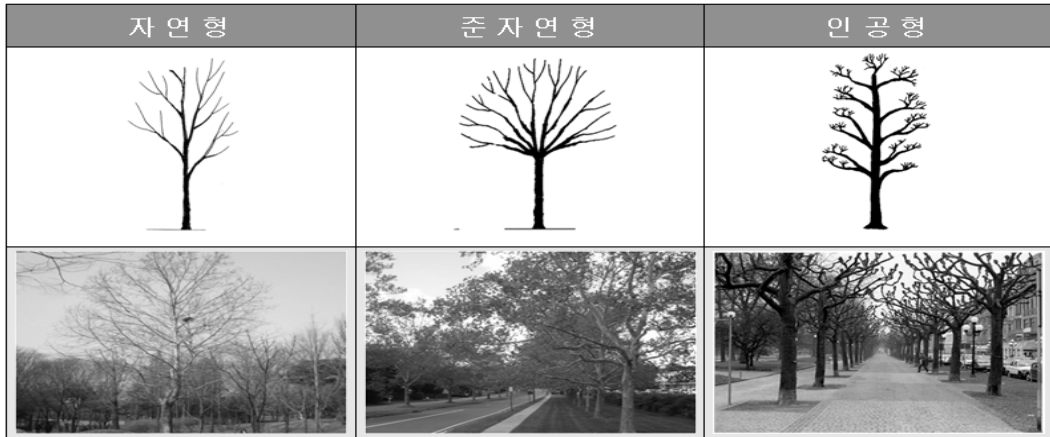
산림청에서는 가로수를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앞으로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그림 4-12〉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해외사례 모습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그림 4-13〉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모식도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향후계획

산림청에서는 가로 녹지의 양과 질 증진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로수의 관리주체가 되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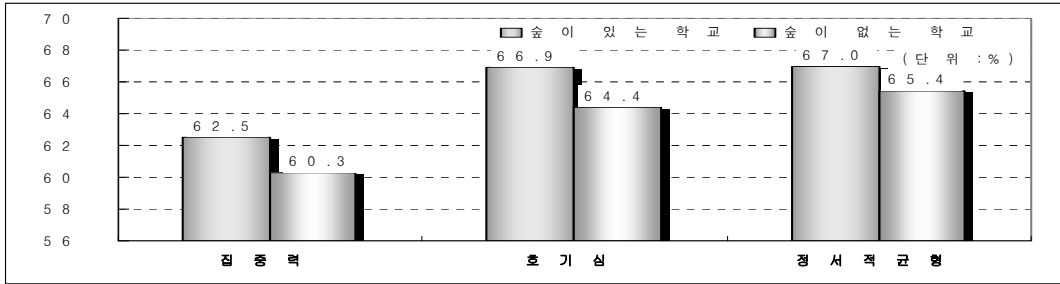
아. 학교숲 조성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조영희

▣ 시행배경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량을 확충하고 학교옥외 환경을 개선하며,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환경친화적인 태도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별도의 토지매입비 없이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하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4-67〉 학교숲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시행내용 및 성과

학교숲 조성사업은 1999년 민간단체인 (사)생명의숲에서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여 2001년부터 산림청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869개교를 조성하였으며, 2011년에는 86개교를 신규 조성하고 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사)생명의숲, 2009년까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68〉 학교숲 조성 실적

(단위: 개교)

| 연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신규학교 | 10 | 20 | 24 | 15 | 127 | 105 | 79 | 116 | 120 | 85 | 109 | 59 |
| 누적학교 | 10 | 30 | 54 | 69 | 196 | 301 | 380 | 496 | 616 | 701 | 810 | 869 |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0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에 따라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지자체간 학교숲 조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있다.

▣ 향후계획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의 부족한 녹색공간을 늘려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가.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서기관 이치명

▣ 시행배경

WTO(세계무역기구)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이어 제9차 다자간 통상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통상협상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DDA 농업협상은 UR 협상 종료 후 자동으로 재협상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비농산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환경, 지적권, 규범, 무역 원활화, 개발, 분쟁해결 등 9개 분야에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02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다. '04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등으로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03. 9월 칸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 한동안 협상이 공전되기도 하였으나 '04년 8월 자유화 세부원칙 기본골격(Framework Agreement)이 합의되면서 협상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05.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를 홍콩에서 개최하여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y) 타결을 시도했으나 농업협상은 수출·수입국 간의 대립, 비농산물(NAMA)협상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간 입장차로 세부원칙(modality)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06. 7월에는 국내보조 감축에서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세부원칙 도출이 불가능해 지자 라미 사무총장은 '모든 분야에서 DDA 협상 중단(suspend)'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07.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DDA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재개되었다. 4월에는 농업, 비농산물(NAMA), 규범 의장들이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제출하여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갔다. 이러

한 진전을 기초로 7월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08. 2월, 5월, 7월, 12월 4차례에 걸쳐 의장 수정안이 배포되었다.

특히, '08. 7월 말 라미 사무총장이 전격 소집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modality) 합의 위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농산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몇몇 쟁점에 대해 인도, 미국 등 일부 국가 간의 의견대립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어온 상당수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09년 미국 Obama 행정부 출범, 인도 총선 등으로 인해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G8 정상회의(7.8-10) 및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9.24-25)에서 '10년 DDA 타결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OECD, APEC 등 일련의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Momentum)이 형성되었다. 11.30~12.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활동전반을 점검하고 DDA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10.3월에 DDA 현황 점검회의(Stock-taking)를 개최하고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및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조성된 모멘텀을 바탕으로 DD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 향후계획

DDA 협상대상 임산물 품목은 354개(HSK 2006)이며 농업협상 대상품목은 1류~24류에 포함된 단기임산물 108개, 비농산물협상(NAMA) 대상품목은 25류~94류에 분류된 목재류·석재류 246개이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인정,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등이, 비농산물(NAMA) 협상에서는 관세감축공식, 미양허 품목(합판, 섬유관, PB 등) 처리문제, 분야별 무세화(Sectoral Liberalization) 논의(임산물 Sectoral 협상), 신속해결메커니즘(HM), 투명성 등 비관세장벽(NTBs) 해소가 주요 협상쟁점이다.

산림청은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업인, 학계, 협회, 생산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 대만 등과 공조하며 협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서기관 이치명

▣ 시행배경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형태로 특정국가 간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통상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FTA를 확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02. 10월 한-칠레, '04. 11월 한-싱가포르, '05. 7월 한-EFTA, '06. 4월 한-아세안 FTA를 타결한 후, '07. 4월 한-미, '09. 7월 한-EU FTA, '09. 8월 한-인도 CEPA, '10. 8월 한-페루 FTA를 타결하였다. '11. 7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등 6개 FTA가 발효 중이며, 한-미, 한-페루 FTA는 국회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터키, GCC,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10. 5월 한·중·일 FTA 산관학 회의가 개시되었다.

▣ 향후계획

임산물 협상 대응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영향을 분석하고 생산자, 전문가, 학계, 단체 등 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임산물 FTA 협상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개시 예정인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에서 국내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상품, 원산지, 해외조립 등 투자 활성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분과, 임산업 글로벌화 및 원목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협력분과 등에 참가하며 협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다. 해외조립 확대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사무관 한창술

▣ 시행배경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천연림의 벌채규제 강화로 목재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목 등 목재 소요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목재의 단순수입 의존은 국민경제의 기본적 수요가 외국자원에 종속됨으로써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조립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목재수요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조립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립을 목표로 1993년부터 해외조립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등 12개국에 21개 기업이 진출하여 228천ha의 조립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해외조립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조립 및 육림 사업비로 953억원을 융자 지원 하였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 144백만원이던 해외조립 사전투자환경조사비를 2008년도부터 250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조립목에 대한 국내 반입은 2000년부터 속성수인 아카시아를 위주로 시작되어 2010년까지 펄프용 칩 394천BDT(908천m³)이 국내로 도입되었다.

한편, 해외조립투자 촉진을 위해 산림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2006년 8월 1일 「한-인도네시아 산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체결 등 임업협력 강화를 통해 50만ha의 조립대상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하여 2009년 3월 6일 「한-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목재자원 선점을 위한 조립대상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조립 사전투자환경 조사비 지원, 융자 금리인하(3%→1.5%) 등 정책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한 산림자원 보유국과의 양자협력 확대(2010년 현재 12개국), ODA 프로젝트사업 실시를 통한 산림녹화기술 전수 등과 연계하여 해외조림 투자기반 구축 및 투자 여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향후계획

해외조림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2008~2017)」을 수립하여 해외조림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정책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과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의 기반구축을 통하여 2017년까지 25만ha의 해외조림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림사업을 기존의 목재공급을 위한 산업조림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조림 등 해외 산림자원 확보 사업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산림바이오매스의 새로운 수요처인 해외조림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6절 수산업

1. 연근해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장묘인·유민석·김옥식 / 자원환경과 사무관 이병웅

▣ 시행배경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I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서·남해가 해양환경 특성이 상이하고 어구어법도 지역별·해역별로 다양하여, 동일 수역에서 여러 업종이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른 지역간·업종간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UN해양법 발효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가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009년 수산자원관리법을 마련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조 5,337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6,642척을 감척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어선세력은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10~37% 정도 과도한 실정에 있다.

수산동·식물의 주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 감척사업으로 연안 어선을 1994년부터 2010년까지 5,253억원을 투입하여 14,066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3,641억원을 투입하여 1,268척을 감척하였으며,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원을 투입 1,308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국제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실정인 반면, 감소추세에 있던 어업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1994년 이후 적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연근해어선 척수 : ('00) 68,629척 → ('10) 50,757척으로 20.1% 감소
- 자원량 (만톤) : ('90)835 → ('94)801 → ('00)768 → ('05)783 → ('10)851
- 어획량 (만톤) : ('90)154 → ('94)149 → ('00)119 → ('05)110 → ('10)113

적당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17.3M/T이었으나 2010년에는 22.4M/T으로 29.5% 증가하였으며, 적당 어로수입은 2000년도 3,39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7,712만원으로 127.5% 증가하였다.

- 적당 생산량 및 어로수입 증가
 - 적당 생산량 : ('00) 17.3M/T → ('10) 22.4M/T
 - 적당 어로수입 : ('00) 33.9백만원 → ('10) 77.1백만원

●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사업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2009년까지 8,475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207천ha를 시설하였고,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2009년까지 878억원을 투자하여 1,150백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또한,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 15개 국·도립 배양

장에서 신품종 종묘생산기술 및 방류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배양장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2006년부터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에 대해 과학적인 자원 조사·평가를 토대로 어업인 등과의 협의를 통해 동 어종에 적합한 자원회복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2009년에는 411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4.7ha를 시설하고 국·도립 배양장에서 지역 특산종묘를 생산·방류하였으며, 151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종묘 약 104백만마리를 매입하여 연안에 방류하였다.

● 연근해어업 총조사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감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연근해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여 어업구조개선 시책과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매 5년마다 어업자원과 어업경영 실태 등 '연근해어업 총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금번 조사는 2008년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2010년도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시도별·어선규모별·어업별 어획실태, 어장이용 수준 및 어기별 어획상황에 대한 조사와 어종별 주조업어장, 어업별 사용어구 규모, 어구·어법 변화상황, 어획물 체장조성, 생식소 숙도지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추정(ABC) 등의 어업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자망·통발어업은 바다에서 1주일 이상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수동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타 어업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구 유실률이 매우 높으며, 이들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그물코에 물고기가 얽혀 죽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서 수산생물의 서식장·산란장을 파괴할 뿐 아니라,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발생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업에서 발생된 폐어구에·폐어망에 의한 어업자원이 감소하고,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틸렌 등) 재질의 친환경어구(PBS : Polybutylene succinate)를 개발하여 2007년부터 자망 및 통발어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40억원을 지원하여 대게·꽃게·조기자망어업 310척에 대하여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였다.

〈표 4-69〉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척)

| 구 분 \ 연 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계획 |
|-----------|------|------|------|------|---------|
| 소 요 예 산 | 20 | 43 | 39 | 40 | 43 |
| 지 원 척 수 | 150 | 200 | 253 | 310 | 300 |

▣ 향후계획

앞으로 국내의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어업구조조정 참여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감척제도 마련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어업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및 어린고기 보호, 혼획을 저감방안 등 어종별 관리방식에 의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으로 추진코자 연구 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어·혼획을 저감을 위한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어구·어법 규제방식에서 어종별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어구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어구의 성능과 품질 및 생산단가를 최소화하여 저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아울러 친환경어구의 사용에 따른 경제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원관리 증대효과 및 사용 후 어구처리에 대한 정책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해면양식어업

|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종건

▣ 시행배경

세계 양식어업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개발, 생태계 기반 양식어장 관리로 바뀌면서 연안의 소규모 양식어업이 쇠퇴하고 외해의 대규모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내만중심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한 새로운 양식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외해양식어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2005년부터)와 경상남도(2006년부터), 전라남도(2007년부터), 강원도(2008년부터), 경상북도(2009년부터), 전라남도(2010년부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총 6개소 시험어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2개(전남, 제주)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친환경 고부가가치 외해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외해양식어업 6개소(참다랑어 4개소, 일반어류 2개소)를 개발하고 참치 완전양식을 위하여 종묘생산 기술 등 연구기반을 만들었다.

한편,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사료 사용 등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09년도에 42,958백만원(일반회계 7,313 농특회계 18,502, 광특회계 4,034, 수발기금 13,109)을 지원하였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7,000백만원,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지원 5,100백만원, 기타 수산물 위생관리 등 18,502백만원이었다. 광특회계 사업내용은 김육상채묘및 냉동방보관시설 1,000백만원,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지원 550백만원, 적조방제사업 808백만원,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626백만원 등 4,034백만원이었다. 수발기금 사업내용은 양식어업시설 지원 8,105백만원, 생계소득및안정자금 99백만원, 출하조절 4,200백만원 등 13,10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향후계획

내만과 외해양식의 차별화를 통한 윈-윈 전략으로 내만은 친환경적으로 해조류, 패류 위주의 양식과 천혜의 해양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해는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수면으로 활용함으로써 WTO,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전복양식장의 경우 내만에 밀집되어 있어 조류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량이 줄어드는 어장에 대하여는 외해 중층가두리 양식방법을 개발하여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내수면어업

| 자원환경과 기술서기관 임남철

▣ 시행배경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 점차 양식 수산물의 양식기술개발과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도 늘리고 국제적 기준(HACCP)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남획과 수질오염, 골재채취 등 난개발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토속어류가 멸종위기에 있다는 자각으로 주요 하천 등에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내수면 레저 수요의 증대와 낚시인구의 증가로 어업의 장소보다는 레저 활동의 공간으로써 내수면의 역할이 변화되어 내수면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향후 내수면 이용객들이 농어촌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내수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원조성을 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업화와 휴식공간으로써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표 4-70〉 낚시어업권 현황

(단위: 건)

| 구 분 \ 연 도 | 2008 | 2009 | 2010 |
|-----------|------|------|------|
| 허 가 | 522 | 498 | 492 |
| 신 고 | 175 | 211 | 264 |
| 합 계 | 742 | 697 | 756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시행내용 및 성과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내수면에서의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내수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시설 지원, 토종종묘보급을 통하여 어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하천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2010년도에 5개도 15개 시·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14〉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인제군 남면 상하수내리(소양호)



▶어소에 어란이 부착된 모습(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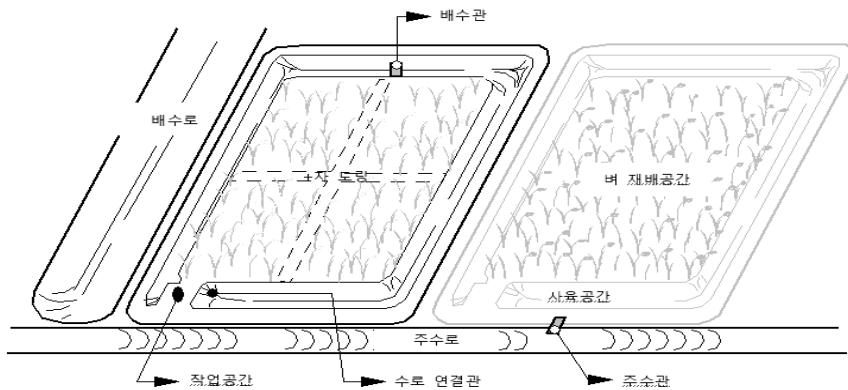
●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지원

회·매운탕 등 1차 소비에 한정된 내수면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훈제, 분말, 죽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민물고기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어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식품산업 육성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충청남도 논산에 메기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는 기존에 운영중인 가공공장의 가동상황을 보아가며 뱀장어 등의 가공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토종종묘보급사업 추진

수입산 종묘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어류에 대하여 외국산과의 가격우위를 점하고 양식어가에 저렴한 종묘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양식어류의 안정된 가격과 생산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민물고기를 접하고 어업인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종묘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미꾸라지 종묘생산을 위한 개발을 시작으로 참게, 붕어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미꾸라지 논생태양식을 시범 추진하여 물고기를 키우면서 친환경농업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15〉 논 생태 양식 개념도



2007년부터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강·하천의 레저인구가 늘어나고, 내수면 어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향후 수산자원 증강 및 복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내수면 양식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더 고품질의 양식어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 향후계획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난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민물고기의 멸종위기까지 초래하였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건강보양식으로 선호한 민물고기의 소비가 부진하고 소비층이 다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보양식인 민물고기 명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내수면어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더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보완하고, 미비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어업인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원양어업

| 원양정책과 사무관 구도형

▣ 시행배경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변국가와의 경쟁심화, 어업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 및 인프라 약화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수산시설 투자 지원, 명예수산물 지정·운영, 원양산업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원양산업 통계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도에는 우리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수산기구의 규제강화 및 주요 연안국들의 수산자원 자국화 추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산물 수출 증진 등을 목적으로 노후한 참치 선망어선의 대체건조를 적극 추진하여, 1,100톤급 참치선망어선 1척에 대한 대체건조를 완료하고, 2,000톤급 1척과 1,100톤급 1척 등 2척에 대한 대체건조에 착수하는 등 원양어선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원양선사들이 요구하는 신개념·최신사양에 적합한 참치 선망어선의 선형 개발을 위한 1, 2차에 걸친 연구용역을 통해 원양 참치 선망어선 선형설계도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원양 선망어선 건조원가 절감, 국내 어선건조의 기반마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원양산업에 대한 통계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본격 시행될 원양산업 총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요 연안국들의 원양산업 관련 정책, 법령, 산업동향, 경제현황 및 외국인 투자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해외수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스리랑카, 캄보디아, 투발루 등 17개국에 대한 해외수산투자정보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였으며, 원양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교민 8명을 명예수산물관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요 연안국들의 각종 수산정책 및 투자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요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 향후계획

그동안 일부업체들에 의해 소규모 해외수산자원개발 등이 추진되었지만 생산·가공·유통이 융·복합화된 해외수산자원개발은 미흡한 상황이며, 보유 원양어선의 수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원양어선들의 노후화도 심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2개소의 해외수산시설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며, 명예수산물관제도에 대한 보완·개편을 통해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연안국들에 대한 수산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한편, 2010년 시작된 2척의 원양어선 대체건조 완료와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원양어선 노후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 실시된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현황, 생산량, 종사자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원양산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연안국들에 대한 원양산업정보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해외 수산투자 정보기반을 확대하고 원양산업에 대한 통계인프라도 착실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제2절 교육여건 개선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제4절 농어업인 연금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1. 일반 농산어촌 개발

| 지역개발과 서기관 전경구

▣ 시행배경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 경제권 기초생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단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화·효율화·자율화를 위한 신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정책방향

- 광역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추진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
-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신(新)지역발전정책 주요내용

〈기본방향〉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추진전략〉

- 기초생활권 개발 : 마을 단위 대상,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광역경제권 추진 : 5+2광역경제권 설정
- 초광역권 개발 : 대외 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제고

초광역권은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내륙벨트 등 5개 권역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은 16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광역권으로 개발하게 되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기초생활권은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금으로 지원)은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28개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접경도서지역 15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표 5-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 구분 | 해당 시·군 |
|----|--|
| 경기 |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
| 강원 |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
| 충북 |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 충남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전북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 전남 |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경북 |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 경남 | 합천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로 첫째, 소도읍육성을 포함하는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둘째,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어촌종합개발을 포함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셋째, 전원마을조성,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하는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 넷째,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업농촌생활용수, 기계화경작로, 지표수보강, 소규모용수, 개발촉진지구,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신활력지역을 포함하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표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 유형별 | 세부유형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비고(기존사업) |
|-------------------|-----------------|---|--|
|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지원가능 ○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제외한 소득사업은 가급적 지양 | ·읍면소재지종합정비는 기존에 소도읍육성사업,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읍면소재지종합정비로 통합하여 시행 |
| | |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지역 역량강화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원가능 ○ 사업기간 : 사업규모에 따라 3년~5년 · 30억미만(3년간), 30억이상~50억미만(4년간), 50억이상(5년간)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70억원 | ·권역단위종합정비는 기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통합 시행 (복합형=농촌형+어촌형+산촌형) |
|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 신규마을 조성 |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지원 * 사업부지 100% 확보, 마을정비조합 구성, 입주예정자 80%이상 확보한 지역에 한함 | ·신규마을조성사업은 기존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의 형태임 |
| | 기존마을 정비 |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시 지방비 부담) | ·기존마을정비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형태임 |
|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농촌생활 환경정비 | ○ 지원내용 -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지역에 개발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촌생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기존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기반시설이 해당 |
| | 농업생산 기반조성 | ○ 지원내용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의 시설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기계화 경작로확보장,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의 농업기반 지원시설이 해당 |

〈표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 기능별 사업 | 세부 사업 | 세부 내용 |
|-------------|-----------|--|
| 기초생활기반확충 | 도 로 · 교 통 |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
| | 상 하 수 도 |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
| | 재 해 대 비 | 하천(세천)정비, 응벽설치, 안전휀스, 기타 안전시설 등 |
| | 마 을 정 비 |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
| | 복 지 시 설 |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
| | 문 화 시 설 |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
| | 운 동 휴 양 |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원두막, 심신단련장 등 |
| 지 역 소 득 증 대 | 농 업 기 반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 |
| | 소 득 기 반 | 농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
| | 체 험 관 광 |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장승설치, 방앗간복원, 간이천문대, 야영장설치,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
| 지 역 경 관 개 선 | 마 을 경 관 | 마을숲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보호수정비, 생울타리조성 등 |
| | 생 태 · 환 경 |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
| | 도 시 경 관 | 테마가로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가로경관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
| 지 역 역 량 강 화 | 교 육 · 훈 련 |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
| | 마 을 흥 보 |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
| | 부 대 비 용 |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에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원(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1차 계획 : '10~'14년)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120개 시·군 989개 내역사업에 9,736억원을 지원하여 11,464인의 신규인구유입 효과 등을 얻었다.

〈표 5-4〉 20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지 역 | 연 도 | 2010 |
|-----|-----|---------|
| 계 | | 973,649 |
| 경 기 | | 35,761 |
| 강 원 | | 61,878 |
| 충 북 | | 86,716 |
| 충 남 | | 116,632 |
| 전 북 | | 122,185 |
| 전 남 | | 215,892 |
| 경 북 | | 173,740 |
| 경 남 | | 144,314 |
| 제 주 | | 16,531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 향후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각 시·군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사업대상 선정 및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시적인 사업효과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 공간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포괄보조사업 추진 체계구축이 미흡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지역도 다수 있어, 사업 참여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11년에는 지자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방법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원자(지자체, 지역주민 등) 과정교육 등을 개설하여 지역사업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지역개발과 사무관 김운기

▣ 시행배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76년부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7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조정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의 정주요욕을 고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0년도에는 총 8,000동(사업비 4,000억원)의 농어촌주택에 대해 개량자금을 용자·지원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용자하였다.

〈표 5-5〉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세대,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 2007 | 2008 | 2009 | 2010 |
|-----------|---------|---------|---------|---------|
| 지 원 물 량 | 5,600 | 6,000 | 7,000 | 8,000 |
| 세대당 용자한도액 | 40 | 40 | 40 | 50 |
| 용 자 재 원 | 224,000 | 240,000 | 280,000 | 400,000 |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건축기간 단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10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의 잠재적인 수요현황을 검토하여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으로 개발하였다.

▣ 향후계획

2011년에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감축을 위해 8,000동의 물량 중 2,500동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에게 특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쾌적한 환경의 경제적인 주거문화 정착 및 농어촌 미래주택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생활형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8종을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3.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 환경부 생활하수과 사무관 조석훈

▣ 시행배경

최근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가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하수도 서비스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그간 대도시 중심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미흡하여 도·농간 하수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6〉 하수도 보급률

(단위 : %)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
| 전 국 평 균 | 85.5 | 87.1 | 88.6 | 89.4 |
| 농어촌 지역 | 42.9 | 45.7 | 49.2 | 51.0 |

자료 : 환경부 생활하수과, 하수도통계 2009년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하수처리 시설계획 중에서 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상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소하천의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07~'10년 4년 간 1,491개 시설에 대해 국고 8,17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마을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를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하천 수질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표 5-7〉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예산 반영현황

(단위: 억원, 개소)

| 구 분 \ 연 도 | 합계 | 2007 | 2008 | 2009 | 2010 |
|-----------|-------|-------|-------|-------|-------|
| 사 업 비 | 8,170 | 1,910 | 1,825 | 2,402 | 2,033 |
| 개 소 수 | 1,491 | 452 | 408 | 356 | 275 |

▣ 향후계획

'09.12월 수립한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09.12)'에 따라 2020년까지 26,268백만원을 투자, 소규모 하수도 시설 3,707개소(신설, 개량 포함)를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사무관 윤봉희

▣ 시행배경

농어촌 지역에 매립, 소각,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

어촌 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 정액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73억원(국비 기준)을 투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84억원을 지원하여 13개 지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율(소각, 매립, 재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각열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회수로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급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5-8〉 2010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예 산 | 2010년 예산(A) | 2010년 집행내역 | | | | 집행율 (B/A)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차년 이월 | 불용액 | |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 10,137 | 10,137 | 10,137 | 0 | 0 | 100 |

자료 : 환경부, 2010년

▣ 향후계획

2014년까지 359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83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62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를 추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주무관 박대현

▣ 시행배경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하여 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을 방지하

고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88년부터 2010년까지 1,421억원(원인자 포함)을 투자하여 134개 처리시설의 설치(시설개선 포함)를 지원했으며, 2011년에는 372억원을 투자하여 67개소 추진 중(총인시설 74억, 26개소 포함)에 있다.

▣ 향후계획

2013년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신규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2013년에는 39개소(계속사업 : 19개, 신규 사업 : 20개)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주무관 광명안

▣ 시행배경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부적정 처리 배출하거나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환경부에서는 동 공공처리시설의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시 사업비를 국비 지원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7,793억원(국비 기준)을 투자하여 전국에 73개소(12,060㎡/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23개소(2,668m³/일)의 시설을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아울러, 양산 등 11개소의 퇴·액비화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처리 시설의 가축분뇨 자원화처리 체계 구축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 및 저탄소 녹색성장 에 기여하고 있다.

▣ 향후계획

2012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화 처리형 공공처리시설을 2012년까지 21개소('10년 말 11개소 운영 중)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표 5-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집행현황

(단위 : 억원, %)

| 예 산 | 2010년 예산(A) | 2010년 집행내역 | | | | 집행율 (B/A)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B) | 차년 이월 | 불용액 |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82,090 | 80,790 | 80,790 | - | - | 98.4 |

자료 : 환경부, 2010년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김영아

▣ 시행배경

우리 농촌은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농촌고령화 대책이 절실하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부양부담을 줄이고, 상부상조 공동체 문화를 이용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노인이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였다.

〈표 5-10〉 연도별 65세이상 농가인구 고령화율

(단위 : 천명, %, %p)

| 구 분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전 년 대 비 | |
|-----------------------|-----|-------|-------|-------|-------|---------|------|
| | | | | | | 증 감 | 증감률 |
| 농가인구 | | 3,304 | 3,274 | 3,187 | 3,117 | -69.4 | -2.2 |
| 65세이상 농가인구 | | 1,018 | 1,052 | 1,060 | 1,067 | 7.2 | 0.7 |
| 농가 고령화율 ¹⁾ | | 30.8 | 32.1 | 33.3 | 34.2 | 0.9%p | |
| 전체 고령화율 | | 9.5 | 9.9 | 10.3 | 10.7 | 0.4%p | |

주 : 1)고령화율 : (65세이상 인구:총인구)×100

자료 : 통계청, 농어업조사결과, 2010년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담당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조성을 위하여 농촌 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평생학습·사회활동,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 노인의 체력과 능력에 알맞은 소득활동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은 마을주민이 사업을 신청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고,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마을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연찬회,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우수실천마을 경진, 평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05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58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1,0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노인의 여가활동을 촉진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연찬회 및 컨설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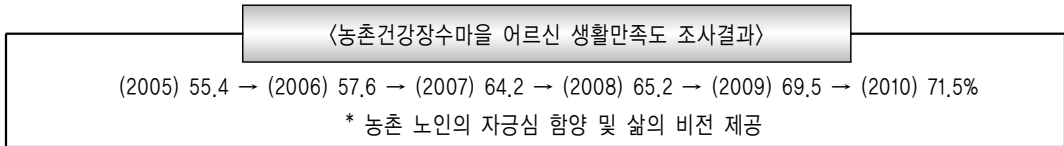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당당한 생활자세 확립과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 지원 및 공동체를 활용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담당자 연찬회(2.18~19), 협의회를 통해 우수추진사례, 문제해결사례, 정보공유 등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컨설팅을 2회 12개소 지원(5. 4~6.29)하여 마을 주민의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점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모니터링을 하였다. 또 사업추진의 통일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영역별 추진내용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 경진 및 홍보활동

농촌건강장수마을 우수홍보 사례집 「그 곳에 가면 활력이 넘쳐요」 발간·배부(700부) 및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기획홍보(1~12월, 52회)하였으며, 건강장수문화 정립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실천 마을을 경진·시상하여 사기를 증진시키고 우수 실천 사례(13점)를 확산·보급하였다.

●● 성과평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농촌건강장수마을 대상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노인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2005년 55.4%에서 2010년 71.5%로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노년층, 젊은층 등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마을주민이 단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삶의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성과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 성과지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지역 어르신의 생활만족도 조사결과 71.5점으로 인근 비대상 지역 어르신의 생활만족도(61.1점)와 비교해 볼 때 10.4점이나 높고, 사업이 지속되면서 참여자의 변화의지, 협동심, 자부심, 소속감, 친밀도 등이 향상되어 지역사회에 활력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향후계획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한 2011년도 추진계획은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 활동 프로그램 보급과 마을 내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또 참여자의 자질개발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핵심 영역인 학습·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지역 노인의 맞춤 건강 생활제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 내 노인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공동체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2절 교육여건 개선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사무관 송선진

▣ 시행배경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학년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96학년도 도입 시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선발 가능하였으나, '97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의 3%, 2006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4%로 확대하였으며, 학생선발 여부 및 자격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졸업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표 5-1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 연 도 | 대 학 수 | 모 집 인 원 | 선 발 인 원 |
|---------|-------|---------|---------|
| 2007학년도 | 193개교 | 13,303명 | 11,857명 |
| 2008학년도 | 186개교 | 13,270명 | 11,363명 |
| 2009학년도 | 190개교 | 12,580명 | 10,859명 |
| 2010학년도 | 192개교 | 12,793명 | 11,449명 |
| 2011학년도 | 192개교 | 12,839명 | 11,625명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 향후계획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 학생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농산어촌의 학령인구, 특히 우수한 학생의 유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농어촌특별전형이 실질적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전병순

▣ 시행배경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사업은 UR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자금 용자지원 사업은 '94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용자를 위해 정부는 매년 용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학자금은 등록금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용자하고 용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 후부터(2010년부터 거치기간 연장 1년→2년) 1학기 분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용자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용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직전학기 성적

을 반영하여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2010년도에는 정부가 505억원을 출연하여 31,093명을 대상으로 1,012억원(상환금 재융자액 포함)을 융자 지원하였다.

〈표 5-1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연 도 | 출 연 금 | 융 자 현 황 | |
|------|--------|---------|--------------|
| | | 인 원 수 | 금 액(재융자액 포함) |
| 1994 | 8,000 | 1,724 | 1,712 |
| 1995 | 22,000 | 19,177 | 19,089 |
| 1996 | 20,000 | 19,301 | 19,252 |
| 1997 | 12,400 | 19,936 | 19,849 |
| 1998 | 15,100 | 19,563 | 19,396 |
| 1999 | 17,300 | 20,123 | 19,579 |
| 2000 | 30,550 | 20,650 | 20,476 |
| 2001 | 18,000 | 18,017 | 25,023 |
| 2002 | 15,000 | 15,911 | 23,764 |
| 2003 | 4,000 | 19,649 | 36,698 |
| 2004 | 2,100 | 26,424 | 60,652 |
| 2005 | 12,733 | 25,206 | 63,702 |
| 2006 | 48,288 | 24,964 | 67,664 |
| 2007 | 44,097 | 26,333 | 76,942 |
| 2008 | 41,260 | 26,721 | 83,843 |
| 2009 | 47,500 | 28,962 | 92,916 |
| 2010 | 50,521 | 31,093 | 101,216 |

▣ 향후계획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업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학자금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수혜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진흥팀 사무관 이성덕

▣ 시행배경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농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농림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서 2004년까지는 농어촌특별회계,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포괄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총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억원까지 지원된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07개관에 83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19개관 건립에 146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지역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 서비스,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들의 문화향수권 및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전국 읍면 지역에 261개관의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5-13〉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 연도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지원액 | 45 | 20 | 20 | 20 | 35 | 104 | 99 | 99 | 56 | 97 | 114 | 146 |
| 도서관수 | 9 | 4 | 4 | 4 | 7 | 13 | 17 | 13 | 11 | 14 | 17 | 19 |

▣ 향후계획

2011년에는 15개관 건립에 1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1.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전병순

▣ 시행배경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 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표 5-1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 천세대, 억원)

| 구 분 \ 연 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국고 지원율 | 8 | 18 | 28 | 28 | 28 | 28 | 28 |
| 월평균 지원세대 | 606 | 603 | 521 | 504 | 484 | 457 | 435 |
| 지원예산 (전년대비 증감) | 340 | 666 (95.8% ↑) | 1,339 (68.4% ↑) | 1,431 (6.9% ↑) | 1,559 (8.9% ↑) | 1,559 (-) | 1,626 (4.3%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 향후계획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소득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배제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차등 지원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사무관 주수영

▣ 시행배경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령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 및 사망률, 교통사고 및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는 매우 높는데 반해 민간의료기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의 대부분은 공공보건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은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있고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만성질환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지원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675억원을 확보하여 226개소, 2009년에는 625억원으로 196개소, 2010년에는 625억원으로 217개소의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율이 57.5%('10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표 5-15〉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율 (1994~2010년)

| 구 분 | 대상기관 수(개소) | 지원현황(개소) | 개선율(%) |
|-----------|------------|----------|--------|
| 보 건 소 | 149 | 118 | 79,2 |
| 보 건 지 소 | 1,252 | 906 | 72,4 |
| 보 건 진 료 소 | 1,876 | 859 | 45,8 |
| 전 체 | 3,277 | 1,883 | 57,5 |

주: 신축(이전신축) 지원 받은 경우만 포함

▣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농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미개선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기울일 것이다.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주수영

▣ 시행배경

의료시설 및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도서, 오·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균점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리' 단위에 본격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1,912여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노인인구의 증가, 다문화 가정,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 공중보건 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박종익

▣ 시행배경

공중보건 의사제도는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취급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무의촌지역 해소와 국민의 의료균형을 통한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공중보건 의사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중보건 의사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주로 배치되어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의 1차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0년 현재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는 총 5,179명(의과 3,363명, 치과 763명, 한의과 1,053명)으로,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3,643명(70.3%), 국공립병원에 512명(9.8%)이 근무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진료 및 응급처치뿐 아니라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표 5-16〉 2010년도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인력 현황

| 구 분 | 2010년 | | | |
|---------------|-------|-----|-----|-----|
| | 합 계 | 의 과 | 치 과 | 한의과 |
| 합 계 | 1,500 | 966 | 204 | 330 |
| 보건소 | 490 | 253 | 99 | 138 |
| 보건지소 | 552 | 300 | 86 | 166 |
| 병원선 | 12 | 5 | 4 | 3 |
| 취약지방원 | 50 | 49 | 0 | 1 |
| 국·공립병원 | 133 | 124 | 0 | 9 |
| 정부지원 민간병원 | 6 | 5 | 1 | 0 |
| 이동진료반 | 3 | 2 | 0 | 1 |
| 복지시설 | 17 | 15 | 0 | 2 |
| 교정시설 등 | 46 | 36 | 10 | 0 |
| 보건단체 | 20 | 20 | 0 | 0 |
| 응급환자정보센터 | 18 | 18 | 0 | 0 |
| 응급의료센터 및 지정병원 | 90 | 90 | 0 | 0 |
| 국가보건기관 | 63 | 49 | 4 | 10 |

▣ 향후계획

향후 지속적인 농어촌지역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취약성 및 보건의료 수요 분석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농어업인 연금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1. 농어업인 연금 지원

|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전병순

▣ 시행배경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연금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2010년 현재 월평균 230천명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제고하였다.

〈표 5-1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 구 분 | 연 도 | 1995.7~ 2002.12 | 2003.1~ 2004.6 | 2004.7~ 2005.12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기 준 등 급 (기준소득월액) | | 최저등급의 1/3 | 최저등급의 1/2 | 12등급 (440천원) | 13등급 (480천원) | 14등급 (520천원) | 620천원 | 730천원 | 790천원 |
| 지 원 금 액 (월/원) | | 2,200~ 4,400 | 4,400~ 7,700 | 8,800~ 19,800 | 9,900~ 21,600 | 9,900~ 23,400 | 9,900~ 27,900 | 9,900~ 32,850 | 9,900~ 35,550 |

주 : 1995. 7월부터 2005.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5-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연 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지원액 | 221 | 293 | 271 | 399 | 502 | 605 | 673 | 731 | 793 | 888 | 940 |

▣ 향후계획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기여도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협업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지원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어촌사회과 주무관 홍경희

▣ 시행배경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층의 농어업인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업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이 도입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설 미이용(자가 보육)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의 취학 전 자녀 41천명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였다. 시설이용 아동 22천명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의 경우는 19천명을 대상으로 정부 보육료 단가의 35%를 지원하였다.

〈표 5-1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천명, %)

| 구 분 \ 연 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지원액(국비) | 146 | 192 | 316 | 430 | 494 | 419 | 316 |
| 지원인원 | 27 | 30 | 56 | 57 | 66 | 53 | 41 |
| · 시설 | | | 33 | 35 | 40 | 29 | 22 |
| · 시설 미이용 | | | 23 | 22 | 26 | 24 | 19 |
| 지원율 | | | | | | | |
| · 시설 | 50 | 50 | 50 | 70 | 70 | 70 | 70 |
| · 시설 미이용 | | | 25 | 35 | 35 | 35 | 35 |

주 : 지원액은 국고(50%)기준이며, 지방비 부담도 50%임

▣ 향후계획

농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10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함으로써 조건을 완화하였다. 2010년도에는 13천 농가에 55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가사도우미는 고령 가구, 다문화,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가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 10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20천 농가에 11억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표 5-20〉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단위 : 천호, 백만원)

| 연 도 | 구 분 | 계 | | 영농도우미 | | 가사도우미 | |
|------|-----|-------|-------|-------|-------|-------|-------|
| | | 지원농가수 | 지원금액 | 지원농가수 | 지원금액 | 지원농가수 | 지원금액 |
| 2008 | | 28 | 5,792 | 13 | 4,732 | 16 | 1,060 |
| 2009 | | 31 | 5,992 | 12 | 4,732 | 19 | 1,260 |
| 2010 | | 33 | 6,520 | 13 | 5,460 | 20 | 1,060 |

▣ 향후계획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일수 증가, 대상 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경로당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10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11년 12월 일 인쇄

2011년 12월 일 발행

발 행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 소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 화 · (02)500-1709

디자인 및 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